

한국사학우회보

2014.3. 7호

학우회보

2014.3. 7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우회

발간사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학교는 사람으로 넘쳐나고
여전히 물러가지 않은 추위는 우리를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2014년이 밝은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 새 3월이고,
정신을 차려보면 무더위가 또 우리를 귀찮게 할 것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과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빨리, 강하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아마도 조급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데에 쫓기는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학문이라는 긴 과정 속에 나를 밀어 넣고
그것을 마치 언젠가는 끝마칠 수 있는 숙제처럼
하루하루 조바심을 내면서 스스로를 쫓고 또 쫓기며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학원생의 시간들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는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공부하는 역사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축적’

오는 봄에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시간과 일상 속에서 쌓여나가기길 기원합니다.
살은 제외입니다.

곧 온통 길거리에서는
봄바람 휘날리며 꽃송이가 골목길 어귀에서 피어나겠지요.
지겹지만 여전히 괜찮은,
그런 봄이 오고 있습니다.

임기가 끝난 회장 김 호준 드림.

발간사	2
목 차	5
특집 – 나의 학위논문을 말한다	
강유현, 「이렇게 썼다」	9
美國을 가다	
이화정, 「UCLA & Yonsei Graduate Workshop의 경험」	20
이준희, 「奈良? NARA! 」 (요약문, 토론문)	26
김미승, 「COLGATE UNIVERSITY, 입학과 함께 돌아본 시간 그리고 시작」	35
한국사학우회 제5회 심포지엄	
최민규, 「남곤의 부정적 봉당론과 정치활동」	42
정다혜, 「1960~1970년대 초 주택정책과 아파트」	61
답사후기	
키타자와 아이, 「충주 학우회 답사기」	80
박윤정, 「2014년도 겨울 근대사 묘지 순례 답사」	83
보고서	
고태우, 「일제시기 연구를 위한 자료 접근」	88
김태홍, 「18세기 조선의 ‘기술정보’ 수집·재생산과 漂流人間情」	104
정예지, 「김옥균의 생애와 사상의 흐름」	118
각 분과별 동정	132
학우회 회칙	136
한국사 학우회 운영회원 명부	142
한국사 학우회 운영위원 명부	143
편집후기	144

특집 :

나의 학위논문들 말한다

이렇게 썼다.

강유현

졸업자 신분으로 이런 글을 쓰게 되었다는 점이 감개무량하다. 그리고 5회 학우회보에 쓴 에세이의 연작 같기도 하다. 그 에세이에서는 꽤 투덜투덜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글은 시간 순으로 짜여 있지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논문을 쓰는 과정과 절차,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했던 자료와 그의 이용. 다른 하나는 논문을 쓰면서 겪었던 대학원에서의 생활과 거기서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감정들이다. 아마 이 글을 읽을 분들은 나를 아는 분 보다는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듯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한번 써 보려 한다. 아마 내 생각과 감정들, 그리고 방법들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이 대학원 생활의 미리보기, 혹은 다시보기로서 기능할 수 있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알던 분들과는 다시금 거리감을 좁히고, 혹은 표현방식에 의해 오해가 있었다면 풀 수 있는 글이 되었으면 한다.

1. 환경 및 조건

먼저 내가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을 때와, 진학한 후의 주위 여건과 경제적 상황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나는 가톨릭대 국사학과에 2006년도에 입학해 학부 졸업논문을 쓰고 2010년도에 졸업했다. 한 번도 휴학하지 않았고, 졸업 직후 바로 대학원으로 진학했다. 전공으로서 역사를 공부하고 싶었고 직업으로서 박물관에서 일하고 싶었다. 그래서 학부의 학과를 선택할 때나, 혹은 대학원 진학에 있어 어떤 고민도 하지 않았다. 취업과 진학의 갈림길에서 고민할 법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무모했던 것 같다. 대학원에서 뭘 하는지, 어떤 생활을 하는지도 별로 생각해보지도, 알아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입학해서 늘 선배들이 묻는 “왜 대학원에 왔어요?” 혹은

“왜 역사를 공부해요?” 라는 질문에 성실한 답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집안에서는 내가 공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리 큰 반대는 없었다. 아버지는 특히 내가 공부를 더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면 유학도 보내주실 생각이 있으셨다. 어머니는 내가 진학하는 것을 탐탁찮게 여기셨지만,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기 위해서 학위가 필요하다는 설득에 적당히 넘어가 주셨다. 대신 여기서 조건이 붙었다. 학비는 지원해 주되 장학금이 나오면 학비에 보태며, 용돈은 전적으로 내가 벌어서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용돈에 대한 조건이 붙은 이유는 학부를 졸업해 바로 취업한 내 친구들 내지 동기들이 있는 만큼, 나도 그에 못지 않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학부 학비 뿐 아니라 대학원 학비까지 내 주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 모든 조건에 동의했고, 조건이 달린 이유 역시도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학자금 대출을 해서 학교를 다닌 내 친구들에 비하면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이미 충분한 교육을 제공해 주셨다. 나는 취업한 내 친구들처럼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지 못하는 동시에 대학원 등록금까지 보탬 받는 입장이었다. 그 건 늘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부분이었다. 나는 대학원 생활 내내 과외나 학원 강사 일을 해서 용돈을 벌고 조교 장학금은 등록금에 보탬다. 육체적으로 힘들긴 했지만 한 가지에 매달리는 것보다 정신적인 부담감이 덜어지는 느낌에 위안을 얻기도 했다.

내가 가진 취업에 대한 생각은 확고했다. 그리고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려면 석사학위가 필요했고, 석사학위는 내게 있어 목적이 아닌 수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쩐지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쉬쉬하는 것 같은 연구실의 분위기를 의아하게 생각했었다. 그리고 내가 과외 및 학원 강사 일을 병행하면서 대학원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 역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다. 내가 분위기를 읽는데 서툰 것도 있었고, 아직 학부 생활에 젖어 있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지내면 될 거라고 멋대로 생각했었다.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공부만 하고, 보고 싶은 책만 읽었다. 이미 대학원에 들어올 때부터 조선후기 도시문화사를 공부하겠다고 정해놓고 있었다. 물론 공부에 있어 편식은 나쁘지만, 처음부터 주제를 정했기 때문에 이후에 논문 주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리고 편한 마음으로 매 학기 여행을 즐기치게 다녔다(이건 잘 한 일이었던 것 같다).

당연히 선배들은 나의 생활방식과 공부 방식에 대해 걱정했다. 내가 대학원에 들어왔을 때 나는 만 스물 두 살이었다. 내 친구들은 대체로 학부생이거나, 혹은

취업 준비생이었다. 내가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과 크게 괴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계속 학부생처럼 지냈다. 대학원생으로서의 자각이 없었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수업 준비는 논문 한 편을 읽고 쪽글을 쓰는 것이 다였고, 발제도 그저 맡은 것만 꾸역꾸역 했다. 그나마 좀 관심이 있는 주제의 발제는 그래도 열심히 했던 것 같기는 하다. 이를테면 1학기 때 근대사 수업의 기말과제로 제출했던 ‘공창제’는 계속 발전시켜 ver. 3까지 만들어 3학기 때 일제시기 수업의 기말과제로 제출하기도 했다.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쓴 발제문이나 보고서를 제외하면, 수업학기는 혼나고 깨지는 일의 연속이었다. 나름대로 학부생 때는 스스로 공부를 잘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자신감은 매일 바닥을 찍고 내려가 땅을 파고 있었다. 스스로 논문을 잘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웠다. 나는 원래 좀 낙천적이고 무심한 성격이다. 그런 주제에 고집도 센 편이라서 발전이 더뎠던 것 같다.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거지만,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자세는 잘못에 대해 변명하지 않고 비판을 수용하는 태도이다. 한편, 비판을 할 때에도 상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성과물을 비판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그리고 상대가 자신에 대한 공격이 아닌 글에 대한 비판이라고 받아들여야 해야 상대가 그 비판을 영양가 있는 것이라 여기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조선후기 도시문화사로 시작했던 논문 주제는 점차 좁혀지고 있었다. 그리고 4학기 때부터 슬슬 논문을 쓰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나마 수업학기일 때는 자주 나오던 학교에는 거의 나오지 않기 시작했다. 난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하기보다 부스럭거리면서 공부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보다 외출관까지 올라가는 일이 고역이었다. 또 좁은 곳에서 여러 사람과 복닥거리는데 잘 견디지 못하는 외동이 특유의(나만 그런건지도 모르지만) 성격 때문에 연구실에서는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았다. 이전까지는 여러 사람과 한 공간에서 긴밀하게 지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사람 관계에서의 처신을 잘 못하고 오지랖도 떨고 폐도 끼치게 되었다. 그리고 스스로의 처세에 대한 불신이 강해지게 되면서, 결국 나 스스로와 연구실 사람들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 연구실을 나와 방랑하기 시작했다. 원래 돌아다니면서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편이었고, 해이해지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다. 물론 선후배들과의 학담을 나눌 수 없었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의 세계에 침잠하게 되고 스스로의 오류를 잡아낼 수 없었던 점은 연구실 밖 생활의 큰 단점이었다. 나의 강박함과 사회성 부족을 통감하는 바다.

2. 논문 주제 선정과 연구 방향 설정

논문주제는 대학원을 들어오면서부터 정해놓았기 때문에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 그러나 도시문화사라는 넓은 범위로는 논문을 진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시에서 벌어진 무언가, 하나를 잡을 필요가 있었다. 범위를 좁히는 작업을 4학기 때부터 진행했다. 일단 도시사라는 이름을 붙인 여러 연구들을 읽을 필요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고통환 선생과 손정목 선생의 저작들을 읽었고, 그들의 참고문헌으로 달린 자료들과 논문을 찾아보았다. 무엇을 보아야 할지 잘 모를 때는 어떤 주제의 대표적 저작에 달려 있는 참고문헌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다.

그 다음에는 엑셀로 내가 볼 사료들과 논문의 저자, 발표년도, 제목, 수록된 서적명, 목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 논문을 보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점이나 의문점을 정리했다. 그런데 이 때 내가 쓰던 노트북은 학부 2학년 때부터 쓰던 것이었다. 5년째 쓰는 노트북의 노쇠한 몸으로는 엑셀을 돌리기가 버거웠다. 그래서 엑셀에 정리하는 것을 포기하고 차라리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노트에다가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A4반 만한 노트에다가 발표년도/주제 순으로 논문들의 개요를 정리했다. 아래의 개요 정리방법은 학부 때 유승원 선생님의 연습 강의에서 배운 방법인데, 한 번만 정리해 놓으면 그 논문을 다시 들춰보지 않아도 되어서 요긴하다. 그리고 추후 논문을 쓸 때도 내 논문의 개요를 짜는 방식으로 이용하면 논리력을 잃지 않을 수 있다(아마도...).

논문 주제

주장

- 주장의 근거 1
 - 근거의 근거 1
 - 근거의 근거 2
- 주장의 근거 2

...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다. 그래도 모든 참고문헌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 노트 한 권에 들고 다니면 무거운 논문 더미를 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어서 좋다. 그리고 연구사 정리도 이걸로 해

결되니 간편하다. 연구사 정리를 할 때는 하일식 선생님이 정리해 두신 연구사 정리방법에 관한 글을 많이 참고했다. 연구사 정리를 일단 해 두고 나면 내가 쓰고자 하는 논문의 방향이 어느 계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혹은 기존 연구 성과와 나의 논문이 가지는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참고하는 논문들은 논문을 쓰는 마지막 순간까지 봐야 했기 때문에 이 작업은 논문 집필을 어느 정도 끝마치게 되는 예심 전까지 계속해야 했다. 처음에 내가 연구사정리를 하기 위해 뽑은 키워드는 ‘조선후기 도시’, ‘서울’, ‘도시문화’였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큼직한 도시문화사의 연구 성과를 파 들어가자 도시문화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업’, ‘소비’라는 키워드가 추가되었다. 곧 ‘상업’과 ‘소비’에서 ‘생산’, ‘유통’, ‘무역’, ‘사치’와 같은 더 작은 키워드로 좁혀 들어가게 되었고,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 역시 점점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생산과 소비의 능동자였던 ‘중인’을 마침내 주목하게 되었고, 그들의 소비 경향을 파악하다가 결국 ‘서화’의 소비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장장 5학기에서부터 6학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진행했다.

구체적 키워드가 나온 시점에서, 내가 이용해야 할 사료는 일단 이미 기존 연구에서 이용했던 사료들을 우선적으로 참고하였고, 뽑아 놓은 키워드를 고전번역원DB(<http://db.itkc.or.kr/>)와 규장각DB(<http://e-kyujanggak.snu.ac.kr/>), 한국학 자료포털(<http://www.kostma.net/>)을 이용해 검색했다. 또 중인층들의 인적 관계망을 파악하는 일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을 이용해 잡과방목, 부계 관직 제수 여부, 혼인관계망 등을 추적하였다. 그리고 주요 인물들을 다시금 휘보에서 검색하여 영인된 문집이 있는지 역시 수시로 확인하였다. 얻은 사료는 한글 파일에다가 쪽 입력을 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위에서 만들어 놓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논문에 붙여 넣었다. 서적에 있는 한문사료를 미리 입력해 놓는 일이 녹록치는 않았는데, 일단 한번 해 놓으면 이 역시도 필요할 때마다 바로 인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쓸 때 사고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

키워드를 뽑고 관련 사료를 정리하는 이 모든 일은 논문 집필과 동시에 이루어진 일이다. 모든 것을 다 해놓고 논문을 쓰는 일은 어찌면 글을 쓰는 일을 더 주저하게 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일단 스스로 생각해낸 줄거리를 수시로 적어보고, 그 줄거리의 타당성을 사료 검색과 기존 연구 성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글을 쓰는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 이런 방법

은 내게는 적합하기는 했으나, 한편으로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 줄 거리에 남의 연구를 끼워 맞추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옳은 방법이라고는 하기 어려울 것 같다.

결국 연역법이 좋은지, 귀납법이 좋은지는 자신의 성향에 따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좋으나, 어떤 경우여라도 글을 쓰는 일을 용감하게 시작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어차피 논문은 쓰다가 여러 번 엮어지고, 처음 쓴 글을 그대로 쓰게 되는 경우는 결코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번 엮으면 엮을수록 글을 쓰는 것에 대해 더 겁을 먹지 않게 되고, 내가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가 확실시되며, 여러 번 써 본 이야기인 만큼 더욱 자연스럽게 쉽게 쓸 수 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자괴감이 들고, 다시 쓰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스트레스는 나에게만 한정된 시련이 아니라 내 옆에서 글을 쓰고 있는 다른 학우들에게도 공평하게 주어진다. 다시 한 번 강경한 어투로 이야기 하게 되어 부끄럽지만 스트레스는 결국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고, 내 옆의 누군가보다 내가 더 힘들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 시점부터 스스로의 근간을 갉아먹는 흰개미를 마음에 키우게 된다.

3. 논문 집필 진행과 심사과정

주제선정 및 자료수집과 동시에 논문을 썼는데, 글 자체는 4학기 때 수업 발제문으로 처음 쓰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조선후기의 경제발달 속에 발달한 소비문화와 그 소비문화가 견인한 생산체계가 있었음을 밝히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 우선 사치품을 조망하였다. 그러나 단순한 사치품의 소비만으로는 생산의 증대까지 논지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이 지도교수님의 의견이었다. 결국 실제적인 현상을 찾아내지 못하면 쓸 수 없는 주제였다. 도시문화와 소비의 관계는 내 속에서 불가분의 관계였고, 조선후기 도시문화를 설명해내기 위해서는 소비품 자체를 잘 골라야만 했다. 이미 비단이나 가채 등은 많이 다루어졌던 소재였고, 이런 여성들의 소비품은 소비의 주체인 중인층의 심리를 드러내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그러던 차에 4학기 때 한국학 협동과정의 조선후기 문화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국문학과 선생님의 지도로 이루어지던 수업이었기 때문에 조선후기 문학 속에 나타나는 군상들의 욕망이 자주 언급되었다. 이 수업의 발제문을 위해 자료를 조사하던 중 나는 드디어 중인층의 시사와 문학, 그리고 중인층과 사대부층의 관

계 속에 매개물로 자리하던 서화를 발견하게 되었다.

어쩐지 논문 초록을 다시 쓰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서화는 조선후기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상품화되기 시작하였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서화는 단순한 수기의 목적만을 위해 일부 계층에만 한정되어 생산되고 소비되었던 것이 아니라 판매의 목적을 가지고 전문 인력에 의해 그려져 넓은 계층에게 판매되었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 비로소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쓰게 된 것은 영어에 매달렸던 4·5학기가 지나고 종합시험을 보기 위해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던 때였다. 종합시험은 논문주제가 어느 정도 명확해진 이후 지도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응시 가부가 결정된다. 시험 문제는 자신의 논문주제의 인접주제에 대해 묻거나, 혹은 인접시대에 적용시킨 주제를 물어보는 식이다.

지도교수님이 시험을 보라고 허락해 주시면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시험응시양식을 받아 도장을 받고, 과 사무실에 제출한다. 그리고 적어도 시험일 한 주 전에 지도교수님이 정해주는 선생님들께 찾아뵙고 논문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시험공부의 팁을 얻어오면 된다. 시험 족보는 보통 대를 이어 압축 파일로 전해진다. 나에게 부여되었던 시험문제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여말선초 중인층의 존재양태/개화기 중인층의 존재양태와 사상/조선후기 중인층의 사회적 역할과 서화 장악에 관한 것이었던 것 같다. 문제에 대해 대학 시험지 각 1장 정도의 답안을 쓰게 되고, 시험 시간은 3~5시간 정도가 부여된다. 모두 시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익숙한 장소인 627-1에 해당학기 원생들이 웅기종기 모여 시험을 본다. 그리고 잇을 때쯤 되면 시험 통과 여부를 존경하옵는 조교장님께 통보받게 된다.

이제 공개발표 전까지 논문의 본격적인 집필과 지도교수님과의 즐거운 면담이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논문의 기초적 토대가 상당 부분 갖추어진다. 이 때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은 내가 쓰고 있는 논문의 가치, 내 논문 주제의 역사적 의의, 그리고 나의 역사상이다. 논문 목차는 이미 종합시험 전에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계속 얹어지고는 한다. 이 때 스스로의 논지에 대해 흔들어보고, 뒤집어보고 하는 과정 속에 슬한 상처를 받게 된다. 내가 과연 논문을 쓸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된다. 그래도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어가는 논문에 대해 뿌듯함도 느끼는 시간이다.

다만, 나는 이 기간 안에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여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그러나 내가 괴로운 것과 논문을 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괴로워하면서 시간을 보낼수록 논문도 점점 늦어질 뿐이었고, 그건 내게 있어 더 괴로운

일이었다. 어쨌든 공개발표는 다가왔고, 나는 쓰라린 평을 들으며 마흔 두 장의 논문 초고를 선생님들과 학우들에게 내보였다. 나름대로 오랜 기간 준비한 논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큰 시간이었다. 공개발표 때 나의 논문은 스토리는 만들어졌으나 급한 마음에 스토리를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로 끼워 맞추었다며, 자존심이 없는 글이라는 아픈 이야기를 들었다.

공개발표부터 예심까지는 꼭 한 학기가 걸렸다. 바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이유는 나의 심정적인 괴로움이었다. 논문을 쓴다고 편찮으신 아버지를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부를 하기를 바라셨던 아버지의 마음. 더군다나 공부와 일을 병행하느라 나는 아버지의 병상을 거의 지킬 수가 없었다. 일을 하다가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다. 그깟 일이 뭐라고. 아직까지도 이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파오고 눈물이 난다. 자학이 극에 달했다. 공개발표를 전후로 하여 오랫동안 사귀어 오던 남자친구와도 헤어졌다. 내가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웅졸하게 껌데기 속에 들어 있는 소라게처럼 웅크렸다. 장례식 때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들의 이름을 읊조리며 미워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었다. 조금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꽉 막혀버린 머리를 가지고 뭐가 써 낸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 속에서 지도교수를 미워하고, 나 스스로를 미워하고, 주위 상황을 비관하기도 했다. 무언가 달라지지 않았다. 모든 괴로움은 내가 초래하고 끝내는 것이었다.

어쨌든 다행이었던 것은 그나마 독하게 스스로를 밀어붙이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눈 옆을 가린 말처럼 나아갔다는 점이었다. 미움의 유일한 장점은 목표의식을 강하게 한다는 것이다. 누구도 미워할 일이 아닌데 공연히 미움을 마음에 품고 나아갔던 예심은 공개발표 때에 비하면 너무도 안온하게 느껴졌다. 이번 학기에도 예심을 받지 못하면 저는 공부를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라고 선생님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야기했다. 선생님은 개인 사정은 내게 말할 필요가 없어. 나에게서 논문으로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하셨다. 솔직히 이야기하자. 나는 이를 갈았다. 대학원의 인간관계니 뭐니 아무 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엄마가 가지고 계신 오피스텔 하나를 억지로 빼서 한 달 동안 칩거했다. 인터넷 선도 연결이 안 되어 있었고, 있는 것이라곤 논문에 필요한 책들과 드디어 새로 산 노트북 한 대였다. 글을 쓰면서 많이 울었다.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겠다는 막연한 느낌에 맥이 풀리는데, 어쨌든 뭐가 써야만 했다. 그렇게 준비했고, 기한 내에 글을 어쨌든 썼다. 발제문이든 논문이든 기한 엄수는 나의 자량이

었다.(이번 원고는 내 자량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예심 한 주 전에 스프링 제본을 한 논문을 지도교수님과 부심 선생님들께 돌렸다. 예심 전까지의 한 주는 낫을 놓고 지냈다. 그리고 또 일을 하며 돈을 벌었다.

예심은 15분 만에 끝났다. 공개발표와 예심 원고가 달랐던 점은 공개발표 때 나왔던 지적을 토대로 좀 더 세밀한 주장과 근거들을 재배열했다는 부분이겠다. 그리고 이전에 시도하지 못했던 직접적이고 세밀한 사료분석이 이루어져야 선생님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논문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사료분석에 대해 끝까지 겁을 내며 물러섰기 때문에 예심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미술사적인 연구 방법, 즉 서화의 표피만을 분석해내는 방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내 논문이 사학과 논문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화의 창작 배경과 서화를 유기적으로 엮어내야만 했다. 참고문헌이 미술사 논문으로 점철되어 있었던 것 역시 이런 약점을 낳는 데 일조했다. 어쨌든 그래도 예심장인 627-1의 문을 빠져나오며 나는 웃고 있었다. 본심까지는 한 달 반이 남아 있었다.

예심이 끝나면 예심 때 나온 지적사항을 표로 정리해서 지도교수님과의 면담을 가진다. 주심, 부심 선생님들이 말씀해주신 내용과, 지적사항에 대해 내가 수정하거나 혹은 발전시켜야 할 점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는 내가 될 잘하고 못하는지에 대해 알게 된다. 공개발표에서 예심 사이에는 논문을 거의 새로 쓰다시피 했었다면 예심과 본심 사이에는 어느 정도 포기과 해탈이 엉겨 붙어 있기 때문에 큰 틀 차원에서는 수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좀 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 볼만한 마음의 여유가 깃들어 용감한 문장을 써 보기도 하고, 혹은 내 한계가 이 정도다... 하는 이야기를 맺음말 즈음에 써 보기도 하는 시기였다. 그렇게 한 달을 헤이한 마음으로 어영부영 보내다 보면 본심은 너무나도 금방 눈앞에 들이닥친다.

본심은 예심보다 긴장이 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끼리 논의를 하시기 위해 논문심사 대상자를 문 밖에 5분 정도 쫓아 내 보내는 절차가 있어서 더욱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벤트이다.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내 스스로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처도 적지만 자신의 한계를 여실히 느끼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입맛이 쓴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본심도 끝나고 나면 이제 정말 맥이 탁 풀린다. 본심이 끝난 직후 정장을 차려입고 멍하니 술을 마시다 보면 당장 뭘 해야 할지 모르게 될 것 같지만 사실 이 때부터가 다시 바쁘게 되는 시기이다. 왜냐하면 본심 때 나온 내용을 다시 한 번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수정해야 하

고, 국문초록 및 영문초록을 만들어 기한에 맞추어 제본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정말 금방 금방 잘도 지나간다.

본심 이후 내 논문을 다시 읽어보자 헛웃음이 났다. 아이를 낳았는데 콰지모도 같은 무엇인가가 나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조물주는 나인데 조물주가 불민하였구나. 논문 제본 전에 오탈자를 후배들에게 맡겨 잡아달라고 하는데, 후배들이 빨간 글씨로 달아주는 오탈자를 보면 또 헛웃음이 난다. 영문 초록은 한국어 A4 2페이지에 75,000원을 주고 친구에게 맡겼다. 이 정도가 시세였던 것 같다. 장당 35,000원~40,000원 정도. 스스로 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럴 만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다. 그리고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맞춰 논문을 맞추는 일이 또 일이고, 그 다음엔 선생님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도장을 받아야 한다. 나는 이 때 이미 취업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도장 받으러 다니는 일이 정말 시간상 힘들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드디어 제본을 맡긴다. 나는 하드커버 40부에 소프트커버 50부를 학위사에 맡겼었는데, 총 비용이 350,000원 가량 들었다.

하드커버로 된 내 논문을 손에 들고 본 순간이 기억난다. 검은색 표지에 금색 글씨로 "조선후기 중인층의 서화완상문화의 발전과 그 성격"이라고 쓰인 그 모습이 굉장히 낯설었다. 제목은 예심 때 정해졌었는데, 한 학기 내내 외우지도 못했던 제목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인쇄되어 있으니 더욱 낯설었다. 선배들이 말했던 것만큼은 감격스럽지도, 어여빠 보이지도 않기는 했다. 바쁜 일정이 폭풍처럼 지나갔기 때문일까. 어쨌든 끝났다는 생각이 더욱 지배적이었다. 90부를 모두 나누어 주고 나니 이젠 정말 멀리 온 느낌이다.

이 글을 어떻게 마무리해야할지 잘 모르겠다. 이 모든 과정 속에는 선배들, 동기인 봉규 오빠와 일주, 후배들의 도움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여기에 쓰지 않았다고 그 모든 도움들을 잊거나, 혹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의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도 했고, 즐거움이 되기도 했던 이 모든 애증 같은 관계들이 한 발짝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은 내가 (아직 공식적으로 졸업한 지 열흘 밖에 안 된 이 시점이지만) 그 곳에서 나왔다는 것을 꽤 또렷이 자각하고 있는 것 같다. 다 지나니 별 것 아니라는 말은 할 수가 없다. 나의 시간이 흘러 나의 아픔이 열어졌다고 하여 현재 괴로운 사람의 아픔이 절대적으로 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시간은 흘렀고, 지금 나는 전혀 아프지 않다. 칭얼거리고 싶지도 않다. 그렇지만 쓰는 기간 내내 아팠던 기억은 아직 또렷하다. 그렇게 썼다. 논문.

미국을 가다

UCLA & Yonsei Graduate Workshop의 경험, 발표의 방법과 사고의 확장에 대한 생각

이화정

연세대학교 사학과 대학원은 UCLA 한국학연구소와 협약하여 2년에 한 번씩 공동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발표회는 주로 사학과 대학원 한국근대사 전공자들이 UCLA를 방문하여 그곳의 학생들과 서로의 연구주제에 대해 발표,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발표회에는 주로 박사과정 학생들이 참가했고, 내용도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개인에 따라 구상이 완성된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논문의 주제와 논문의 큰 줄거리를 글로 쓰고, 그것을 다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발표를 하는 형식을 따랐다.

연세대학교와 UCLA의 공동발표회를 통해서 느낀 점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관한 것이었다. 발표 방법이 일반 논문을 서술하는 방법과 다르다는 것과 다루고 있는 주제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

첫 번째로 미국 학생들의 발표 방법은 한국의 일반적인 발표 방법과 차이를 보였다. 파워포인트를 발표에 사용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생소한 일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꽤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UCLA 학생들의 발표는 주제와 분야가 매우 다양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의 방식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발표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논문 주제와 발표 내용과의 연관성, 발표를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바-기존의 연구들과의 차이점이었다.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발표시간은 짧으면 20분, 길어도 40분을 넘기 힘들다. 평균적으로는 30분 안에 자신의 논문에 대해 타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논문에서 어떠한 주장을 하고 싶으며 자신의 논문이 기존의 연구와 비교해 어떤 점에서 우수한지를 명료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이 발표의 목적이 된다. 그리고 발표회에서 발표를 듣는 청중의 대부분은 자신의 세부적인 전공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한국학 혹은 한국사를 전공하고 있다고 해도 세부적인 전

공으로 들어가면 서로의 전공에 관해 상세하게 알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는 발표였다. 한국학에 대한 기초지식은 있지만 내 논문에 관한 세부적인 지식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은 청중을 대상으로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보통의 학술대회와는 성격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나 학술대회에서도 내가 공부하는 세부전공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 기본적인 조건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30분의 짧은 발표를 한다면 자신의 논문주제와 연구의 특징이 두드러지도록, 의도하는 바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발표의 방법이 될 것이다. 바탕이 되는 글이 있다면, 글의 세부적인 내용은 사전에 혹은 추후에 발표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 최대 30분의 짧은 발표를 긴 글의 구성순서와 호흡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행한다면 주장하고자 하는 주제가 드러나기 어렵고, 다른 연구들과 차별되는 점이 글의 여기저기로 분산되어 주목을 끌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발표는 그 글 속에서 자신이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을 앞에서 제시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특히 결론을 처음에 제시하지 않으면 청중이 발표 내내 발표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예측하며 들어야하기 때문에 발표에 대한 집중도와 이해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한다. 주장하는 내용을 강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서 두괄식 구성이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발표회를 통해서 미국의 연구는 내 연구가 다른 연구들에 비교해 어떤 점에서 다르고, 그러한 다른 점들 때문에 새로운 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자기의 연구에 대한 자신감과도 관련되는 문제이다. 만일 내가 해온 연구에 자신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연구는 쟁쟁한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어떠한 점에서 낫다”는 주장을 큰 소리를 내어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일정한 목소리를 내는 연구자로서 발을 내딛는다면, 자신의 분야에서만은 기존의 전문가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자신이 그 분야의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결국 그 자신의 연구가 가지는 고유한 특징으로까지 연결된다. 어떠한 연구든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세상에 나올 수는 없다. 또 자신의 연구에서 기존의 쟁쟁한 연구들을 한 번에 뒤집는 엄청난 무언가를 기대하

기보다는 작은 범위에서 시작되어 큰 범위로, 이야기가 확장되어 나가기를 기대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나는 발표의 실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술들을 잘 알지 못한다. 수업 중 발표를 할 때도 발제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발표에는 공을 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발표를 통해 내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므로, 이것은 훈련을 통해 습득해 나가야할 능력이다. 연구의 내용이 핵심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방식이 논문 한 가지였다면 이제는 발표나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 연구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논문 이외의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누군가를 대상으로 주장을 하거나 설명하는 방식, 기술들이 저절로 익혀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양한 발표를 들으면서 나 역시도 수업을 통해 이런 기술들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크게 들었다. 사람은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움직이기 어려운 동물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보고 들으면서 직접적으로 그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는 점이 나에게서 가장 큰 성과가 아니었나 싶다.

예년과 비교해 발표회의 구성에서 특이했던 점은 UCLA와 연세대 외에도 이화여대, 캐나다의 토론토대학, 일본의 동지사대학의 박사과정생들이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발표자가 다루는 시대와 주제의 폭이 더욱 넓어져 다양한 연구를 접할 수 있었다. 청중 역시 다양한 주제를 공부하는 학생 혹은 연구자였으므로 발표에 대한 토론도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마지막 발표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 나타난 국제결혼과 여성의 위치에 대한 것이었는데, 패널의 질문 중 왜 결혼제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여성과 남성의 결혼만을 다루느냐 하는 것이 있었다. 같은 성끼리의 결혼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느냐는 것이 질문의 요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발표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신선하게 느껴졌다. 소수자의 인권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특히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이야기되기 힘든 분위기가기 때문이다. 물론 이 발표는 한국사가 아니라 한국의 대중문화를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국사를 볼 때와는 다른 측면에서 문제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한국사로 범위를 옮겨 보아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느끼기에 한국에서의 한국사연구는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보이기 때문이다. 주류가 되는 정책사나 경제사 이외의 것들에 대한 상대적인 무관심 내지는 차등의식 같은 것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한국사연구의 범위가 다양화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관헌자료 등 공적문서 위주로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했던 한계도 있고, 한국사회 내부의 필요성 때문에 정책사와 경제사에 집중해야 했던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하던 역사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중의 관점에 주목하는 연구가 나타났던 것처럼, 앞으로의 한국사연구는 기존의 역사연구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측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국사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시각이 요구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한국사에서도 다양한 주제와 사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근래의 한국사 연구 중에는 기존에 국문학에서 해오던 작업들을 역사적의 영역으로 끌고 와 해석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도 새로운 연구 범위와 방법이 필요하다는 필요성과 그에 따른 모색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한국사연구는 한국의 한국사연구보다 깊이는 부족하지만 범위가 넓다는 인상이 있다. 큰 틀을 먼저 제시하고 그것에 맞추어 역사를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되는데, 이러한 연구는 세밀한 부분에서 오류가 나타날 우려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밀한 연구에서는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장 좋은 것은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라는 매우 안일한 정리로 결론지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흔히 들어왔고 모두 잘 알고 있는 것 사실로부터도 새로운 문제 의식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역사학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역사학을 연구하는 방법 역시도 기존의 것들로부터 새롭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나로서는 연구방법보다는 연구시각을 미국적인 연구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연구교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방법을 배우는 것은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기존의 연구에서 적용되었던 틀을 가져와서 그것을 그대로 내 분야에 적용하거나 조금 변형해서 적용하는 식으로 마치 수학기공식을 적용하듯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오히려 이보다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이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사고의 틀을 깨는 것이다. 주제를 설정할 때에도, 어떠한 연구방법을 자신의 연구에 적용할 때에도 자신의 경향이나 사고방식이 크게 작용한다. 만약 시야가 협소한 연구자라면 아무리 좋은 주제를 가지고 선진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한다고 해도 새로운 시각에서 나온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 연구가 모두를 설득할만한 명쾌한 결과

를 도출해낸다고 해도, 여태까지 고려되어왔던 주류적인 부분만을 고려한 연구라면 그것이 좋은 연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우리는 역사학뿐만 아니라 인문학 전반에 대해, 학문의 발전은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있었다는 이야기를 한다. 역사학은 특히 식민지국가였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필요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정리된다. 그런 중대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지금, 역사학의 연구에서는 무엇을 문제로 삼을 수 있을까? 아마도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는 중요한 주제 한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최근의 한국은 그렇게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한국사회 자체는 주류라고 뭉뚱그려 말할 수 있는 무언가에 의해 좌우되기 보다는 여러 분야와 세대가 동시다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절충해나가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사도 오래전부터 한국과 다른 지역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연구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연구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낡은 것이 되어가고 있으므로, 연구를 행하는 시각을 조금 더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새로움은 새로운 틀이나 주제 같은 거창한 것은 아니다. 초보적인 단계의, 아직 연구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학생에게 이러한 것들은 막연한 이야기일 뿐이다. 단지 지금까지 학습해온 연구 성과들 속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그래서 궁금했던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아직 학계에 진입하지 못한 학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이야기가 있을 텐데, 대학원의 토론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은 기존의 논의를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역사학계에서 여태까지 이야기되었던 것들을 잘 정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틀 속에 자신을 고정시켜버리면 앞으로의 연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확장시켜나가기 어렵지 않을까? 학계의 주류에 편입되고 싶은 열망에 따라 자신의 사고까지 기존의 방식으로 고정시키고 싶다면 그런 방식이 유효할 수는 있겠지만, 타인의 시각에 자신의 시각을 맞추기 위해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닌 만큼 기존의 것들을 답습하면서 안심하는 경향을 스스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까닭은 내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해서 스스로에게 가장 문제를 느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시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그 분야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을 망설이거나, 혹시 질문을 하고 싶어도 내 질문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고민

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공부가 부족한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학습하는 과정에서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다가 결국 질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혹은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안전한 질문만을 반복하는 사람이 된다면 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에게는 얼마나 슬픈 일인지. 역사학 공부는 어느 선을 넘으면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해나가야 하는 장기적인 공부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해외에서는 한국사가 한국에서처럼 많이 연구될 수 없기 때문에 깊이 있게 연구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질문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일견 가치 없게 느껴지는 질문을 받아도 그 속에서 자신의 연구와 관련해서 쓸모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 많은 경우 상대의 질문이 가치 없게 느껴지는 것은 자신의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한국에서 소수자에 대한 연구라고 할 만한 것이 나오기 어려운 까닭은 예상되는 쓸모 있어 보이는 질문 이외의 것은 고민하지 않고 넘겨버리는 분위기와도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자신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다보면, 그리고 모든 연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다보면 어떠한 의견이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판적인 사고와 유연한 사고는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것과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고, 그 다른 부분에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사고의 다양성은 혼자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책을 통해서이든 토론을 통해서이든 간에. 다른 사람의 생각 속에서 자신에게도 쓸모가 있는 좋은 것을 찾아내는 능력은 공부하는 학생이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다른 나라의 대학원생들과 발표회를 했다는 것 자체로는 눈에 띄는 성과를 얻기 어렵다. 하지만 새로운 경험이 가져다주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 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난다든가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다든가 깨달음을 얻게 된다든가 하는 것이다. 시간에 쫓기고 짧은 글이나마 새로운 글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힘들기도 했지만 내 글에 대한 만족감은 떼어놓고 보면, 이번 발표회는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할지, 공부를 통해 내가 얻고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奈良? NARA?

이준희

단순히 NARA라고 하면 사람들은 여러가지로 이해한다. 대부분은 일본의 NARA(奈良)를 떠올리며 “거기 참 좋지”라고 되받아치곤 한다. 지난 여름 내가 갔던 NARA는 어떤 나라도 일본의 나라도 아닌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NARA(The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였다.

사실 이 곳은 미국 국립문서보관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특히 한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겐 생경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왜 한국사를 공부하는 필자가 미국에 간 것일까? 필자도 처음에 북한사라는 분야를 선택했을 때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야만 북한의 모습을 담은 생생한 자료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945년 이후 미국과 소련에 분할점령된 한반도는 소련과 미국의 두 축이 모든 정보를 장악하는 상황이었고, 그들은 단지 38선을 기준으로 하는 ‘자기영역’에서만 활동하진 않았다. 이러한 측면은 미국이 북한 자료를 방대하게 소유하게 된 이유였다. 또한 소련과 중국에 비해 미국은 자료접근이 용이해 북한사 이외의 다양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NARA를 찾는다.

지난 여름 약 한달 반동안 NARA에 머물면서 있었던 소회에 대해 몇자 적어보고자 한다. 출입하는 절차부터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까지 상당히 사적이면서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출입절차

NARA를 가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워싱턴 시내 NARA 본관(박물관)에서 셔틀을 타는 방법과 자가용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문서보관소는 문서보관용량의 축적으로 인해 메릴랜드주에 새로운 보관소를 건립해 이사한지 벌써 20여년이 되었다. 워싱턴 시내에 있는 문서보관소는 현재 박물관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메릴랜드주는 국내에서도 시골에 속하기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의 시간

간격이 길고 이용하기도 어렵다. 버스는 30분에 한대, 전철역은 자가용으로 10~20분은 가야 있다. 결국 문서보관소에 가기 위해서는 자가용이 가장 편하다.

문서보관소에 도착을 했다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출입에서부터 안전요원의 질문공세가 시작된다. 마치 미국 이민국에서라도 나온 것 처럼 “이 곳에 왜 왔는가?”부터 묻는다. 당연히 자료조사를 위해 왔다고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매번 출입할 때 확인한다. 일단 문서보관소에 들어왔다면 건물로 들어가보자. 건물을 들어가려면 공항의 검색대와 마찬가지로 물건을 검색대에 올리고 몸수색을 당해야?한다. 이것도 매번 똑같다. 그냥 지나치는 법은 없다. 작은 동전까지 검색대 위에 올려 놓아야 하고 벨트를 보여주면서 쇠부치를 확인시켜줘야 한다. 그만큼 철저한 편이다. 몇해 전 문서 도난 사건이 있는 후로는 출입하는 모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졌다고 한다. 대부분 종이 형태로 되어있는 자료는 반출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출입하는 모든 이들의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건물로 들어왔다면 ID CARD를 만들어야 한다. 간단한 교육자료를 숙지하고 사진을 찍고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각종서약과 일련번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약 40분 이상 걸린다. 그들은 뭐든지 천천히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를 외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카드를 만들었다면 자료열람실로 가지고 들어갈 물건에 책이 있다면 허가도장을 받아야 한다. 문서보관서에는 허가 받지 않은 책 또는 모든 종이종류는 반입할 수 없다. 대부분의 자료들이 종이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난의 위험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한다.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기기를 가지고 들어간다. 물론 가방도 안된다. 안전요원의 눈으로 본인의 소지품을 모두 확인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료를 보러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하에 있는 라커에 가방등을 보관하고 자기에 필요한 도구를 챙긴 후 안전요원에게 카드를 보여주고 출입해야한다. 이때에도 덮개가 있는 모든 물품은 열어보여야 하고 필기구도 연필 이외에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불펜 사용은 절대 불가이다. 자료 훼손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자료 열람실에 들어가자. 자료 열람실 출입구에서 마지막 신분확인을 한다. 카드를 직원에게 보여주면 기계에 체크해 출입을 관리한다. 처음 문서보관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 1시간 가량 걸린다. 이후에는 카드 등록과정을 제외한 3가지 검색을 받은 후 들어갈 수 있다.

자료이용

자료는 철저하게 아키비스트(ARCHIVIST)에 의해 보관, 제공되고 있다. 자료 열람을 도와주는 아키비스트와 일정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본인이 필요한 자료는 아키비스트와 상담해 찾아 볼 수 있다. 일정한 서식을 통해 자료를 신청하고 자료는 정해진 시간(하루에 4번)에만 받아볼 수 있다. 받아 본 자료는 일정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하루 최대 2번까지만 자료를 신청할 수 있다. 모든자료는 넘버링이 되어있기 때문에 찾기 쉬울 수도 있지만, 정확한 주제를 가지고 가야 아키비스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키비스트는 한국 도서관의 사서와는 완전히 관념이 다른 존재이다. 그들은 연구자에게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조력자이다. 미국에서 발행된 논문을 보면 서문에 아키비스트에 대한 감사가 항상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아키비스트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연구자를 도와주고 있다. 그들이 연구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지금도 인상적이다.

자료 열람실 내부에는 종이와 연필이 구비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든것이 공짜이다. 연필과 종이는 무한대로 이용 가능하지만 종이를 반출할 때는 반드시 허가도장을 받아야 한다. 허가 도장이 없는 경우 내부자료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음 이용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자료에 대한 복사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스캐너와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이 허가되고 있기 때문에 문서보관소에 방문할 때는 고성능의 카메라와 스캐너를 추천한다. 복사비가 비싸므로 디지털화 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캐너 보다 카메라를 선호하는데 09:00~17:00까지 운영되는 짧은시간 때문에 자료 저장 속도를 위해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한다.

문서보관소의 사람들

필자는 자료조사 차 미국 문서보관소에 갔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왔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이 의문에 대해서는 문서보관소에 있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었다. 그들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문서보관소에 왔었다.

연구자

미국은 전세계를 무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므로 전세계의 사람들이 미국에 와 자국 또는 자신이 공부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고 있다. 필자가 목격한 사람들은 한국, 독일, 일본, 중국등 다양한 국가에서 와 자료조사를 했다. 대부분 팀 단위로 와 약 한 달정도 있다가 간다. 이 사람들은 실새 없이 카메라의 셔터를 눌러댄다. 하루에 작업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았다. 필자는 스캐너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카메라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속도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느렸기 때문에 다음에 방문한다면 반드시 카메라를 가지고 오리라 생각했을 정도였다.

대부분의 외국인 연구자들은 지역사, 각국의 자국사 그리고 전쟁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세계 1, 2차 세계대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각종 포스터부터 시작해 문서라는 것은 모두 복사해 가는 것 같았다. 독일인들의 자료조사는 그들의 과거사 인식과 관련해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결국 알아내지 못했다. 아직도 그들이 무엇을 조사해 갔는지 궁금하다.

그렇다면 한국인 연구자는 어떠했는가? 필자가 문서보관소에 도착했을 때는 학기가 끝나지 않아 그런지 한국 현대사 선생님들은 계시지 않았다. 7월이 되자 한 분씩 오셨는데, 성신여대 홍석률선생님, 상지대 장영민선생님, 중앙대 이길성선생님이 오셨다. 홍석률선생님은 연구년으로 윌슨센터에 계시면서 자료조사 차 방문하신 것이였고, 장영민선생님은 논문 준비를 위해 1960년대 자료를 보러 오셨다. 이길성선생님은 영화사를 전공하시는 분이었는데 한국 현대사와 영화의 관계 그리고 영화자료를 보러 오셨다. 필자가 떠난 후에도 이화여대 정병준선생님이 한국전쟁 관련 자료를 보러 오셨다고 들었다. 여름과 겨울방학기간에 한국의 많은 연구자들이 자료조사를 위해 문서보관소를 찾고 있었다.

문서보관소에 상주하는 사람들

이 곳에 상주하는 사람들은 방선주선생님과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관, 박은식선생님의 손자 박유종선생님, 일본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관이었다. 방선주선생님은 주지하다시피 문서보관소에서 엄청난 자료를 한국에 제공하고 있으신 분이다. 방선생님은 마치 문서보관소의 터줏대감과 같은 분이셨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오면 반드시 인사를 드리고 도움을 얻는다. 또한 선생님께서는 한국에서 왔다면 반

가워 하시고 식사도 가끔 함께 하신다. 먼 타국에서 노구를 이끌고 한국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현지고용된 자료수집인원이 있는데 이 분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전쟁기 자료를 비롯한 미국 문서보관소 자료를 스캔하고 있었다. 고성능 스캐너로 많은 분량의 문서를 스캔하고 있었고 그 종류도 다양했다. 이 문서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국립중앙도서관 사이트를 방문하면 좋을 것 같다.

4층에는 영상과 사진을 보관하고 조건부 개가식으로 자료가 소장되어있다. 이곳에는 10년전 부터 사진을 수집하고 있는 박유종선생님이 계신다. 박유종선생님은 김구선생 암살 진상규명을 위해 미국을 찾았던 김구선생 기념사업회 일원을 돕다 이 곳에서 자료수집을 시작하셨다고 한다. 박유종선생님은 박은식선생님의 손자로써 이른나이 미국에 건너와 터를 잡고 사셨는데 은퇴후 한국 현대사의 자료가 될 만한 사진을 수집하고 앞으로 책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한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직접 본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박은식선생님의 손자라서 그러신지 감회가 새로웠다.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파견된 사람들은 국회도서관 직원이라고 했다. 이들은 미국의 일본 보고서를 스캔하고 있었다. 일본사 연구를 위해 자료를 스캔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흑선이 도래한 시기부터인지? 전쟁기였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벌써 수년간 머물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4명이 한 팀으로 와 하루 종일 자료스캔을 하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점심시간 이후 tea-time을 갖는데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는 아키비스트와 매일 차를 같이 마셨다. 이러한 친분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시로 아키비스트가 도움을 주는 것 같았다.

문서보관소의 내국인들

미국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로 문서보관소를 방문할까?라는 의문점은 그 곳에 도착한 이후로 항상 가지고 있었다. 연구자 이외에는 어떤 사람들이 올까? 해답은 의외로 손쉽게 풀렸다. 문서보관소의 직원과의 짧았던 대화는 그 의문점을 풀어줬는데, 그 곳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변호사란다. 재판에 있어 판례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증거와 사례인데 그것을 문서보관소에서 찾아낸다고 한다. 변호사가 자주 오기 때문에 이 곳에는 가끔 소송에 휘말린 유명인도 방문한다고 한다.

어디에 가던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궁금하기 마련이다. 문서보관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제대군인이 많았는데, 군복무를 마치면 국가에서 일정부분 혜택을 주어 공기관에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한다. 우리 팀이 목격한 직원중에는 멕시코계 미국인이 있었는데, 그는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자신이 한국에서 근무했다며 “안녕하세요”를 남발하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그에게 한국은 잠재적 전쟁위험에 따른 불안정한 국가인 동시에 고도로 발달한 국가이기도 했다.

북한사 연구에 있어 NARA

역사연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료이다. 북한사의 경우 사료 자체의 양이 적고 국가기관을 통한 유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북한관계사료집』 시리즈도 국가의 주도과 방선주선생님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대부분이 미국에서 건너온 자료라는 것이다. 전현수, 김성보, 기광서 등의 노력으로 구소련 소장 자료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역시나 북한의 상을 보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그 시기가 1945년 ~ 1950년대로 제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역사를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미국 문서보관소에 있는 북한자료는 미국의 첩보기관이 수집한 노획자료가 대부분이다. 노획자료는 미국이 북한지역에 침투하거나 북진할 당시 수집한 자료로써 방대한 자료가 산적해 있다. 이 자료에는 핏자국, 총알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있어 자료를 보면서 전쟁을 참혹성을 볼 수 있었다. 가끔 자료를 보다 울컥하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잡지, 개인수기장, 계급장, 휘장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수집한 자료는 당시 북한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이 자료들은 군사목적의 즉시 이용가능성에 따라 구분되었다. 이를 편의에 따라 ‘노획문서’와 ‘신노획문서’(선별 노획문서)로 나뉜다. ‘노획문서’는 이미 이른시기에 정보가 공개되었는데 이 문서들은 전쟁에 즉시 이용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구분된 자료였다. 이에 비해 ‘신노획문서’ 군사목적으로 구분되었으므로 그 정보적 이용가치가 높았고, 자료 자체가 민감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보공개가 늦어졌고 ‘노획문서’를 수집하는 가운데 넘버링 상 비어있는 부분은 방선주가 인지하고 그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

해 문서공개가 이루어진 것이다.

필자의 이번 자료조사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프로젝트로서 ‘신노획문서’ 내의 이미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이미지 자료는 지도, 사진, 포스터등 문자 이외의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었으므로 예상보다 자료가 많아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문맹률이 높은 사회에서의 시각자료는 선전선동에 있어 그 효과가 뛰어났으므로 많은 수의 자료들을 볼 수 있었다. 자극적이고 직관적인 자료들은 북한사회의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 충분했다.

자료조사 과정에서 소위 ‘살아있는 자료’를 보고서는 역사연구에 대한 의지가 더욱 불타오르고 국가기관 발행물 이외의 개인 수기장등을 보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다. 더불어 역시나 역사 연구자는 1차 사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느꼈다. 자료를 보면서 가장 자주 들었던 생각은 드문드문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의 퍼즐이 정확히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이번 학우회보 글을 부탁 받았을 때 단순히 미국 체험기를 학우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미국에서의 체류기간이 조금 길었던 탓에 문서보관소의 경험보다 사적인 경험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체류기간이 길어 개인공부에 차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 공부를 선택한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확인되었던 시간이기도 했다. 필자는 정말 운 좋게 미국 문서보관소에서 북한사에 대한 1차자료를 접할 수 있어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경험은 미국내에서 미국의 행정처리 시스템에 대한 경험이기도 했고, 간접적으로 1945년 ~ 1954년의 북한을 체험하는 경험이기도 했다. 절대적인 지역적 공간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경험을 한 것은 미국의 심장 안에 생생한 1차 사료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학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개인적인 미국의 경험도 있지만 문서보관소의 경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을까 한다.





입학과 함께 돌아본 시간 그리고 시작

김미승

매년 1월 말과 8월 말에는 짐을 싸기 바빴다.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14시간 시차를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미국 친구들보다 방학이 일주일 정도 짧았다. 비행을 하루 앞둔 저녁, 나는 여행 가방 한 칸에 김치, 햇반, 라면등의 한국 음식들로 꽉 채웠다. 음식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든든해졌다. 생각해보니, 나는 떠나기 전날 단 한 번도 잠을 자본 적이 없다. 짐을 완벽하게 싸두어도 뜯는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 날 늘 핏기가 없는 얼굴로 집을 나섰다. 1년 동안 공항을 네 번이나 방문하다보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졸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실수없이 체크인하고, 짐을 부쳤다. 반면, 매번 하는 일인데도 공항에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웠다. 밝고 씩씩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섰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마지막 학기를 위해 미국으로 떠났던 날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벌써 일년 전이라니...시간이 참 빠르다.

내가 다닌 Colgate University 는 New York 주 북쪽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 Hamilton에 위치해 있다. Syracuse 공항에 내려 한 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가야 해밀턴에 도착한다. 네비게이션의 도움 없이는 학교를 찾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해밀턴은 외진 시골 마을이다. 끝 없는 옥수수 밭들 사이에 오래된 집들이 드문드문 보인다. 2009년 3월에 입학 통지서를 받고 5월 쯤 아빠와 함께 처음으로 학교 방문하던 날 우리는 이런 외진 곳에 과연 대학교가 있을까 의심도 했다. 정말 신기하게도 해밀턴에 도착하니 대학교 캠퍼스가 저 멀리서 보였다. 끝없는 옥수수 밭에 푹 떨어져 있다 해서 콜게이트 학생들은 흔히 “Colgate is in the middle of nowhere” 라고 하며, 한국 유학생들은 해밀턴 대신 해밀촌으로 불렀다. 해밀턴은 사계절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특히 겨울이 길고 춥다. 2010년도에는 눈이 1m 정도 쌓여 하루 휴강을 하기도 했었다. 간단히 학교를 소개하자면, 콜게이트 대학은 미국의 우수한 liberal arts college 중 하나로 인문, 순수 과학 중심의 교육을



한다. 한국 대학에서 가장 인기있는 경영학과는 찾아볼수 없는 대신 영문학, 역사학, 철학, 종교, 사회학, 고고학, 화학, 물리학 등의 다양한 순수 학문의 수업을 제공한다. 3학년이 되기 전까지 총 8개의 교양과목을 이수해야하는데, 그중 6개가 인문학 수업이었다. 덕분에 1학년때 경제학도였음에도 나는 일찍부터 다양한 인문학 수업을 접할 수 있었다.

원래는 경제학을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입학하였지만, 2학년 말에 역사학을 전공으로 선택했다. (미국은 2학년 2학기때까지 전공을 정할수있다.) 1학년 때부터 경제학, 수학 수업보다는 역사학, 영문학 수업에 더 큰 흥미를 보였다. 가장 처음 들었던 인문학 수업은 western tradition 이라는 교양 수업이었다. 종교 철학 교수님이 가르치셨는데, 이 수업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학, 역사를 통하여 서양적 사고의 기원을 찾으려 했다. 1학년 1학기 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이 수업을 기억한다. 처음으로 10장의 레포트를 썼는데, 완성하기까지 꼬박 이주일이 걸렸다. 영어로 보고서를 쓴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내가 읽은 글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비판하고, 더 나아가 나만의 시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교수님들은 명확한 thesis, 논지를 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좋은 논지가 곧 좋은 논문을 결정짓는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생각이나, 대학교를 막 입학했던 나는 논지와 주제를 구분하지 못했을 정도로 논지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다. 이런 나와 대조되게 미국 친구들은 보고서를 쓰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 수월하게 해내는 것 같았다. 토론 시간때 보면, 그들은 책이나 논문의 요점을 나보다 더 빨리 잡아냈고, 비판적으로 사고해냈다. 나중에 알고보니, 사립학교 출신이 많은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미 고등학교때부터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를 꾸준히 해왔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아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이들과 비슷해

지는데는 시간이 꽤 걸렸던 거 같다.

내가 결정적으로 인문학을 전공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것은 2학년 1학기 때였다. 한참 거시 경제와 통계 수업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을 때 쯤 나는 역사 전공자들을 위한 워크숍 수업을 수강했다. 수업 주제는 담당 교수에 따라 유럽 중세사부터 미국사까지 다양하나 수업 목적은 역사 전공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량을 배우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참고문헌 수집하기, 각주달기, 사료 해석, 글쓰기 윤리 등이었다. 나는 흥미삼아 이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는데, 역사학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는 것인가를 제대로 배운 계기가 되었다. 내가 가장 좋아했던 과제 중에 콜게이트 대학의 역사에 대한 3분짜리 비디오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나는 최초의 콜게이트 유학생의 발자취에 대해 조사하였다. 대학 도서관의 기록보관소에 가서 콜게이트 유학생의 자취를 찾기 위해 1800년대 학생 기록부터 시작해서 학교 신문, 앨범, 편지등을 뒤졌던 기억이 생생하다.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콜게이트의 최초 유학생의 존재를 발굴(?)해 냈을 때의 기쁨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콜게이트는 1817년에 세워졌고, 대략 100년정도 뒤인 1920년에 미얀마에서 Harris 형제가 콜게이트로 유학을 왔다. 그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교장 선생님과 편지를 주고 받았는데, 그 기록들을 통해 그들의 학교 생활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들도 나처럼 타지에서 고생했다는 내용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영어를 할 때 미얀마 발음이 묻어나와 백인 동기들에게 놀림을 당한 내용이었는데, 재밌는 추억거리처럼 편지에 씌여있었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익숙지 않은 영어에 고생했을 것이다. 종강과 함께 이 수업을 가르치셨던 Nemes 교수님께 찾아가 지도 교수님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역사를 전공으로 정하였다.

콜게이트에서 역사 전공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개 지역의 역사 수업을 수강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미국사, 유럽사, 동양사 수업을 적어도 한 번씩 들어야 한다. 덕분에 나는 그동안 궁금했던 다양한 역사 수업들을 접할 수 있었다. 그 중 2학년 2학기 때 들었던 중세 유대인 역사 수업이 기억에 남는다. 흔히 유럽사라면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의 화려한 역사를 떠올리게 되지만, 유대인의 역사 또한 유럽사의 한 부분이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중세 시대에는 정복 활동이 주 관심사였다면, 유대인의 역사에서는 주류 사회 속에서 떨어져나와 그들만의 문화와 종교를 지키며 생존해 나가는 것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주된 테마였다. 특히 나는 유대인들과 그들이 삶의 터전이 자리 잡은 유럽의 주류 민족들간의 관계에 관심이 있었다. 8세기부터 12세기까지는 유대인의 황금기라고

불리울 정도로 유대인은 활발한 상업을 통해 부를 쌓았고, 유럽 사회에서 그들의 존재를 확고히 했다. 흥미로웠던 점은 스페인 사회에 흡수된 유대인보다는 그들의 문화를 지켜온 유대인 많다 것과 그 중에서 유럽사회의 상류층까지 입성했던 유대인들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14세기 말 스페인의 유대인 박해의 시작으로 그들의 신분 추락은 빠르게 이루어졌다. 이런 유대인 역사의 특수성을 배워가는 것도 흥미로웠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내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었다. 유학 생활을 하며, 주류 문화와의 갈등은 끊임없이 있어왔고, 따라서 유대인의 갈등에 공감이 많이 되었다.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유대인 역사 전공자들 중 교포들이 많다고 한다. 아마 그들도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찾지 않았나 싶다.

주로 유럽사 중심으로 수업을 들었지만, 졸업 논문은 페루에 대해서 썼다. 사실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콜럼버스가 1492년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꾸준히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왔다. 내 졸업 논문은 에스파냐인들이 페루를 정복하면서 시작되는 인종간에 갈등과 갈등 속에서 생겨나는 인종 중심의 신분 계층 출현에 관한 내용이었다. 에스파냐인들이 페루를 정복하고, 서양의 종교, 문화 전파를 통해 에스파냐인들의 우월성과 동시에 페루 원주민들의 열등함을 정립시키려 하였다. 에스파냐인들의 차별을 뒤받침해준 논리는, *Ideology of Purity of Blood*, 피의 순수성 논리로서, 중세시대 에스파냐인들이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차별하려 만든 논리였다. 에스파냐인들은 이 논리를 변형시켜 페루인들에게 적용하였고, 이는 후대에 인종 차별로까지 이어진다. 나는 종교적 차별의 논리가 인종적 차별의 논리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페루를 통해 보여주려 했다. 또한 페루 원주민들이 이 논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그들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관찰하였다. 페루 원주민이 기록한 연대기를 주된 사료로 사용하였다. 내가 이 주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실 한국의 일제 침략기와 비슷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물론 시대와 배경은 다르지만, 에스파냐인들의 침략 과정 중 그들이 페루의 문명을 파괴시키고, 그들의 가치관을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려 하는 것은 일제의 문화정치를 떠올리게 했다. 30장의 졸업 논문을 쓰는 과정은 참 고통스럽고, 고독했다. 하지만 완성했을 때의 희열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달콤했고,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작년 5월에 졸업한 이후, 공부를 계속 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게 되었을 때 내가 과연 공부를 즐길 수 있을

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찬찬히 나를 돌아보며, 내가 관심을 가졌던 것들을 생각해 보았다. 대답은 간단했다. 나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역사가 좋고, 그리고 아직은 더 하고 싶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시 공부를 한다면 내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돌이켜보면, 내가 관심을 가졌던 유대인 역사나 졸업 논문은 나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어쩌면 그 동안 유럽사 등 다른 역사를 통해 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고등학교 이후로 한국사를 접할 기회는 없었지만, 항상 마음 한켠엔 한국사를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 앞으로 연세대학교에서도 내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던 신분 계층간의 관계 및 변화와 관련하여 조선 후기를 공부해보고 싶다. 개강을 앞두고 새로운 시작에 설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된다. 학부 때 한국사를 전공하지 않았고, 한문 또한 많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남들보다 배울것이 많기에 더 노력하고, 또 앞으로 겪게 될 시행착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한국사학우회 제5회 심포지엄

최민규, 「남곤의 부정적 붕당론과 정치활동」

정다혜, 「1960~1970년대 초 주택정책과 아파트」

南袞(1471~1527)의 부정적 봉당론과 정치활동

최민규

1. 머리말
2. 김광필문묘정사반대와 부정적 봉당론
 - 1) 사장의 효용성인정과 김광필문묘정사반대
 - 2) 의정부서사제복치주장과 부정적 봉당론
3. 사람정치이념동조와 권신정치주도
 - 1) 사람정치이념동조와 훈척정치비판
 - 2) 기묘사람과의 대립과 권신정치주도
4.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전기에 『경국대전』, 『국조요례의』와 같은 문물제도정비가 완성되고, 수조권제도가 축소된 성종 대부터는 향후 집권체제운영방안과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따라서 지배층 내부의 갈등의 폭은 확대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가 바로 갑오, 갑자, 을묘, 을사사화라는 4대 사화로 표출되었다.

4대 사화로 대표되는 성종에서 명종 대까지의 정치사와 정치사상사에 대한 연구는 주로 두 가지 연구 경향을 가진다. 첫째 훈구-사림 간의 이질적인 계급 간의 갈등이라는 것과 둘째 구분가능성보다는 언관권의 성장에 따른 정치권력구조 변동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 두 연구를 통해서 이 시기에 정치적 대립의 성격이 단순한 신-구대립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화와 정치권력구조의 변동이라는 것을 밝혀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들은 정치세력 간의 성격 문제와 언관권의 성장에 주목한 결과 그 시기의 다양한 인물들이 언관에서 대신이 될 경우 발생하는 정치적 변화에 대해 합리적인 원인을 설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 정치세

력이 훈구-사림이라는 이분법적 요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세력이 상존하고 있었고, 또한 사상적으로도 훈구-사림의 구분과 다르게 다양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최근에 이러한 문제에 착목하여 훈구파로 분류되어 주목받지 못한 신용개의 정치활동과 정치사상을 통해 중종 대 정치세력이 훈구, 친훈구계 사림, 친사림계 훈구, 사림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연구가 제출되었다. 또한 사상적으로도 조선 초기 관학파의 명맥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세조의 집권으로 인해 절의를 두고서 관학파에서 훈구와 사림이 분기되어 나오고, 사림 내부에서도 사장에 대한 효용성 인정 여부를 두고 사림파적인 입장에서 다시금 관학파적 입장으로 변모한 인사들이 있다고 주목한 연구도 제출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당시의 정치세력들이 다기하다는 것과 사림세력 내부에서 분화가 발생하는 사상적 차이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성종에서 명종 대까지 정치사와 정치사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정국에서 중요한 활동을 한 인물의 정치론과 정치활동을 규명하여 정치세력의 경향과 정치사상의 성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본다.

남곤은 위의 문제의식과 방법론의 차원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겠다. 먼저 그는 김종직의 문인이었다. 성종 대 사림파가 김종직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에 김종직의 문도라는 것은 당시 사림파의 확실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그는 김종직의 문인 중에서 사장을 중시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겠다. 이는 동일한 김종직 문인이라 해도 경학을 강조한 김굉필 계열이 있었고, 이들은 조광조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었다. 남곤은 기묘사화를 통하여 이들 김굉필 계열과 기묘사화를 통해 대립하였다. 이처럼 사림 내부에서 학문적 성향차이는 경세론의 차이 나아가서는 정치적 대립을 불러오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그는 기묘사화 기화인이라는 점에서 사림에서 훈구로의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릉복위론 등 세조대 훈구파의 과오를 시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종래 사림과는 다르면서 훈구와는 또다른 면모를 보이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먼저 2장에서 사림 내부의 학문관의 차이가 내재되어 있는 사장에 대한 효용성 인정과 그와 밀접하게 연결된 김굉필 문묘종사반대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는 남곤의 학문관 나아가서는 경세론의 기본적인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림 계열의 핵심적인 정치론이라 할 수 있는 재상정치론의 성격을 살펴보겠다. 이 당시 재상정치론은 의정부서사제 복치문제를 통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의정부서사제 문제를 통해 남곤의 재상정치론을 확인하겠다. 그리고 주자의 재상정치론은 재상을 天理의 주재자인 사대부여론 수렴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론정치가 활성화됨에 따라 아울러 등장한 공론정치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3장에서는 2장에서 검토한 남곤의 학문관과 정치론을 통해 사림정치에 충실하였다가 이들과 대립하는 양상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사림세력의 분화와 그 속에서 새로운 정치권력집단이 부상하는 사상적 차이와 정치적 계기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2. 김굉필문묘종사반대와 부정적 봉당론

1) 사장의 효용성 인정과 김굉필문묘종사반대

남곤(1471~1527)은 자가 士華이고, 호는 止停이다. 그리고 서울 출신이다. 그는 성종 21년에 19세의 나이에 김종직의 문도에서 수학하였다. 김종직은 당시 경학을 중시하면서 사장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있었고, 각 제자들에게 대해서는 그 능력에 따라 학문을 연마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남곤은 이러한 김종직의 문도에서 제술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였던 것 같다. 그는 『성리대전』을 진강할 수 있는 자로 선정되고, 문헌에 일인자였다는 평을 들었다. 따라서 그는 경학을 연마하면서도 사장을 중점적으로 학습하였다.

남곤은 교류관계에 있어서도 사장을 연마한 인사들과 교류하였다. 연산군 2년 사가독서인 시절의 인사들과 교류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연산군 2년 사가독서인에 참여한 인물들은 김전, 신용개, 이주, 김일손, 강훈, 이목, 이과, 김감, 성중암, 최숙생, 정희량, 홍언충, 박은, 이행, 김천령 등이 있었다. 이들은 김종직 문도 중에서 사장학을 중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 중 남곤, 김전, 이행은 기묘사화 당시에 정치적 활동을 같이 함으로 정치적으로 결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당시 김종직 계열에서 경학을 중시하는 김굉필 계열과 달리 사장학을 중시하는 인물들이 점차적으로 결합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사장학이 기본적으로 글을 쓰는 것으로 문학의 영역이라고 할 때, 문학관은 사

장학의 경제론적 성격에 대해 잘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곤의 문학관은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 남곤은 정확하게 자신의 문학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다만 김종직 문인 중에서 동일하게 사장학을 중시한 김일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일손은 문장은 도를 신고 있는 도구라는 인식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는 여말 사대부 이래의 전통적인 문학관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도를 담은 도구로서 문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도를 위해서는 문장이라는 수단이 중시되는 것으로, 문장이 사대의외교와 각종 문서행정을 위해서 활용되는 것을 통해 도가 있지만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功業을 중시하는 태도로 표출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김종직 계열 중에서 사장학을 중시하는 인사들은 적극적인 사환을 통해서 현실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남곤 역시 중종 반정 이후의 상황에 대해 천명이 귀의한 것으로 파악하여 김공필 계열이 주로 참여한 김공저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다.

남곤이 본격적으로 사장학의 효용성을 인정하면서 문헌정책을 펼친 것은 중종 반정 이후의 일이었다. 그는 당시 조정 내에서 문헌의 능력을 존중받았다. 중종 8년 8월에는 동지경연사로 승진하였고, 중종 9년 12월에는 지중추부사겸동지성균관사로 올랐다. 그는 중종반정 이후에 연산군의 폐정을 개선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문교정책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었던 명망과 지위를 모두 획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곤은 우선 문교정책의 핵심으로 학교제의 부흥에 주목하였다. 그는 권근이 학교에 유심하였던 것과 그 다스림의 효과를 근거로 하고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권근은 향교의 설치 등을 통하여 관학의 확산에 주력하고 있었고, 겸대사성으로 조선초기 관학진흥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이처럼 남곤의 학교제 부흥은 성균관 대사성이라 할 수 있는 師表, 師長 중심의 관학부흥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남곤은 과거제의 과목에서 제술이 그 기본에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기본적으로 사장과 경학의 본말론적인 구도에 대해 인정하였다. 강경 내지는 경학의 가치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소학』의 보급에 대해서 중시하는 등 사림파의 일반적인 『소학』 관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남곤은 사장으로도 충분히 국가의 문화적 사업을 통해 眞儒가 배출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기본적으로 경학의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詞章學이 가질 수 있는 효용성에 대해서 적극 인정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남곤은 경학과 사장이 본말론적인 관계에 있으면서도 국가적인 공효를 중심으로 학문과 인재

를 파악하는 공리적 학문관을 가지고 있었다.

사장의 효용성에 대해 옹호하는 남곤의 학문관은 관료상에 있어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는 인재 등용기준으로 사마광의 십과를 내세웠다. 사마광의 십과는 재주별로 인재를 세분화하여 국가운영에 필요한 인재를 충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남곤이 경학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인정하면서도 사장학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것은 관료의 국가운영에 있어 기초적인 재주와 재기를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는 곧 유자라면 훌륭한 저술을 남기거나 관료로 출사하여 국가의 사대외교, 편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관료상에서 도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곤이 사장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태도는 김굉필문묘종사에서도 드러난다고 하겠다. 김굉필의 문묘종사는 중종 12년 8월 7일 성균관 생원 권전의 상소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조광조 등이 정몽주-김굉필은 정몽주 이래 단절된 도를 이었다는 점에서 문묘종사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묘종사가 관철될 경우에는 도통론의 계열에 들어가는 인사들만 正學, 正統이고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존재했던 많은 학파들이 무시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성리학이 국정교학인 조선에서 이러한 도통론의 계보를 이었다고 할 수 있는 정파의 학문적·정치적 권력이 강화될 수 밖에 없었다.

남곤은 김굉필문묘종사 이면에 담긴 정치적·학문적 의미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김굉필에 대해서 정학이 중단된 뒤에 태어나서 諸儒를 지도한 공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김굉필에 대해서 향선생으로 격하하여 이해하였고 그의 학문적 성격 역시 순수 성리학이 아닌 육구연의 심학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그는 師長과 師表라 할 수 있는 문형의 직책과 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관학적 분위기와 사장의 효용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정하였고, 김굉필의 학문적 성격을 부정함으로 그의 문묘종사에 대해 반대한 것이다. 결국 남곤은 정몽주-김굉필의 도통론적 계승관계에 대해 부정함으로 이들의 후계자들이 성리학이 국시인 조선사회에서 국왕과 조정 상위의 이념적 권력을 획득하는 것을 부정하고자 한 것이었다.

남곤은 비록 학맥에 있어서 사림파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사장의 효용성을 인정하였고, 중종반정 이후 조정에 출사함으로 사장을 강조하였던 조선 초기 관학파적인 성격에 점차적으로 합치되어 갔던 것이었다. 관학파는 신국가건설이라는 조선초기적 상황에 입각하여 각종 국가의 문화적 사업을 통해서 국가의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장의 효용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다. 남곤은 연산군 대 폐습을 일신할 시대로 중종대를 인식하였고, 그는 문한정책을 통해서 폐정수습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는 연산군에 의해 훼손된 제도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문한정책에 있어서는 관학을 중심으로 하여 이념으로 결집된 배타적인 관료집단 보다는 현실의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해줄 수 있는 관료집단을 육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사장의 효용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고 동시에 김굉필문묘중사를 반대했다.

2) 의정부서사제복치주장과 부정적 봉당론

남곤이 정치활동을 하던 시기에는 삼사의 언론권과 각 관서의 하급관리라고 할 수 있는 낭관의 정치적 권한과 유생층의 공론이 확대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연산군대 무절제한 왕권으로 경험한 사회가 일어났던 때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권력구조에서 언론권이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발생한 국왕과 대신의 정치적 제약을 일정정도 해소하면서 가일층 복잡해진 정치적 갈등의 수렴주체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이에 따라 종래 국왕-대신의 직접적인 정치운영체제보다는 국왕-재상-언관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운영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남곤은 언관권에 대해 연산군대부터 중종반정 직후까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그는 是是非非를 가리는 것은 대간의 임무라고 보았다. 그는 대간의 간쟁권이 보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언론권의 무제한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경계하였다. 그는 명분에 입각해서 상하위계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언론권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남곤의 명분에 대한 인식은 조정에서부터 향당에 이르기까지 守分에 의해 규율되는 것을 중시하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먼저 그는 무엇보다 조정이 모든 일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둘째로 『呂氏鄉約』 준행에 대해 비판하면서 향약의 시행이 오직 나이만을 논하게 하여서 혹은 종이 주인의 뒷자리에 앉기도 하니 전도됨이 심하다고 비판하였다. 이처럼 남곤은 조정과 향당이 일원적으로 통제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었다.

남곤의 명분중시의 정치론은 중앙정치구조에서도 반영되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중앙정치의 중심으로 국왕과 대신을 상정하고 있었다. 국왕과 대신을 조정의 주체로 인식하는 입장은 조선초기부터 내려온 관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臺閣에 의한 대신들의 정치활동이 위축되었다는 비판이 있듯이 언론권으로 인해 고립된 國王과 大臣의 정치적 권한을 보장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정부를 운영할 것을 주장하였다.

국왕과 대신을 중심으로 상정하는 정치체제는 의정부서사제를 들 수 있다. 의정부서사제 논의는 중종 9년과 중종 11년에 김안로가 古今の 通義인 의정부서사제를 복치하자고 주장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남곤은 이에 대해 동참하면서 정령이 일원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동하였다. 그가 의정부서사제가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로 政令一致를 내세웠다. 政令一致論은 연산군대 사람들이 훈구대신들을 공격하는 주된 논리이기도 하였다. 육조직계제 하에서는 의정부대신들이 육조의 속아문의 도제조를 담당하면서 직접적으로 국왕에게 상달하는 등, 三公六卿百司라는 정치권력행사 과정을 저해하였다. 이처럼 그는 국왕과 재상이 정령의 최우선에 있으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일원적으로 정치를 운영하는 정치운영론을 견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의정부서사제는 재상과 대신 중심의 정치운영을 지향하고 나아가서는 신권 중심의 정치를 옹호하는 유교일반론에서 도출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남곤이 주장하는 의정부서사제는 유교일반론에서 출발하는 의정부서사제와는 다른 면모가 있었다. 그가 의정부서사제가 시행되어야 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세종대의 의정부서사제가 그러하였다. 세종 대 의정부서사제는 국왕이 여전히 병조와 이조의 인사권을 장악하면서 그가 신임하는 재상들이었던 황희, 황보인, 김종서 등이 중심이 된 정치체제였다. 국왕과 재상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는 승지로 인해서 국왕과 대신 사이의 소통이 어렵다고 보았다. 이처럼 남곤은 성종, 연산군 대를 거쳐 중종대를 경험하면서 국왕의 강력한 권력의 한계성을 인정하면서 근시직의 영향력을 일정하게 축소하면서 동시에 관료계의 정점에 있는 국왕과 재상이 결합하는 정치운영론을 내세운 것이다.

남곤의 의정부서사제는 기본적으로 재상중심의 정치운영론을 내세우는 것이기도 하면서, 국왕의 정치적 권한을 擇賢을 넘어 재상과 직접적인 결합관계를 추구하고 있었다. 이는 재상의 역할을 사대부공론을 주재하고 이를 통해 군주를 보좌하는 주자학 원론의 재상론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국왕과 재상을 결합하는 정국운영 하에서는 國事의 사정과 시비의 분별, 국정의 모의와 주도 등은 2품 이상의 六卿과 의정부 당상으로 제한하게 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남곤의 의정부서사제 하에서는 하위직이 공론을 주재한다는 명목으로 결집하여

국정의 정점에 있는 군주와 재상을 무제한적으로 비방하고 의결에 방해하는 행위는 관료체제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특히 國王-宰相으로 이어지는 일원적 정치운영논리가 내재되어 있었기에 신료층들이 사적인 조직을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비판적일 수 밖에 없었다. 중종 대에는 주자학의 봉당론에 입각한 군자의 무리는 朋이고 소인의 무리는 당이라는 인식이 점차 대두하고 있었다. 그는 봉당에 대한 인식 역시 부정적이었다.

남곤은 봉당이라는 것은 항상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였다. 군자의 무리는 봉이고, 소인의 무리는 당이라는 君子小人辨別論是非明辯論에 바탕을 둔 주자학의 봉당론을 전제하면서도 봉당을 교결할 시에 당의 우이당쟁, 송 인종 대의 신구법당쟁과 같이 나라를 망치는 것에 이르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위진대의 죽림칠현과 같이 스스로를 군자인양 지칭하면서 공경을 무시하고 예법을 도외시하는 행각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남곤이 제시하고 있는 우이당쟁은 당대 귀족출신관료와 과거합격자 사이의 당쟁이었다. 송 인종대의 신구법당 논쟁은 왕안석의 개혁론을 지지하는 신법당과 사마광을 중심으로 결집한 구법당 간의 대결이었다. 이들의 논쟁은 그 이면에는 개혁론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한 대결구도가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현실정치권력을 둘러싼 대립으로 이행해 나간 것이었다. 그는 당과 송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봉당의 폐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남송 말 권신 가사도의 사례를 통해서 유생들이 봉당을 교결하고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그에게 봉당은 군자의 무리를 가장한 私黨의 성격이 농후한 집단이었다. 봉당이 한번 교결되면 天下와 國家를 그르치게 한 자들이 무척 많고, 이들을 변별하기 힘들기에 禍亂의 싹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그는 부정적 봉당론을 견지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3. 사림정치이념동조와 권신정치주도

1) 사림정치이념동조와 훈척정치비판

남곤은 삼공-육경-백사의 체계를 강화해서 다수의 대신들이 국왕과 사적으로 결탁하는 행위에 대해 반대하면서 관료제를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는 무오사화

이전 언론활동을 통해 훈척신정치에 대해 반대하였던 것이다. 그는 연산군 2년 내시 김효강의 탄핵, 3년에 있었던 司僕侍 提調 노사신과 이계동의 남해 서용문제 등에 대해 비판하였다. 이 두 문제는 당시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연산군이 재정마련을 위해 내수사를 활용한 것과 政出多門과 丘史多占으로 대변되는 제조의 정치적, 경제적 특권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국왕 그리고 국왕과 다수의 훈척신이 연결되어 일으키는 비리에 대해 비판한 것이기도 하였다. 남곤은 이와 같은 언관활동으로 인해 연산군에게 경고를 듣자 언관의 당연한 권한이라고 반박하였다. 이는 당시 언관들로 주로 구성된 사람들이 훈구파에 대해 비판하는 것으로 남곤 역시 언론활동에 충실하면서 훈구대신들을 비판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남곤은 무오사화 이후에 홍문관에 근무하면서 연산군대의 정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세웠다. 그는 1499년(연산군 5년) 8월 5일 여진정벌을 둘러싸고 그 찬반여부에 대한 대책문을 통해서 특정대신과 국왕이 주도하는 정벌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방하였다. 또한 남곤은 무오사화 이후 『자치통감』 등을 이용하여 자신에 반대하는 신료들을 제압할 역사적 근거를 찾고자 한 연산군의 행동에 반대하면서 군주의 잘못으로 인해 유발된 각종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남곤은 연산군 대에 주로 언론기관, 시강관·시독관으로 근무하면서 훈척정치와 그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연산군의 정치에 대해 비판하였다. 남곤이 연산군에 의해 파직되는 것 역시 이러한 훈척정치 비판에서 비롯한 연산군 총신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중종반정으로 복직한 남곤은 지속적으로 훈척신정치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가 당시 비판하던 세력은 117인으로 남수되었다는 평을 듣고 있었던 정국공신에 대한 비판이었다. 특히 박원종·성희안·유순정 등 연산군 대 총신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권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정 삼대장에 대한 비판에 집중하였다. 이들 반정 삼대장은 무도한 왕을 축출한 후에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남곤은 「유자광전」을 서술하여 기존의 체제로 인하여 유자광과 같은 소인이 등용되었고 그 결과 연산군대의 폐정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존의 체제를 고수하려는 훈척신 정치에 대해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그는 연산군에게 미너를 시납하여 총애를 받은 구수영을 비판하고 성종 대처럼 언관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라고 하였다. 유순정이 문무반의 인사청탁을 계속해서 한 것이 물의를 빚고 있다고 비판하였고 기강을 바로하고 법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

다고 하였다. 또한 성희안이 궤격을 언급함으로써 연산군 대의 사회를 다시 일으키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표하였다. 이처럼 남곤은 기존의 체제를 고수하려던 반정공신의 정치행동에 대해 비판하면서 연산군의 총신으로 정치일선에 있었던 이들을 비판하였다.

남곤은 성리학적 의리론과 명분론을 활용하여 훈척신정치에 대해 비판하였다. 이러한 그의 비판은 소릉복위론으로 표출되었다. 소릉복위론은 성종 9년 (1478) 4월에 남효온에 의해서 표출되었다. 소릉은 문조의 비인 현덕왕후 권씨를 말한다. 현덕왕후 권씨는 세조가 집권한 후에 일어난 사육신의 사건에 권씨의 모친인 아지와 그 동생 권자신이 휘말리면서 서인의 위치로 강등되었다. 소릉복위는 바로 이 현덕왕후 권씨를 서인의 위치에서 원래 문종 왕후의 자격으로 올리고자 한 것이었고 이는 세조의 집권정책강화과정에서 과도한 훈구공신들의 정치권력에 대해 시정하고자 한 것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당시 연산군과 훈척신에 의해 자신들의 정치적 권한을 축소하려는 행위로 인식되기도 하였고, 무오사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중종 대의 소릉복위는 중종 7년 11월 소세양에 의해 제기되었다. 소세양은 중종 7년 11월에 문종이 태묘에 홀로 향사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 하였고, 남곤 역시 이러한 소세양의 의견에 동조하였다. 남곤 역시 이 때 제기된 소릉복위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그는 “소릉의 일은 지하에 계신 분의 유원일 뿐만 아니라, 온나라 신민들도 억울하게 여기”는 일이라고 하였다. 또한 상소를 올려 지하에 있는 세종과 문종이 왜 소릉을 서인으로 만들었는가라고 물으면 반드시 세조는 대신들의 요청에 못 이겨 했을 것이라고 답할 것이라고 하였다. 남곤은 소릉복위론을 적극적으로 주창함으로써 세조의 잘못을 유도한 신하들을 비판하였고, 명분과 의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소릉을 복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다. 결국 그는 소릉복위를 통하여 당시 훈척정치를 비판하고자 하였다.

2) 기묘사림과의 대립과 권신정치주도

남곤과 기묘사림 간의 정치적 대립은 중종 2년 윤정월의 박경·김공저 사건에서 내재되어 있었다. 이 역모사건은 박원종, 유순정, 성희안, 유자광 등 연산군 대 총신들이 중종반정의 공신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사건은 중종반정 직후의 조정이 과연 출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조

정인지에 대해 묻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는 세조의 즉위는 부끄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중종의 즉위는 하늘이 주고 사람이 귀의한 것이기에 명백하고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반정공신을 제거하기 위해 반역을 불사하는 행동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천명이 귀의한 중종의 조정에 적극적으로 출사하여 자신의 정치적 경륜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남곤은 반정공신에 대한 비판을 언관직을 통해 수행하였고, 소릉복위를 이끌어 내는 등 나름대로 사림정치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것에는 성공했다. 중종 9년 이후에는 신용개, 정광필 등이 주축이 되는 인물들이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하였고, 남곤은 이들의 추천으로 중종 9년 11월 17일 호조판서로 임명되고 중종 10년(1515) 윤 4월 25일 우참찬이 되는 증 대신의 직에 올랐다. 중종 9년을 경과하면서 다양한 정치세력 내부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국정의 중심에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는 이 시기에 대신의 권한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문제와 이전시기와 같이 정권을 농단하는 대신들이 사라진 상황이기에 의정부 서사제복치안에 찬성함으로 국왕과 재상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형태를 제시하였다. 그로서는 이 시기에 반정공신계열, 비반정공신계열부터 신진관료까지 포진해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상호 간의 대립을 완충하는 방법으로 국왕과 재상의 강력한 결합관계를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하고자 하였다.

남곤은 기묘사림이 등장할 당시에 조광조의 인진과 『소학』 보급 등을 찬성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신씨복위론을 통해 대립하였다. 신씨복위론은 중종 10년 8월 천재지변에 대한 구언교에 따라 순창군수 김정과 담양부사 박상이 반정공신으로 인해 폐서인된 신씨를 복위하자고 한 것이었다. 그는 김정과 박상의 구언교가 올라오던 날 즉시 이는 박원종 등이 살아 있을 때 논의되어야 했던 것이라면서 반대하였다. 대신에 그는 신씨복위를 주청하는 박상과 김정이 종묘와 사직에 위해가 된다는 이유로 문초를 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대사간 이행 등의 주장은 반대하였다. 아마도 그로서는 신씨복위론이 관철될 경우에는 비록 정국의 주도권을 상실하였지만 여전히 잔존한 반정공신계의 반발과 이들을 처벌할 경우에는 언로의 폐쇄를 명분으로 일어날 대간의 반발을 모두 고려하였던 것이다.

다음은 천거제 논쟁으로 대립했다. 중종 대의 천거제는 학생천거로 관학의 유생 중에서 뛰어난 인물을 선발하는 방식이었다. 그 역시 문음자제들에 의한 관직 독점문제를 해결하고 과거를 보완하기 위해 문무과 외에 공천제로 선발할 것을 권하는 등, 과거를 우선시하는 가운데 학생천거제로 이를 보완하자고 한 것이었

다. 그에 비례 기묘사림들은 중종 11년(1516) 11월 기준의 상소를 시작으로 효렴과라는 별도의 과목을 신설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과거로 인해서 德行之士가 선발되지 못하고 오로지 문장기예에 충실한 인물들이 선발되는 것이 문제라고 보았다. 기묘사림들의 입장은 중종 13년(1518) 3월 경연 중 조광조에 의해 제시된 천거별시로 이어졌다. 이들은 기존 과거제로는 문장기예에 충실한 인물들만이 선정된다는 비판과 함께 자파세력 확충이라는 현실적 목적을 가지고 천거제를 주장하였다.

남곤은 이러한 기묘사림의 천거제에 대해서 잘못된 천거인을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였고, 항상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과거야말로 공정한 인재등용방법이라는 점을 피력하였다. 실제 기묘사림이 발의한 천거제는 중종 14년(1519) 4월 13일 급제자 28인을 얻게 되었는데, 이들 중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개 사림과 내지는 그 관련인물들이었다. 그리고 이들 추천인들은 순자법에 구애받지 않고 6품실직에 등용되거나 청요직이라 할 수 있는 대간이나 육조낭관에 서용되었다. 당시 6조의 하위직인 낭관의 권한이 강화되고 대간의 정치적 발언이 강화되어 가는 현상 속에서 기묘사림들이 천거제를 통해 대대적으로 낭관직과 연관직에 진출한 것은 이들 세력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당시 조정에서는 위계를 뛰어넘는 서용이 봉당모의와 같다는 인식이 있었다. 남곤 역시 앞에서 천거제의 공정성을 의심한 것은 이들이 상호 결합한 것을 우려한 결과였다.

기묘인들은 천거제를 통해 확대된 자파세력을 바탕으로 반정 직후부터 남수의 혐의를 받고 있던 정국공신에 대한 위훈삭제를 발의하였다. 기묘사림이 주도한 削勳은 중종 14년(1519) 11월에 단행되었고, 위훈판정된 76명이 삭훈되면서 정국공신은 26명만 남게 되었다. 삭훈으로 인하여 반정의 3대장이라 할 수 있는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이 죽고 난 후에 정치적 권한이 약화되어 가던 반정공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축소시켰다. 하지만 반정공신의 삭훈은 반정공신을 책봉한 국왕에게도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였다. 결국 국왕과 삭적된 반정공신의 정치적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남곤은 천거제논의과정, 위훈삭제문제 등을 보면서 이들 기묘사림들이 조정에 있으면서 봉당을 형성하여 정치적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묘사림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보았다. 그런데 그는 기묘사림을 정쟁을 통해 제거하기는 힘들었다. 당시 삼리가 기묘사

림에 의해 좌우되었기 때문이다. 대신에 그는 무력적인 방안을 통해서 기묘사림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위훈삭제에 불만을 가진 심정과 홍경주에게 접근하였다. 그리고 기묘사림의 개혁론이 진행될수록 자신의 정치적·경제적 권한이 약해져 가는 것을 두려워한 중종에게 기묘사림 제거계획을 고하였다. 중종은 이에 “임금이 신하와 함께 신하를 제거하는 것은 도모에 가깝기는 하나, 간당이 이미 이루어졌고 임금은 고립하여 제재하기 어려우니 함께 피하라”라는 밀지를 내려 남곤과 홍경주의 계획을 승인하였다. 기묘사화가 발생한 것이다.

기묘사화 직후인 중종 14년 12월 17일 남곤은 좌의정에 제수되었고 정국을 주도하였다. 기묘사화 직후 의정부에 남곤이 위치해 있으면서 육조와 언론은 고형산·심정·이항·김극필·이빈 등이 주도하고 있었고, 이들은 남곤과 동일한 정치적 행보를 걷는 인사들이었다. 남곤은 언관권을 장악한 후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언론활동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방조하면서 기묘사림의 주요정책이라 할 수 있는 현량과 파방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 바탕 위에서 그는 평소 자신이 구상한 정치론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으로 의정부중심의 권력구조를 더욱 강화시킨 것이었다. 그는 중종 16년(1520) 경연에서 의정부가 6조와 한성부에 녹사를 파견하여 당사의 출사여부를 기록하게 하여 날마다 보고하게 하는 방안을 제언함으로써 의정부대신의 정치운영을 더욱 강화시켰다.

하지만 남곤이 삼사를 장악한 것을 바탕으로 국가운영을 모색한 것은 삼사의 어용화를 촉진시키고 공론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가지는 삼사의 권위가 위축되게 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 삼사의 어용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중종 16년 안치겸의 옥사를 들 수 있다. 안치겸의 옥사는 기묘사림과 평소에 연계가 되어 있었던 안치겸과 안당을 제거함으로써 기묘사림의 일파를 조정에서 완전히 축출하는데 한 일조를 한 사건이었다. 당시 심정과 남곤은 기묘사림에 대한 복권이 주청되는 현실 속에서 지속적으로 기묘사림의 일파를 처단하는 것은 무척이나 큰 정치적 부담이었고, 이에 안치겸의 처벌에 대해서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시는 안당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안치겸의 옥사에서 드러나는 삼시의 비판은 대신들이 원하는 결과라고 생각되는 것을 우선 고려한 후에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면모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삼사의 어용화는 결과적으로 공론의 주재자라는 위상을 약화시켰다.

언론 삼사가 공론의 주재자라는 위상이 약화되는 가운데 유생 공론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안로가 성장하였다. 김안로는 그의 아들

인 김희가 부마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왕실세력과 연계될 수 있었고, 또한 유생 공론이 기묘사림에게 쏠리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활용하였다. 그는 남곤이 장악하고 있는 권력에 도전을 해오기 시작하였다. 남곤은 김안로에 대해서도 봉당론에 입각하여 공격하였다. 그러나 중종은 남곤의 주청에 대해서 묵살하였고, 대간과 대신들의 탄핵에 마지못하여 김안로를 귀양보내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아마도 중종은 당시 남곤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었던 세력을 견제할 필요성에 김안로를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김안로 사건을 통해 보듯이 국왕과의 결합을 통해 권력행사를 희구한 정치적 특성과 재상권을 중심으로 일원화된 정국운영방식은 국왕과 새로이 연계된 세력의 등장, 그리고 유생공론으로 대변되는 공론 소재의 확대 현상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남곤 일파의 몰락의 단초가 제공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중종 22년에 죽었다. 남곤의 잔여세력이라 할 수 있는 심정과 이항은 세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과 유생공론을 반영하여 기묘사림인 권벌을 등용하겠다는 두 가지 명분을 들고 정계에 복귀한 김안로에 의해 몰락하였다.

남곤 일파는 몰락하였지만 그의 정치론은 향후 지속된 권신 정치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안로가 삼사를 장악한 후 언론활동을 통제하면서 정권을 주도한 것이나, 윤원형 일파가 집권하는 시기에 남곤의 정치를 두둔하면서 국가의 권병을 위에 두고 아래를 통제해야 한다고 하는 발언 등은 이 시기 정치활동 속에서 국왕과 결합한 강력한 재상의 역할을 강조하는 남곤의 정치론이 위치하고 있었다.

4. 맺음말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해서 종래 사림파 중에는 사장과 경학에 따라 그 정치론과 정치활동의 분화가 일어날 개연성은 충분하였다. 그리고 사림파에서 분화되어 나온 사장학의 효용성을 인정하는 집단은 관학파적인 입장에 합치되면서, 당시 언론권에 의해 고립된 국왕과 재상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권신정치의 토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점에서 이들은 종래의 훈구파와는 다르면서 사림파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사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들은 중종반정 후 복잡한 정치상황 속에서 등장하여 지속적으로 정치세력으로 유

지하기 어려웠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들은 일반 사대부의 여론을 더욱 많이 반영하고자 하는 정치세력과 정치론이 등장할수록 종래의 국왕과 일부 관료층의 지지만으로 정국을 충분히 운영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더 확대된 향촌사회의 지지와 이를 구조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던 정치세력과의 대결에 있어 취약점이 분명하게 있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김안로 이후에는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구성하기 보다는 척신 출신의 인사들에 적극적으로 부용하여 그 정치적 생명력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고, 남곤 일파의 몰락은 그러한 현상을 예견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의령남씨 문중회, 『止亭南先生史料集』, 1995.

한영우, 『정도전사상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3.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사』 28, 국사편찬위원회, 1995.

에드워드, 와그너 저, 이훈상 역,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 일조각, 2007.

이태진,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범조사, 1985.

이태진, 『한국사회사연구』, 지식산업사 1986.

이태진 외, 『韓國社會發展史論』, 일조각, 1992.

이병휴, 『조선전기 기호사림파연구』, 일조각, 1984.

이수건, 『조선전기 영남사림파의 연구』, 일조각, 1984.

정두희, 『조선 성종조의 대간연구』, 한국연구소, 1986.

정두희, 『유교·전통·변용 - 미국 역사학자들이 보는 한국사의 흐름』 국학자료원, 2005

최이돈, 『조선중기 사림정치구조 연구』, 일조각, 1994.

김돈, 『조선전기 정치권력구조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7.

김돈, 『조선중기 정치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9.

김우기, 『조선중기 척신정치 연구』, 집문당, 2001.

김영봉, 『김종직 시문학 연구』, 이회문화사, 2000.

김범, 『사회와 반정의 시대』, 역사비평사, 2007.

김범, 『연산군』, 글항아리, 2010

김태영, 『조선성리학의 역사상』, 경희대학교출판부, 2006.

홍원식 외, 『조선전기 도학파의 사상』, 계명대학교출판부, 2013.

도현철, 『고려말정치사상연구』, 일조각, 1998.

- 도현철, 『목은이색의 정치사상연구』, 해안, 2012.
-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 금장태, 『조선전기의 유학사상』,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박원재, 『유학은 어떻게 현실을 만났는가?』, 2001, 예문서원
- 강주진, 『趙光祖의 生涯와 思想』, 박영사, 1979.
- 한춘순, 『명종대 훈척정치 연구』,
- 김용흠, 「조선전기 훈구·사림의 갈등과 그 정치사상적 함의」, 『동방학지』 124, 2004.
- 김용흠, 「조선 세조대 정치를 보는 시각과 생육신」, 『역사와 현실』 64, 2007.
- 김정신, 「조선전기 훈구·사림의 정치사상비교」,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 김훈식, 「한훤당 김굉필에 대한 조선시대의 평가와 그 의미」, 『동방학지』 133.
- 김훈식, 「여말선초 민본이데올로기와 명분론」, 『애산학보』 4, 1986.
- 김훈식, 「15세기 민본이데올로기와 그 변화」, 『역사와 현실』 창간호, 1989.
- 김훈식, 「16세기 군신윤리의 변화와 출처론」, 『역사와 현실』 50, 2003.
- 김광철, 「靜庵趙光祖의 政治思想」, 『釜山史學』 7, 1983.
- 우인수, 「조선명종조 위사공신의 성분과 동향」, 『대구사학』 33, 1987.
- 이원균, 「李晦齋와 그 政治思想」, 『釜山大論文集』 29, 1982.
- 이동희, 「조선초기 원상의 설치와 그 성격」, 『전북사학』 16, 1993.
- 이동희, 「조선초 원상제하의 승지」, 『전북사학』 19-20, 1997.
- 이현진, 「조선전기 소릉복위론의 추이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23, 2002.
- 이태진, 「李晦齋의 聖學과 仕宦」, 『韓國思想史學』 1, 1987.
- 이태진, 「15세기 후반기의 「거족」 과 명족의식」, 『한국사론』 3, 1976.
- 이병휴, 「조선 중종조 정국공신의 성분과 동향」, 『대구사학』 15-16, 1978.
- 윤정, 「조선 중종 전반기 정국구도와 정책론」, 『역사와 현실』 25, 1997.
- 윤정, 「조선 중종대 훈구파의 산림천택 운영과 재정확충책」, 『역사와 현실』 29, 1998.
- 정만조, 「조선시대 붕당론의 전개와 그 성격」, 『조선 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1992.
- 정구선, 「조선 중종조 천거제의 시행과 사림파의 성장」, 『東國史學』 24, 1990.
- 지두환, 「조선전기 군자소인 논의 - 『대학연의』 왕안석론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9, 1993.
- 김향수, 「16세기 사림의 성리학 이해」, 『韓國史論』 7, 1981.

최민규, 「남곤의 부정적 봉당론과 정치활동」 토론문

김선민

발제문은 지금까지 ‘훈구 대 사림’의 대립 구도로 파악되어 온 조선 전기 정치사에서 남곤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치세력 유형을 추출하고자 시도한 결과물이다. 2장에서는 김굉필의 문묘종사와 의정부서사제 복치 논의를 둘러싼 남곤의 의견을 분석하여 그 사상적 특성을 이끌어내려 하였고, 3장에서는 크게 연산군대와 중종대로 시기를 나누어 남곤의 정치활동 양상을 살폈다. 발제문에 따르면 남곤은 여타 사림 세력과 마찬가지로 김종직을 사사하였으나, 김굉필 계열의 사림과는 달리 詞章을 중시하는 한편 명분론에 입각한 수직적·일원적 정책결정구조를 지향하였다. 남곤의 이러한 사상은 ‘훈척정치’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기묘사림이 주장한 김굉필의 문묘종사나 천거제 시행, 위훈 삭탈 등에는 반대하는 방식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묘사화 이후 남곤은 국왕과 재상의 결합을 바탕으로 삼司를 어용화하여 정치를 운영했는데, 이러한 권력구조가 이후 명종대까지 이어지는 ‘권신정치’의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 발제문의 시각이다.

1. 발제문에서는 ‘훈구 대 사림’ 구도를 통해 조선 전기를 파악하는 기존 시각을 비판하였는데(2쪽), 정작 발제문 본문에서도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대립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이 제시하는 남곤의 모습은 하나의 새로운 정치세력 유형이라기보다 단순히 ‘사림’에서 출발하여 ‘훈구’로 ‘변질’한 인물에 가깝다. 남곤과 비슷하게 ‘새로운 유형’으로 묶을 수 있을 만한 인물이 본문 중에 전혀 거론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상은 더욱 강화된다. 예를 들어 발제문 후반부에서는 기묘사화 이후 남곤의 정치활동을 서술하며 ‘남곤 집단’ 또는 ‘남곤의 정치세력’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집단’이나 ‘정치세력’에 어떤 유형의 인물들이 속하는지는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 심정이나 이행의 이름이 거론되거나 이들이 어떤 성향의 인물이며 어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는 설명이 없고, 개별 사안에 관한 활동만 단편적으로 서술될 뿐이다. 남곤과 심정, 이행 등이 실

제로 (사림 세력과 대비하여) ‘남곤 세력’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나름의 결속력을 갖춘 정치집단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근거도 전혀 제시되지 않는다. 남곤의 정치활동을 단순히 한 개인의 족적으로서가 아니라 역사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려 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2. 발제문의 주요 논지 중 하나는 남곤이 의정부서사제를 통해 국왕과 재상의 권위를 강화시키는 한편 대간을 어용화하면서 권신정치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발제자는 이에 대한 근거로 남곤이 기묘사화 직후 좌의정에 제수되었고 육조와 대간이 남곤과 정치적 행보가 동일한 인사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특히 삼사는 ‘어용화’되었다고 쓰고 있다(17쪽).

1) 발제문에서는 대간 어용화의 근거로 안처겸 옥사에서 삼사가 먼저 처벌을 주장한 사례를 들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용화’는 사화 등 옥사나 정변이 일어난 이후 흔하게 보이는 현상이다. 태종대 민무구·민무질 옥사 때도 대간이 앞장서서 처벌을 주장했던 사례가 있으며, 계유정난을 거쳐 단종복위운동을 겪은 세조대에는 대간의 언론 횡수 자체가 격감하기도 하였다. 즉 기묘사화 이후 삼사의 행보는 통상적인 정변 이후의 몸사림에 가깝고, 남곤이 ‘삼사를 장악’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다. 중종 14년 기묘사화 이후 남곤이 사망하는 중종 22년에 이르기까지 대사헌을 역임한 사람만 총 20명에 달한다. 여기에도 육조 당상관과 사간원·홍문관의 주요 당상·당하관까지 모두 ‘남곤의 정치세력’으로 분류될 수 있을 정도로 그와 정치적 행보를 함께했다는 견해는 납득하기 어렵다. 만일 정말 그랬다면 남곤은 세조대 한명회나 중종 초반 박원종 등을 능가하는 권신이었을 것이다.

2) 남곤의 정치활동을 기술하면서 기묘사화를 남곤이 계획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는데(17쪽), 이는 기묘사림 복권 후 사림이 내세운 역사인식일 뿐 정확한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 기묘사화의 기획과 시행에는 남곤보다 국왕이었던 중종의 의도가 훨씬 많이 개입되었을 것이며, 사화 이후의 정국 개편에도 중종의 의향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발제문에서는 남곤이 의정부서사제를 통해 ‘국왕과 재상이 강력하게 결합하여 백관을 통어하는’(11쪽) 권력구조를 의도했다고 하는데, 기묘사화 이후 정국을 남곤이 좌지우지한 것처럼 묘사하면서 정작 국왕 중종의 정치적 역할이나 남곤과 중종의 관계에 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다. 설령 남곤이 한명회 수준의 권신이었다고 해도 국왕 중종을 배제하고 남곤의

‘집권’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보충이 필요하다.

3) 발제문에는 ‘권신정치’와 ‘권신’의 개념에 대해 별다른 정의가 없다. 발제문 끝부분에서 명종대 정치양상을 ‘국왕과 재상의 위상이 강화된 정치형태라 할 수 있는 권신정치’라 규정하였고 남곤이 ‘국왕과 재상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권신정치의 토대를 열었다’고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20쪽). 이에 따르면 발제문에서의 ‘권신정치’는 국왕과 재상의 권위가 동시에 강해지는 권력구조를 가리키는 듯하나, 명종대 국왕의 권위가 강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또한 남곤 혹은 김안로가 활동했던 중종대와 문정왕후가 섭정했던 명종대를 같은 ‘권신정치’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종대에서 명종 말까지 구조적으로 등장하는 권신정치’(3쪽)라는 표현은 다분히 결과론적인 서술이라 생각된다. ‘권신’을 사전적 정의대로 ‘권세 있는 신하’라 해석한다면 한명회나 신숙주 같은 세조대의 공신들 역시 권신일 것이나 세조대 혹은 성종대 초반을 권신정치의 시대로 정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남곤의 정치활동을 ‘권신정치’로 정의하려면 우선 ‘권신정치’가 어떠한 유형의 권력구조를 가리키는 것인지, 그리고 남곤이 그 ‘권신’의 정의에 들어맞는 인물인지부터 규명해야 할 것이다.

4. 첨언으로 제목이 「남곤의 부정적 봉당론과 정치활동」인데, 실제로 발제문에서 서술되는 남곤의 정치사상은 ‘부정적 봉당론’으로 귀결되지 않으므로 부적절한 제목으로 보인다.

1960~1970년대 초 주택정책과 아파트

정다혜

1. 머리말 - "아파트, 아파트!"
2. 1960년대 이전 주택정책과 아파트의 형성
3. 5.16 군정기~1970년대 초 주택정책과 아파트 건설의 확대
 - 1) 주택정책의 전환과 「마포아파트」
 - 2) 1960년대 중반 이후 아파트 확대와 그 성격
4. 맺음말 - 아파트를 '욕망'하기까지..

1. 머리말 - "아파트, 아파트!"

부동산 문제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된 지 오래다. 부동산의 대부분은 주택이 차지하고 있고, 이는 현재 한국인들의 기형적인 가계구조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인의 가계자산¹⁾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80%이고²⁾, 가계부채 1000조 시대 그것의 70%가 부동산으로 인한 것이다.³⁾

이러한 가계의 마지막 보루이자 가계를 움아매는 주범인 부동산을 둘러싼 전쟁의 중심에는 아파트가 존재한다. 1970년 단독주택 94.1%에 비해 아파트는 0.7%에 불과하였으나 ⁴⁾ 35년 뒤인 2005년에는 단독 주택이 32.2%로 급감하고 아파트가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2.7%로 200배 이상 급증했다. 단독주택을 제치고 '한국의 집'을 대표하게 된 것이다.⁵⁾ 또한 최근 인터넷을 달구었던 외국과 비교한

-
- 1)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 2) 2006년 전국 7대도시 가구 대상 실시.
 - 3)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금융자산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미국의 경우 가계자산은 평균적으로 금융자산 70%, 부동산 30%이다.
 - 4) 1970,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기본조사)」. 韓國住宅銀行, 『韓國住宅建設總覽』, 1975, 48쪽 <표 2-15>
 - 5) 손낙구, 『부동산계급사회』, 후마니타스, 2008, 145쪽

‘한국의 중산층 기준’에서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가 첫 번째 조건으로 제기될 정도로 아파트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도 크다. 실제로 아파트 거주자의 평균 총재산이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 주택의 2~3배를 능가한다.⁶⁾ 한국사회에서 아파트는 개인의 자산 규모에서 핵심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의 상징이자 축재의 원천으로서⁷⁾ 끊임없는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 현대사에서 아파트 건설은 1950년대 후반에 시작되고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구집중은 아파트가 건설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모든 과밀한 도시의 일반적인 주택양식이 아파트는 아니라는 점에서⁸⁾ 한국의 아파트 건설 과정은 보다 역사적으로 그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50년대 주택정책과의 연관성 속에서 1960년대 주택정책의 특징을 살피고 그 속에서의 아파트 건설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민간에 의한 대단지 아파트 건설이 일반화되는 1970년대 중반 이전의 아파트 건설의 양태와 그 성격을 알아보는 것은 아파트를 둘러싼 인식의 변화과정과 현재와 같은 아파트 중심의 주택구조의 형성 계기를 추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1960년대~1970년대 초반의 아파트 문제만을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건축학연구를 제외하고는 드물다. 건축학에서는 주로 건축방법과 아파트 유형별 특징, 공간구조 분석을 통해 당시 아파트 건축의 특성과 의미를 추적하고자 하였다.⁹⁾ 특히 장성수의 연구는 1960~70년대 아파트 건축의 특징뿐만 아니라 아파트 건설의 과정, 거주집단의 사회적 성격까지 분석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¹⁰⁾ 행정학 및 도시계획학에서는 현재까지의 주택정책 및 도시계획의 과정과 특성을 통사적으로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아파트 문제를 단편적으로 다루었다.¹¹⁾ 이들은

6) 아파트 거주자의 평균 총재산은 4억 88만 원으로, 단독주택 2억 722만 원, 연립 및 다세대주택 1억 4,658만 원이다.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주택종류별 자산현황(2006년 기준)

7) 전상인, 『아파트에 미치다 : 현대한국의 주거사회학』, 2009, 60~61쪽

8) 예를들어 협소한 영토에 인구밀도가 높은 네덜란드나 벨기에에서의 도시집중은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들의 대단지 주택 수는 영토가 훨씬 넓은 프랑스보다도 적다. 발레리 줄레조, 『아파트 공화국』, 2007, 후마니타스, 18쪽

9) 이정수, 「1960년대 중층 아파트의 ‘근대성’ 표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0, 1995 ; 박진희, 「1960~70년대 초 일자형 집합주거에 관한 연구」, 연세대 건축학 석사논문, 2004 ; 장남수, 「중정형 집합주거 계획에 관한 연구: 1960~1970년대 초 국내의 중정형 아파트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 건축학 석사논문, 2005 ; 최윤영, 「1960~1970년대 서울의 ‘맨션아파트」, 서울대 건축학과 석사논문, 2006 등. 장림중, 박진희는 초기 아파트들의 모습을 재탐색함으로써 그 특징과 문화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장림중 박진희, 『대한민국 아파트 발굴사: 종암에서 힐탑까지, 1세대 아파트 탐사의 기록』, 효형출판, 2009)

10) 장성수, 『1960~70년대 한국 아파트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건축학과 박사논문, 1994

11)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 1, 3, 한울, 2003 ; 임서환, 『住宅政策半世紀—政治經濟環境 變化와

전반적인 주택정책의 결정과정과 주도세력, 결과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1960~70년대 초의 아파트 건설의 의미와 그 확대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강남개발과 맞물린 주거형태 분화와 그 성격을 밝히고 이를 사회문제와 연결시킨 연구들도 있다. 도시 공간구조의 분화 및 계층분석, 부동산문제 등을 다루었고 강남개발이 미친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드러내고자 하였다.¹²⁾ 하지만 이들은 주로 강남 정착 이후인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주목하고 있어 1960년대와의 연속성에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아파트를 둘러싼 사회문화를 전면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역사학에서는 1970년대 주택정책을 사회개발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그 성격을 시장과 복지 차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¹³⁾ 최근에 출간되고 있는 아파트 관련 연구서들은 현재 한국의 부동산 및 아파트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교적 실증적인 데이터들을 활용하면서 아파트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¹⁴⁾

본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바탕으로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초반에 이르는 아파트 건설 과정과 그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부터 1970년대 초반에 이르는 주택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아파트의 형성과 확대과정을 살펴볼 것이다.¹⁵⁾ 주택정책의 목표와 실재를 밝히고 아파트 건설과 주택시장과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건설되었던 다양한 유형의 아파트들을 분석하면서 이들 아파트의 특징과 아파트를 둘러싼 당시 사람들의 인식의 결들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기 아파트 건설을 둘러싼 정책주체와 대중들의 태도, 그리고 아파트 중심의 부동산 사회로의 전환의 계기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住宅政策의 展開過程』, 技文堂, 2005 ; 김수현,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 시장주의를 넘어』, 한울아카데미, 2008 등

12) 대표적인 연구로는 홍두승·김미희, 「도시 중산층의 생활양식 : 주거생활을 중심으로」, 『성곡논총』 19, 1988 ; 홍영림, 「서울시 강남지역의 개발과 주거지분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학 석사, 1993 ; 유인진, 「서울시의 사회계층별 거주지 분화형태와 사회적 함의」, 『서울학연구』 10, 1996 ; 안창모, 「강남개발과 강북의 탄생과정 고찰」, 『서울학연구』 41, 2010 ; 전강수, 2012,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강남개발」, 『역사문제연구』 28, 2012 등

13) 김아람, 「1970년대 주택정책의 성격과 개발의 유산」, 『역사문제연구』 29, 2012

14) 발레리 줄레조, 앞의 책, 2007 ; 손낙구, 앞의 책, 2008 ; 전상인, 앞의 책, 2009 ; 박철수, 『아파트: 공적 냉소와 사적 정열이 지배하는 사회』, 마티, 2013 등

15) 지역적 범위는 서울로 한정하였다.

2. 1960년대 이전 주택정책과 아파트의 형성

우리나라에서 산업화에 기인하는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으로 인한 도시주택난의 시작은 1930년대 식민지 공업화를 계기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¹⁶⁾ 해방 이후 귀환민과 월남민 등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대도시 주택난은 더욱 가중되었으나 정부차원의 직접적인 주택공급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시작되었다.¹⁷⁾ 주택건설은 전쟁 재해복구와 관련하여 전후 도시행정에서 가장 큰 과제로 제기되었고, 정부는 CRIK¹⁸⁾, UNKRA¹⁹⁾ 등의 외국원조를 통해 무상으로 제공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 긴급 구호주택을 건설하였다. 하지만 간이주택과 난민정착용 주택이 큰 비중을 차지해 임시적인 형태의 주택 건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1955년 정부, 한미재단²⁰⁾, UNKRA 단장 합동으로 주택 100만호 건설 원칙에 합의하고 주택건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자금조달 계획의 비현실성으로 실행되지는 못했다.²¹⁾

1950년대 후반부터는 원조가 재건자금의 성격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57년 ICA²²⁾원조자금을 통한 주택건설 6개년사업 계획이 수립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은 정부자금을 통한 직접공급에서 용자지원에 의한 공급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존의 구호차원의 주택건설에서 일반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주택금융을 통한 주택공급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²³⁾ 용자는 주택영단, 지자체, 민간주택건설기업체, 상가주택 건설 희망자에게 제공되었고, 부흥부, 보건사회부, USOM²⁴⁾이 사업계획을, 산업은행이 자금의 용자와 관리를 담당하였다. 이를 통해 부흥주택, 국민주택, 상가주택, 외인주택

16) 조선총독부는 「조선시가지계획령」(1934)을 통해 도시계획을 구상하고 구획정리사업, 조선주택영단 설립(1941)을 통한 노동자 주택 공급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국적·전면적 형태의 주택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정해식, 「도시정책의 회고와 전망」, 『도시문제』 4-1, 1969 ; 임서환, 앞의 책, 2005, 9쪽

17) 주택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제기된 것은 사실이었으나, 당시에는 농촌인구가 80% 이상의 대다수였기 때문에 주택문제는 전 지역의 보편적 문제라기보다는 대도시 난민의 문제로 인식되었고, 실업이나 식량문제가 더 시급한 사회문제로 취급하였다. 임서환, 앞의 책, 2005, 11쪽

18) Civil Relief in Korea, 한국민간구호계획

19)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국제연합한국재건단

20) 한미재단(KAF, Korea American Foundation)은 장기적으로 보급할 한국 주택의 전형(典型)을 제시하기 위한 기구로 1953년에 설립되었다.

21) 임서환, 앞의 책, 2005, 14쪽

22)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국제협력처

23) 임서환, 앞의 책, 19쪽

24) United State Operations Mission, 미국대외원조기관

등이 건설되었다.

이러한 ICA 주택사업은 일시적인 긴급구호성 사업에서 주택의 항구적 공급체계를 확립하고자 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어진 주택은 공공주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명목상 중·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사업이었으나 실제 주택의 가격, 용자조건, 신청자격기준은 중·저소득층이 접근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사업실적도 부진하였다. 복잡한 용자절차와 오랜 소요기간은 큰 불편을 초래하였고, 그나마 공급된 주택의 자금회수도 저조하였다. 용자금 상환 및 관리비 등의 월간 징수액은 약 22,000원으로 당시 서울 근로자 월평균 고정소득 50,000원의 40%를 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양적으로도 민간주택공급에 비해 점차 크게 줄어들면서 1957년부터 1961년까지 건설된 주택 중 정부부문 건설은 약 15%에 그쳤다.²⁵⁾ 그러나 공영주택은 당시 민간 주택건설에 큰 파급효과를 미쳤다. 또한 종래의 한식 건축 양식에서 벗어나 서구식 주택양식이 점차 일반화되었다.²⁶⁾

아파트 또한 새로운 주택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특히 주택 기능의 현대화와 대량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아파트를 주목하였다. 종암아파트, 개명아파트²⁷⁾와 같은 아파트가 소개되고, 재건축택을 아파트로 설계 변경하는 움직임도 등장했다.²⁸⁾ 종암아파트의 경우 ICA 산하 기술연구소의 노력으로 ICA 재정지원과 상업은행 용자를 통해 외국 기술자들이 건설 계획에 참여한 것이었다.²⁹⁾ 이승만 대통령은 대형 아파트 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토지 절약을 이유로 “국민이 싫어하더라도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하였다.³⁰⁾

해결되지 않는 주택난 속에서 4.19 혁명 이후 장면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주택정책을 강조하였다. 인구주택 국제조사를 통해 정부수립 후 최초로 센서스를 실시하였고, 경제활동 상황, 교육정도를 비롯하여 주택상황을 분석하였다. 당시 보건사회부장관 김성진은 주택이 “국민생활의 기본요소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25) 임서환, 앞의 책, 23~29쪽 참고

26) 수공예적인 전통 목구조는 빠른 주택건설에 적합하지 않았고, 시멘트 등의 새로운 건설자재의 생산이 늘어나고 자재 가격도 감소하면서 기존 전통 한옥과는 다른 방식의 ‘양옥’이 보편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전남일 외,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2008, 176쪽

27) 유력한 민간 건설업체였던 중앙산업이 1958년에 3개동의 종암아파트, 1959년에 1개동의 개명아파트를 건설하였고, 보건사회부 「부흥주택관리요령」에 따라 대한주택영단이 인수하여 일반에 불하하고 관리하였다. 대한주택공사, 『大韓住宅公社 二十年史』, 1979, 220쪽

28) 전남일 외, 앞의 책, 2008, 180쪽

29) 발레리 줄레즈, 2007, 28쪽

30) 1958년 2월 25일 제19회 국무회의(『경향신문』 1991년 1월 26일 기사참고) ; 1960년 1월 15일 제1회 국무회의(국가기록원)

서는 國富形成의 일부분”이 된다고 보고 특히 주택행정기구와 주택금융기구의 일원화를 통한 주택정책의 수립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택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통일된 독립기구의 마련과 운영 문제는 여러 부처에서 제기되고 있었다.³¹⁾ 자체적인 자본금을 출자하여 지속적인 주택공급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주택공사를 설립하는 안은 1956년 시점부터 정부차원에서 발의한 것이었으나,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주택공사 설립은 5.16 쿠데타 이후 1962년에 이르러서야 「대한주택공사법」의 제정을 통해 실현되었다.³²⁾

3. 5.16 군정기~1970년대 초 주택정책과 아파트 건설의 확대

1) 주택정책의 전환과 「마포아파트」

5.16 군사쿠데타 이후의 주택정책은 두 가지 차원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첫째로 이전까지 주택 문제가 구호의 영역,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적 차원에서 경제개발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주택문제의 해당부처가 보건사회부에서 건설부³³⁾ 소관으로 변경된 것 또한 상징적이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주택개발’의 문제로 관련 산업의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는 경제적 산업의 일부이자 주택난해소의 방법이었다.³⁴⁾ 이러한 경제개발 및 국토개발과의 유기적인 관련성은 주택정책의 적극성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³⁵⁾

둘째는 각종 법령을 통해 주택정책의 체계를 수립해 나갔다. 주택공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토지수용법(이상 1962), 공영주택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주택자금융용법(이상 1963), 토지구획정리법(1966), 주택은행법(1967) 등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법안들은 공공주택 및 주택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주택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였다.

31) 정해운, 「I.C.A 住宅資金의 運營에 對하여」; 崔載鎭, 「住宅行政의 改善策」, 『주택』 4, 1960

32) 임서환, 앞의 책, 2005, 42~43쪽

33) 건설부의 설치근거 및 소관업무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그 실시와 관리, 조정 및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 또는 국제경제기관과의 경제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었다. 건설부직제(각령 제9호. 1961.6.7. 제정 참고)

34) 대한주택공사, 앞의 책, 1979, 232쪽 ; 장림중·박진희, 앞의 책, 2009, 206쪽

35) 정해식, 1969, 앞의 글, 7쪽

그러나 실제 주택정책의 내용과 실천은 매우 미약했다.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는 경제계획의 일환으로 주택정책을 포함했고 도시화·공업화에 대비하고자 하였으나 주택건설 및 투자계획은 당시의 주택난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했다. 군사정부는 연평균 9만 6천 호를 건설, 5년간 총 47만 5천 호를 건설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는 애초부터 당시의 인구증가율을 고려하면 이는 주택부족률을 0.1%밖에 해소할 수 없을 정도로 소극적인 것이었다.³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토건설청장마저 경제개발계획이 주택건설에 치중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미약한 계획의 불가피함을 인정했다.³⁷⁾ 제1차 5개년개발계획기간의 실제 성과는 애초 계획의 70%밖에 건설하지 못했다. 1차 경제개발기간 동안 국민경제전체의 연평균성장률이 8.5%이었음에도 주택부문은 2.7%만이 성장했고, 주택투자는 GNP의 1.5%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1965년 시점의 도시의 주택 부족률은 32.9%이고, 그 중에서도 서울의 주택부족률은 59.4%에 달하였다.³⁸⁾

한편 1962년에 대한주택영단을 개편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는 설립 이후 모든 역량을 공동주택 건설에 집중했다.³⁹⁾ 그 중에서도 마포아파트는 경제개발 계획의 주택사업의 일부이자 주공의 이후 주택건설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주택의 모습이었다. 옛 마포교도소 자리에 1962년에 Y자 형태의 주거동 A, B형을 각각 세 동씩 짓고, 1964년에는 판상형의 건물 네 동을 연차적으로 지은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였다. 마포 아파트단지 건설 목표에 대하여 주공은 “국민의 재건의욕을 고취하고 대내외에 건설상을 과시하며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수평 확장을 지양하고 고층화를 기도했으며, 생활양식을 간소화하고 공동생활의 습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수도미화에 공헌하여 근대문명의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대북한선전의 효과를 도모하는 데 두었다”⁴⁰⁾고 설명하고 있다. 박정희 또한 마포아파트 준공을 ‘생활혁명의 계기’로 파악하고 ‘봉건적인 생활양식’에서 탈피하여 집단공동생활양식을 통한 근대적인 국민생활과 문화의 향상을 이룩할 것이며 도시집중화의 대안이라며 치사하였다.⁴¹⁾ 근대적 주거가 가져올 상징적 의미를 마포아파트에 부여하고 이를 확산시키고자 한 것이었다.⁴²⁾

36) 조성근, 「經濟開發5個年計劃에 依한 住宅建設事業」, 『주택』 8, 1961, 5쪽 ; 한국주택은행, 앞의 책, 1975, 96쪽

37) 조성근, 위의 글, 1961, 5-6쪽

38) 이만기, 「우리나라의 住宅政策과 住宅金融」, 『주택금융』 1, 1968, 11쪽.

39) 전남일 외, 앞의 책, 2008, 192쪽

40) 대한주택공사, 앞의 책, 1979, 236쪽

41) 대한주택공사, 앞의 책, 1979, 238쪽

마포아파트는 주택난 해결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중산층을 겨냥하여 비교적 고급으로 지어진 것이었다. 초기 마포아파트는 임대 형식이었는데 보증금은 3~5만원, 월세는 2500원~3500원으로⁴³⁾ 당시 서울 근로자 평균 소득 8970원이었음을 고려할 때⁴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당시 아파트는 소형평수 위주의 빈민굴 이미지까지 있었기 때문에 임대신청 당시 입주신청자는 전세대수의 1/10 미만이었으며, 애초 계획했던 기름보일러 대신 연탄보일러 방식의 난방방식을 취하면서 연탄가스사고에 대한 두려움도 더해졌다. 그러나 연탄가스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되고 영화제작까지 동원한 적극적인 정부 차원의 홍보가 효과를 거두면서 입주가 완료되었다. 신혼부부의 입주신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⁴⁵⁾ 마포아파트 생활과 관련한 각종 글들도 발표되었다.

水道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보일러」도 물 供給이 되지 않아서 「라지에터」가 吐、
 吐 해지지 않는다. 水洗式便所 물이 나오지 않아 用便을 볼 수 없게까지 되었다. 무슨 놈의
 現代式建物이 이런가고 입주자들의 擧皆가 추군댄다.⁴⁶⁾

오늘은 대학동창인 美가 찾아왔다. 아파트가 좋다기에 구경을 하러 왔다는거다 뭐 별로
 히 험잡을데가 없어도 바깥에서 바라다 보이는 「발코니」에 빨래를 늘어 놓고 장독들이 죽
 들 늘어져있어서 「발코니」로서 구실을 못한다는 얘기를 한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입주
 자의 한 사람으로서 변명을 하기에 맘을 빼었다.⁴⁷⁾

마포아파트는 수세식 변기를 비롯하여 온돌대신 라지에이터 방식의 난방, 싱크대 등 서구식 입식생활을 구현하고자 하였고, 프라이버시 확보 등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초기 장독문제, 빨래 문제 등 전통적인 생활방식의 유지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마포아파트 주민은 주로 화가, 연예인 등의 전문직 종사자 혹은 아파트 생활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매체는 아파트의 생활의 효율성과 근대성을 대중들에게 확산시켰다. 그 결과 마포아파트는 1967년 기존 임대형식에서 일반분양 형태로 전환하는데 인기가 높아 프리미엄까지 붙었으며 분양가 산정과 분양우선권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까지 제기되었다.⁴⁸⁾

42) 전남일 외, 앞의 책, 2008, 195쪽

43) 『동아일보』, 1962년 10월 18일

44) 소득계층별 서울 근로자 가계수지(1961년), 『한국통계연감』, 국가통계포털(KOSIS)

45) 『한국일보』 1962년 10월 7일

46) 秋玲, 「아파트의 하루들 (2)」, 『주택』 11, 1964, 90쪽

47) 秋玲, 앞의 글, 1962, 91쪽

2) 1960년대 중반 이후 아파트 확대와 그 성격

1967년부터 71년까지 진행된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는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이 수립되었다. 주택정책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서 지속적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나 공공부문 주택투자는 최저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민간부문 중심의 주택공급에 의존하였다. 그나마도 정부 자금 부족을 이유로 서민 주택 건설공급은 지자체가, 주공은 중소득층의 주택을 건설하기로 하였다.⁴⁹⁾ 주택난 해소와 주거 복지 문제에 대한 정부 주도의 정책적 해결이 더욱 후퇴한 것이었다. 주택건설 계획은 공영주택 3만 호, 민간부문 주택 80만 호를 건설하는 것을 계획하였는데, 이 역시 당시 120만 호가 넘는 주택부족과 수요증가분을 감안하면 현상 유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1968년에는 목표를 50만 호로 축소 조정하기에 이르렀다. 자금계획에서는 정부투자는 5억원에 불과하고 채권발행 225억원, 주택적금 65억원, 주택금고출자금 50억원 등 345억원과 민간자체자금 701억원을 상정하였다. 700억이나 되는 민간자금의 조성과 채권발행 225억원의 마련의 과제는 주택금고(이후 주택은행)의 설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⁵⁰⁾ 주택금고는 이처럼 독립된 주택금융기구로서 민간자본을 주택자금으로 활용하여 주택건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⁵¹⁾

이 기간동안 건설된 주택 수는 턱없이 적었으나 주택건설에는 당초 계획한 액수의 3배인 총 2,771억 원이 투입되었다. 이는 건축자재비의 상승과 더불어 신규 건설주택의 규모가 대형화된 데 있었다. 그나마 1960년대 중반 이후 경기호황과 더불어 본격화되는 부동산 붐에 힘입어 민간부문 건설이 활발해져 54만 호의 주택건설이 이루어졌다.⁵²⁾

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행된 후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물가상승이 만성화되자 기업이나 경제성장과 함께 증가한 중산층들이 인플레이에 대비 여유자금

48) 『조선일보』 1967년 4월 16일 ; 장성수, 앞의 글, 1994, 93쪽. 이와 관련하여 마포아파트의 분양으로 인해 임대아파트가 자취를 감췄다면서 공영임대주택 성립의 좌절을 비판하는 글도 볼 수 있다.(박병주, 『아파트 건설과 주택사업』, 『주택』 8-1, 1967, 78쪽)

49)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30년사』, 1992, 373쪽

50) 이만기, 위의 글, 12쪽

51) 주택금고는 정부가 1965년 「주택금고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1967년 「한국주택금고법안」으로 수정되어 법령이 제정되면서 설립되었다. 1969년에는 민간자금 동원을 보다 극대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여 「한국주택은행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에 주택금고는 주택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된다.(한국주택은행, 『주택은행30년사』, 1997, 33~38쪽)

52) 임서환, 앞의 책, 2005, 47쪽

을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부동산투자가 증가하면서 주택지 개발도 크게 늘어났다. 1968년을 정점으로 택지개발은 급증하였다. 1965년부터 1969년 사이 연평균 땅값은 34.9% (도시 50.1%), 집값은 38.2%가 상승하기에 이르렀다.⁵³⁾ 1967년 「부동산투기억제세」가 도입되었으나 지가상승을 막지 못했다. 전역에서 일어났던 개발 붐의 정점에는 서울의 강남개발이 존재했다.⁵⁴⁾ 이러한 개발 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토지소유자가 현물인 토지를 출자하고 정부는 예산없이 개발에 착수하기 때문에 시 자체 재정지출은 매우 적었다.⁵⁵⁾ 1983년 개발용 토지를 전면 매수하는 방식의 공영개발이 시행되기 전까지 이것은 도시개발의 주축이 되었고,⁵⁶⁾ 직접적인 지가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한편 이 시기는 대지이용의 극대화과 저렴한 건축비의 장점으로 주택자금 공급 측면에서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건설을 선호하기 시작했다.⁵⁷⁾ 이 때 주공은 주된 주택공급 대상으로 대도시 무주택 중소득층을 설정하면서 입주자가 부담한 선수자금(先受資金)으로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시책을 택하였다.⁵⁸⁾ 중소득층에게는 보조금이 지불되지 않았으므로 융자금 상환능력이 금융 지원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었다. 주공은 단지조성사업을 통해 택지를 조성하는 한편 주택공급을 추진하였고, 중산층 아파트 건설 사업에 박차를 가하였다.⁵⁹⁾ 이를 통해 문화촌(1967), 정릉(1967), 홍제(1968), 화곡(1969), 남서울(1970), 개봉(1971) 등의 아파트가 건설되었다.

이 중에서 한강 아파트 단지건설은 규모면이나(3,246) 내용면에서 상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전체 세대 중 소형주택(12~13평형)은 784세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공무원아파트 1,312세대, 외인(外人)아파트 500세대, 50평대 중대형 아파트인 한강맨션 700세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한강아파트는 공급대상을 중산층, 공무원, 외국인 등으로 설정하였고, 저소득층 중심의 후생적

53) 손낙구, 앞의 책, 2008, 27쪽 <그림> 참고

54) 강남개발은 계속된 인구 유입으로 서울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강북의 도시적 기능과 인구를 분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된 것이었고, 한편으로는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제3한강교가 건설하고 경부고속도로를 계획하면서 부지를 무상으로 확보하고 정치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손정목, 앞의 책, 2003 ; 이옥희, 앞의 글, 2006, 16쪽)

55) 손정목, 앞의 책, 2003 164쪽

56) 김아람, 앞의 글, 2012, 58쪽

57) 윤당, 「주택자금공급의 합리화방안」, 『국회보』 73, 1967

58) 대한주택공사, 위의 책, 1992, 373쪽

59) 주공은 1967년 공영주택자금으로 계획한 사업은 단독주택 건축 대신 아파트 건설만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박병주, 앞의 글, 1967, 76쪽

차원을 탈피하여 중산층을 주대상으로 한 최초의 대규모단지개발이었다.⁶⁰⁾

아파트 단지 내에 교육시설, 쇼핑센터, 놀이터 등 단지 내 자족적인 생활여건을 갖추도록 계획하여 아파트 생활의 편리함을 크게 강조하였다. 공급방식의 측면에서는 아파트 사전분양제도를 처음 도입하였고, 매체광고와 모델하우스도 첫선을 보였다. 특히 ‘맨션’으로 불리는 중대형 아파트의 등장은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⁶¹⁾ 1980년대 초까지 신규 아파트의 평균 크기가 20평 정도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대형 평수는 실용적 목적보다는 과시 수단에 가까웠다.⁶²⁾ 그리고 주공차원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시도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1970년대 중반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등장은 예고된 것이기도 했다.

아파트의 인기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다. 아파트 분양권을 둘러싼 경쟁은 신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⁶³⁾ 물론 인프라가 덜 구축되거나 지나치게 월 부금이 비싼 아파트는 여전히 분양 미달을 겪기도 했으나 점차적으로 아파트 선호는 증가했다. 특히 서구식 생활방식과 거주민들의 높은 학력 수준은 인기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⁶⁴⁾

한편 서울시에서는 특히 이른바 ‘판자촌’을 이루며 ‘불량주택지구’를 형성하고 있던 도시 빈민의 주거난을 해결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무작정 상경한 이농민들을 비롯하여 해마다 20만 명 정도씩 급증하는 서울시 인구에서 무허가 판자촌은 이들을 빨아들이는 흡수구 역할을 하고 있었다.⁶⁵⁾ 1966년에 부임한 김현옥 서울시장은 ‘불도저 시장’으로 불리면서 주택난 해결에 공격적으로 나섰다. 「도심재개발사업」의 이름으로 도심부 불량 주택지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김현옥은 두 달 만에 13만 6,660동에 달하는 판잣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모든 것을 실적과 물량 위주로 신속 처리하고자 하였다. 판자집이 철거된 자리에는 시민아파트와 상가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다.⁶⁶⁾

60) 장성수, 앞의 글, 1994, 99쪽

61) 1960년대 말 UN 자문관들은 한국 적정 주택이 9평 정도라고 권고했고, 동경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고도성장을 이루며 일인당 국민소득이 4,000달러에 이르렀던 일본의 주거공간 평균 면적은 12~15 평 내외였다. 전상인, 앞의 책, 2009, 70~71쪽 참고

62) 전상인, 앞의 책, 2009, 71쪽

63) 『조선일보』 1969년 3월 30일 ; 『동아일보』 1969년 10월 23일 ; 『조선일보』 1970년 4월 3일 ; 『조선일보』 1970년 4월 14일 등

64) 『조선일보』 1970년 4월 14일

65) 전상인, 앞의 책, 2009, 41쪽

66) 상가아파트는 8.5평에서 50평대 규모까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주상복합의 개념으로 종로를 비롯한 곳곳에 만들어졌고, 한 때 유행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세운상가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3년 동안 2000동의 시민 아파트를 지어 판잣집 주민 9만 호를 입주 시킬 계획을 세우고 아파트를 건설하였는데, 그 속도에 비유하여 ‘벌떡 아파트’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⁶⁷⁾ 그 결과 풍전아파트, 회현시범아파트, 효창아파트 등 층수와 형태가 다양한 유형의 시민아파트가 건설되었는데 대부분 구조가 허술하고 시공이 조악해 날림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금화동·연희동·창신동·월곡동·와우동·서부이촌동 등은 이미 1970년대에 불량 주택으로 분류되고 있었고 주민들의 불만도 컸다. 이미 슬럼화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더럽고 불편한 환경, 산비탈에 아슬아슬하게 세워진 아파트는 한강아파트가 보여주는 여유로운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 그나마도 판자촌에서 시민아파트로 옮겨 거주할 수 있는 빈민들은 소수였고, 대다수는 또 다른 외곽지대로 밀려나 다시 무주택 빈민의 삶을 살아야 했다. 이들에게 입주금이 없는 것은 물론, 실업상태거나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용자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저소득층 용자제도는 졸속시공의 참담한 결과는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사건이었다. 이듬 해 벌어진 1971년의 광주 대단지 사건은 집단이주지 문제를 직접 제기하여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키면서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서울의 시민아파트 건설 사업은 중단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동작대교 남단 택지에 조성된 반포(남서울)아파트단지는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중요성을 지녔다. 반포아파트는 22평에서 복층 64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세대 중앙난방이 도입되었다. 초기 단독주택지로 구상하였던 강남개발이 대단지아파트 중심의 공간구성으로 변화하는 데 반포아파트는 그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사실 1960년대 말까지 건설된 아파트를 살펴보면 일부 맨션아파트와 고급 상가아파트를 제외하면 1962년부터 건설된 단지형 아파트의 단위주택 규모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았으며 질적 수준도 뛰어나지 않았다. 시민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서울시 역시 예산 부족으로 골조와 주요 설비만 공급했고, 내장과 마감은 입주한 뒤 입주자들의 몫이었다.⁶⁸⁾ 하지만 시민아파트의 실패는 저소득층의 주택공급을 위한 아파트 건설에서 중산층으로 아파트 공급 대상이 전격적으로 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밀집 지역인 서민아파트가 반정부 세력의 온상이나 빨갱이 소굴로 변하는 것을 우려했고, 더 이상

67) 전남일 외, 앞의 책, 2008, 203쪽

68) 박철수, 2013, 99쪽

작은 평수 아파트를 짓지 않으려 하면서 아파트와 중산층의 결합은 가속화되었다.⁶⁹⁾ 기대한 대로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자 엄청난 인파가 장사진을 이루었다. 이는 이후 강남 대단지 아파트 시대의 성공을 예감하는 것이었다.

4. 맺음말 - 아파트를 ‘욕망’ 하기까지..

한국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주택부족 문제는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서울을 비롯한 도시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박정희 정부는 주택정책을 매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한 부분으로 포함하여 정책과제로 삼았다. 주택문제는 ‘살 곳 확보’를 위한 주택공급의 차원을 넘어 경제개발의 차원에서 다뤄진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정부재원은 턱없이 미약했으며 대부분 민간자본의 운용을 통해 주택공급이 이루어졌다. 박정희 정권의 주택정책은 과밀화되는 도시화 과정에서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공성 보장과 경제개발의 원동력으로서의 의미 모두 충족시키지 못했고 1970년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택난에 고통받아야 했다.

한편 아파트 건설은 1950년대 후반 중암·개명아파트 이후 1960년대~1970년대 초에 걸쳐 점차 확대되었지만 주택구성에서는 여전히 단독주택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1970년대 초까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마저도 원하는 주택으로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을 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⁷⁰⁾ 아파트는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근대적 주거양식, 대량생산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으며 확대해갔다. 1960년대~1970년대 초반은 대단지 아파트 건축이 보편화되기 이전의 형태로서 건축양식과 규모, 거주 대상 면에서 다양성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1970년대 초반까지 아파트는 ‘슬럼’과 ‘호화’의 경계에 있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의 일환으로 진행된 시민아파트는 그 조악함과 부실함으로 인해 기피의 대상이 되었고, 그나마도 철거민들이 들어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반면에

69) 박철수, 앞의 책, 2013, 94쪽

70) 1972년 주공에서는 아파트 유형별<주공아파트(화곡/인왕), 공무원(동부이촌동), 상가(현대상가, 진양상가), 맨션(한강맨션), 민영(아현, 용산), 시민(금화, 와우), 시중산층(청운, 연희)>로 표본을 선정하고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파트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주민들은 「원하는 주택형」에 대하여 아파트 38%, 연립주택 1.71%, 단독주택 58.57%, 기타 0.57%, 무응답 1.14%의 분포를 보였다. 대한주택공사, 『아파트 實態調査』, 1972, 72쪽

서구적 생활방식을 영위하며 단지 내 생활권의 인프라를 구축해나가는 단지형 아파트들은 점차 인기를 모아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주택은행을 통한 주택의 시장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고, 공공성과 복지의 측면은 더욱 약화되었다.

유신체제 이후 「주택건설촉진법」(1972), 「아파트지구」 지정(1976), 「택지개발촉진법」(1980) 등은 대단지 아파트의 구성과 아파트 건설을 촉진하고 특히 ‘중산층 주택’으로서의 아파트의 상징성을 강화하여 구축하게 되었다. 주택청약제도와 선분양제도에 기반한 분양중심·수요자부담의 주택시장이 고착화되고, 주택은 ‘사는 곳’을 넘어 부와 축재의 수단이 되었다.

전후 원조에 의한 주택공급의 실시, 서구식 근대화의 지향 속에서 아파트 건설의 확대는 일면 자연스러운 것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아파트가 ‘마이 홈’의 욕망의 대상으로 보편화되고 주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과정, ‘과시적’ 주거양식으로까지 기능하게 되는 것에는 일정한 단절이 존재한다. 연속적일 수 없는 단절을 잇는 고리로서의 정책과 이에 대한 대중의 대응은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미처 다 다루지 못하였으나 금융제도와 세제, 분양제도의 관계는 주택시장의 구조와 관련해서 더 깊이 다뤄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건설기업과 정부/공사/지자체와의 관계, 그 지향과 구상의 차이에 대해서도 보다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개인의 소박한 사적 욕망과 토지와 주택을 둘러싼 경쟁이 만나는 지점, 특정 ‘계층/계급문화’의 형성이 토지/주택의 사적소유의 극대화라는 방식과 어떻게 만나 사회모순을 심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정다혜, 「1960~1970년대 초 주택정책과 아파트」 토론문

김아람

이 글은 현재 한국의 사회경제적인 모순과 갈등을 응축하고 있는 핵심적인 과제이자 1960~70년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두되었던 문제인 주택문제에 대하여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여 다루고 있다. 주택문제는 해방 후 어떤 정부에서도 간과할 수 없었고, 그 정책 내용에 당시 국가와 사회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 해결 방식, 추구하던 방향을 담고 있다. 주택에 관한 역사 연구는 현재 당면한 문제의 기원을 찾는 의미와 함께 당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이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발표자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하고 있으나 이토록 심각하면서도 방대한 주택문제(의 역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토론에서는 문제제기와 함께 발표자의 문제의식을 살려나갈 방법을 모색하고 제안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1. 주제에 대하여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글에서는 단 하나도 중요해지지 않는다.

한국의 주택문제는 정책 차원에서 개발의 수단이자 복지의 방안이기도 하고, 사회(민중) 차원에서는 더 많이, 더 크게 가지려는 욕망이자 최소한의 생존기반이다. 시장과 자본(기업)은 양자를 적절히 활용하며 생성, 성장한다. 1950년대 전후 재건과 구호에서, 1960~70년대 경제개발 과정에서 이 주체들이 공존, 갈등하였다. 발표자는 토론자가 생각하는 이 구도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지금의 글에서는 시기별로 주택정책이 전개되었고, 아파트가 점차 확대되었다는 흐름만 보인다. 시기를 정하거나 어느 주체를 중심에 둘 것인가 결단이 필요하겠다. 아파트에 초점을 맞춘다면 기존의 연구와 달리 무엇을 밝힐 지 결정해야 하는데, 우선 아파트 건설에 관계하는 주체들-정부(주공, 건설부), 건설기업, 수요자(‘중산층’ 또는 서민)는 어떠한가 시민아파트와 아파트단지의 문제, 임대와 분양의 문제 등

이 얽힌다. 발표자가 언급한 아파트 문화, 구조, ‘마이홈’에의 욕망 등도 주제가 될 수 있겠다.

2. 밝히고자 하는 내용에 맞춘 연구사 정리가 필요하다.

문제의식이 분명할 때 그 연구사적 의미도 드러낼 수 있겠다. 이 글에서는 문제의식이 아파트에서 시작되었고, 그에 따른 연구사 정리가 되었는데, 본문에서 다루는 내용은 주택정책 전반이 주가 되고 있다. 주택정책 하에서 아파트가 다루어진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 역시도 어떠한 정책 내용과 아파트를 연결할 것인지 집중이 필요하다. 여기서도 각 정부가 지녔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방침이 당연했다고 전제해서는 곤란하다.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부족은 공통된 문제이지만 해결해가는 방식이 어떻게 아파트로 귀결되었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의 규명과 이를 통한 연구자의 입장이 있어야 한다. 토론자는 1960~70년대 정부의 국토개발, 도시개발 자체에서 이미 대도시 집중을 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고, 정부의 ‘1가구 1주택’ 정책과 지가상승 조장이 아파트 확대에 귀결되었다고 주장했다.

연구사 정리에서는 주제의 연구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에 따라 재분류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 건축학적 연구는 무의미하고 강남개발 자체에 대한 연구도 관련성이 떨어진다. 최근의 연구들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 또한 ‘종합적’이라는 평가를 넘어서 자신의 논증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다루는지 분석해야 한다.

3. 논증과 자료, 서술체계

1) 서론에서의 문제인식을 현재의 문제나 현상에서 시작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만으로는 역사연구의 의미를 강조하기 어렵다. 왜 그 시기 아파트에 주목하였는가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떠한 과제와 연결하려는 것인가로 서술되어야 한다.

2) 전사(前史)를 서술할 때에는 자료에 근거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연구서를 인용하더라도 비판적 독해와 자신의 서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4쪽 “서구식 주택 양식이 점차 일반화되었다”거나 5쪽 “주택공사 설립은~실현되었다”는 문장은 성

급한 일반화이거나 평가가 필요한 내용이다.

3) 1950년대와 5.16군정의 주택정책 차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제개발의 문제로 인식, 주택정책의 체계를 수립했다는 정리는 세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1970년대까지도 주택문제는 주요한 복지정책의 하나로 다루어졌고, 군정 기 정책 체계의 수립 과정과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평가에 이를 수 있다.

4) 1960년대 중반 이후 아파트 확대 장에서는 사실과 현상 외에 분석이 거의 없다. 기존 연구 성과와 정부 자료가 그대로 제시되다보니 왜 아파트가 확대되었는가, 아파트 건설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은 어떠한 과정과 맥락으로 이루어졌는가 등 의문은 해소되지 않는다.

5) 아파트 ‘욕망’에 관하여 본문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는데 결론에서 돌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1970년대에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경계를 아파트가 나누게 되는 과정은 그 역시 주택개발촉진법, 주택담보대출, 철거와 보조금, 분양 위주의 공급 등 정부의 정책과 시장의 목적이 맞물린다.

6) 박정희 정권의 공급 확대 주택정책은 경제개발의 수단으로서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은 그 성과가 특정 부문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므로 분리시켜야 한다.

7) ‘내 집 마련’이라는 개인의 욕망이 아파트 소유를 향한 경쟁으로 나아가는데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결국, 발표자가 주택문제의 해결 방향을 어떻게 짐작/의도하고 있는가.

답사후기

키타자와 아이, 「충주 학우회 답사기」

박윤정, 「2014년도 겨울 근대사 모지 순례 답사」

충주 답사기 : 2014.2.1-2.

키타자와 아이

2014년 2월 1일 토요일, 고대사 전공자에서 현대사 전공자까지, 신입생도 같이 충주 답사로 갔다. 연세대 정문에서 집합하고 진성제 선배의 차로 충주까지 이동할 예정이었고, 선배의 차가 도착할 때까지 먼저 도착한 선배들과 카페에서 기다리다가 차가 도착하자 우리는 충주를 향해 출발했다. 고속도로를 가는 동안, 제가 모르는 지명이 나오면 알려주고, 그 지명의 유래까지 설명해주시는 걸 보고 선배들의 박식과 마음씨의 따뜻함을 느꼈다.

서울에서 2시간쯤 차를 타고 우리는 충주 고구려비로 도착했다. 거기서 김태홍 선배의 차를 타고 온 학형들과 합류하고 전시관 안에 들어갔는데,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맨 마지막의 방에서 고구려비를 봤다. 4면 중 2면은 글이 잘 나오지 않아서 뭘 쓰여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앞면과 왼쪽 측면 일부만은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남아 있었다. (실제로는 고구려비 앞에 전시되어 있었던 해설문을 열심히 읽었다...)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진 않지만, 고구려의 양토 확장의 중요한 증거인 고구려비를 보면서 이것저것 생각을 했다. 고대사 남혜민 학형이 자세한 설명을 해준 것도 좋았다.

전시관을 떠나고 숙소로 가는 길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숙소로 가기 전에 우리는 마트에서 식품을 사서, 다시 차를 타고 숙소로 도착했다. 차를 내렸을 때엔 이제 엄청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날 일본에서는 20년만의 대설이라 하는 정도로 눈이 왔던데 그래도 한국에서는 이 정도 눈은 항상 오겠다는 생각을 했다. 숙소 옆에 있는 가게에서는 스키용품을 파는 것을 보고 왠지 납득하기도 했다.

숙소에서는 남성들이 밥을 준비해주고 그 동안 여학생들은 얘기를 하면서 편하게 쉬었다. 이런 상황도 이제 익숙해졌지만 처음에는 엄청 놀랐다. 일본에서는 남성들이 요리를 하는 동안 여성만 쉬는 장면은 아마도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선배들이 만들어 주신 밥은 아주 맛있었고, 덕분에 즐거운 답사가 오갈 수 있었다. 평소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는 수업시간을 제외하고는 이런 식으로 다

른 시대사의 학형들과 같이 얘기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귀중한 시간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은 남성 방에서 과자를 먹고 술을 마시면서 밤새우도록 다 같이 얘기를 했다. 신입생들의 얘기도 들으면서 재미있게 보냈다. 술자리라고 해도 결국 공부 얘기가 중심이 되어 가는데 그런 자리에서 편하게 하는 공부 얘기가 재미있고 도움이 되기도 한다. 다른 전공의 학형들의 공부에 대한 얘기도 들면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았다. 새벽 3시쯤에 우리는 여성 방으로 들어가서 샤워를 하다가 피곤해서 그냥 잠이 들고 말았다.

아침 9시에 기상하고, 남성 방으로 가더니, 다들 일어나서 아침에 숙소 내에 부설된 온천에 갔다 왔다고 해서 많이 놀랐다. 아침도 남성 선배들이 밥을 준비해 주시고 편하게 얘기하면서 맛있게 먹었다. 12시쯤에 숙소를 나가서 다음으로 충주 미륵사지를 향해 출발했다. 그날은 김태홍 선배의 차를 탔다. 가는 동안 다들 얘기를 하는데 체력이 부족한 저는 혼자 잠이 들었다. 밖에는 어제부터 계속 내린 눈이 쌓여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 퍼지고 있었다.

충주 미륵사지로 도착하고 주차장에서 내리다가 눈을 뵈으면서 미륵사지를 보러 갔다. 눈이 때문에 설명문이 문힌 것도 있었지만, 옆에서 선배들이 설명을 해주셨다. 새전함도 일본의 스타일과 달고, 석불도 역시 일본의 그것과는 표정이나 생긴 모습에 차이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일본에서는 카마쿠라(카나가와현)나 나라(나라현)에 이러한 석불이 많은데, 대륙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러한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일까 생각하기도 했다. 석불 옆에 기와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선배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은 탑을 만들 때 쓰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재미 있었다. 일본에서 그런 습관이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다음으로 탄금대로 갔다. 사실 일본에서 대학교 때 답사라는 것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한국의 대학교에서 하는 답사와 비교할 수가 없지만, 제가 여기서 답사를 갈 때마다 반드시 등산을 한다는 인상이 있다. 처음에는 그게 엄청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익숙해져서 재미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산을 올라가는 동안, 눈에 문힌 아름다운 길거리를 구경하면서 갔는데 역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과 싸우다가 목숨을 바친 신립(1546-1592)의 기념탑이었다. 거기서 선배가 해주시는 설명을 들으면서 일본의 대학원에 갔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한국인의 입장으로 임진왜란을 보는 기회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한테도 알아들 수 있게 쉽게 해설해주는 학형들을 보면서 고마운 마

음도 들었다. 솔직히 아직 설명을 듣고 다 알아들 수 있는 한국어 수준이 아닌 저한테는 그런 착한 학형들이 없이는 같이 답사를 즐길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학형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탄금대 장소 옆에는 월악산 국립공원이 있었지만 이번엔 안가고, 이번 답사 마지막 코스인 불고기 집으로 가고 식사를 했다. 사실 한국에 온 지 약1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명물인 불고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다. 너무 맛있었고 좋은 추억이 되었다. 돌아가는 중에도 역시 잠이 들고, 휴게소에서 진성제 선배에 차로 갈아타고 학교까지 데려다주셨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모르는 지명이 나오면 어린 애같이 물어보고 그 귀찮은 질문 하나하나에 잘 대답 해주신 성제 선배한테 너무 감사를 했다. 이런 시간도 너무 즐거웠다.

이번 답사에서는 한국사 전 전공의 학형들이 모여서 같이 여행을 했다. 평소에는 합연실에서만 가끔 보고 인사할 정도였던 학형들과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고, 신입생들과도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이번의 답사의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외국인인 저에게 있어서는 평소에 혼자 서울을 떠나서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는 기회가 없기에 이런 답사가 많이 도움이 되고, 한국사 공부로서도 얻을 것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답사에서 이틀 동안 차를 운전하시고 무사히 집까지 데려다주신 성제 선배랑 태홍 선배,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시고 답사 진행에 많은 신경을 써주신 김효성 선배와 김호준 선배, 하루 밤을 같은 방에서 보내고 친하게 해주신 남혜민 학형과 김미승 학형, 그리고 그날 처음 뵈었는데도 재미있는 얘기를 같이 해주신 김지훈 학형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 글을 마치고 싶다.

2014년도 겨울 근대사 묘지 순례 답사(2014.1.14)

박윤정

지난 2013년 2학기 근대 사상사 수업이었던 ‘한국근대사특강 I’의 연장선상에서, 김도형 선생님과 함께하는 겨울 답사의 테마를 ‘묘지 순례’로 정하게 되었다. 답사는 ‘김윤식 묘-홍유릉-대원군 묘-조종암-현등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雲養 金允植(1835~1922)은 김육의 9대손으로, 화서학과 이항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봉서학파의 유신환 문하에서 학문을 익히다가 유신환 사후, 숙모 반남 박씨와의 인연으로 박규수 문하에서 수학하게 된다. 그는 19세기 격동기, 친청 노선을 견지하고 김옥균, 박영효 등과 ‘開化’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달리함으로써 조선이 당면한 현실을 타개하고 자강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후, 갑오정권에 적극 참여했으나, 아관파천 이후 제주도 유배형에 처해졌다 1907년 해배되었다. 이후 그는 교육사업, 사회사업, 종교 활동 등을 통해 애국계몽운동을 이끌었다. 1910년 병합 당시에는 오늘날 그를 둘러싼 유명한 논쟁인 “不可不可”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본인은 병합에 반대했다고 주장하였다. 개화의 물결이 요동치던 이 시기에 조선을 이미 유교적 풍속에 의해 개화된 ‘문명의 나라’라고 인식하였던 김윤식의 묘는 별이 잘 드는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에 위치하고 있었고, 묘소 근처에 김윤식의 9대조이자, 영의정을 지낸 김육의 묘가 있었다. 묘지 답사를 가면, 수업이나 글에서 배웠던 역사 인물들을 실제로 만나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의무감(?)’같은 것이 엄습할 때가 매우 잦은데, 대화를 나누기에는 발이 너무 시렸던 것 같다. 하지만 수업 때 논문을 읽고, ‘쪽글’을 쓰고, 발제를 하고, 선생님의 강평을 듣던 이가 누워있는 바로 앞에서 다시 한 번 듣게 되는 김도형 선생님과 노상균 선배의 설명은 보다 현장감 있게 다가왔었다(날이 추워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 듯).

다음 답사지는 대한제국의 황제들이 잠들어 있는 홍유릉이었다. 김윤식의 묘와 멀지 않은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홍유릉은 사적 제207호로,

조선의 26대 왕 고종과 명성황후 민씨의 묘소인 홍릉과 순종과 순명효황후 민씨, 순정효황후 윤씨의 묘소인 유릉의 합칭이다. 홍유릉이 다른 조선 왕릉과 비교해서 두드러지는 차이는,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함에 따라 능역 조성 또한 명나라 태조의 효릉을 본떠 조영하였다는 점이다. 홍릉은 능침의 호석(護石)인 양석(羊石)과 호석(虎石) 대신 기린·코끼리·사자·해치·낙타를 각 1쌍씩, 마석(馬石) 2쌍은 2단의 하대석 위에 위치시켜놓았으며, 다른 왕릉에 있는 정자각(丁字閣)대신 일자형의 침전(寢殿)을 세웠다는 점과 참도가 기존의 어도와 신도의 두 단으로 구성되어있던 것과는 달리 중앙을 좌우보다 한단 높여 세단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다. 순종과 순명효황후, 순정효황후의 동봉삼실릉(同封三室陵)인 유릉은 홍릉에 비해 보다 더 황제릉의 양식을 따라 조성되었으며, 능역은 다소 줄었으나 문·무인석을 비롯한 석물들의 조각이 홍릉의 것보다 사실적이었다. 이번 답사 테마가 ‘묘지 순례’이니만큼 가장 많이 보았던 것 중 하나가 석물들이었는데, 유릉의 석물들은 단연 돋보일 수밖에 없었다. 다른 왕릉이나 묘역의 석물들이 ‘간신히 어떤 동물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이거나, ‘능의 형식상 이런 동물이겠거니 하는 정도’였다면, 유릉의 석물과 石獸들은 굉장히 정밀하고, 위엄이 느껴져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이자 亡國의 황제였던 순종과 매우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아쉬웠던 점은, 홍릉과 유릉 모두 능역 근처에는 가까이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학부 때 동구릉에 속한 선조의 목릉 능역을 근처에서 볼 수 있었던 경험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이번에도 혹시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경계선 근처에 가면 알림이 무섭게 울려서 포기했었다.

점심 즈음에 도착한 홍선대원군 이하응(1820~1898) 묘역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해있다.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살아있는 대원군으로서 권세를 누렸던 홍선대원군의 묘역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험했다. 어린 둘째 아들 고종을 왕으로 세우고, 조대비의 수렴청정이라는 형식 하에 실질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홍선대원군은 안동김씨의 세도 정치를 타파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 하에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하였다. 환곡제를 없애 사창제로 개혁하였으며, 신분과 계급과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고자 하였고, 부분적으로 양전을 실시하여 국가의 재정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의정부와 삼군부를 부활시키고 세도 정치의 중심이 되었던 비변사를 폐지하여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고를 빈곤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자 당쟁의 근원이었던 서원을 대폭 철폐하여 민중의 지지와 동시의 양반의 지탄을 받았다. 그는 왕권의 상징인 경복궁을

재건하고자 하였는데, 이에 막대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원납전 발행, 결두세(結頭稅)·문세(門稅) 등 각종 세금의 징수, 당백전 주조라는 ‘무리수’를 두게 되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대원군 정권의 실책을 논할 때, 가장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였다. 1873년 최익현의 상소를 계기로 해야하게 된 대원군은 고종 친정을 전후하여 민씨 척족들과 정권을 다투다가, 1882년 임오군란에 이르러 추대되었으나 곧 진압을 위해 조선에 온 청나라 이홍장 일파에게 납치되어 청으로 압송되게 된다. 1885년 귀국 이후에도 민씨 척족과 대립각을 세우다가 1895년 대원군존봉 의절에 의해 사실상 연금 상태에 들어가 1898년 2월에 사망하게 된다. 왕은 아니었으나 ‘살아있는 대원군’으로서 왕에 버금가는 지위와 권력을 누렸던 흥선대원군의 묘역은 앞서 말했듯, 찾기가 힘들 정도로 상당히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두 세 번 정도의 갈림길에서 고민을 했는데, 김도형 선생님은 모든 갈림길에서 정답을 선택하셨다! 이 시대 사람들이 묘지를 선택하는 기준을 생각하면서 길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길을 잘 찾을 수 있다고 하셨다(속으로 다른 길을 선택했던 나는 좌절했다...). 파주에 미군부대가 들어서면서 이곳으로 옮겨 온 묘는 6.25 전쟁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다. 문무인석에 보수한 흔적과, 총탄을 빗겨가지 못한 신도비에서 찾을 수 있었으며, 흥선대원군의 묘역 바로 옆에는 은신군과 흥친왕 등 대원군의 직계가족의 납골묘가 있었다.

흥선대원군 묘를 답사하고 난 후 가평군에 위치한 곰탕집에서 수육과 곰탕으로 점심을 먹었는데, 이 맛이야 말로 답사의 묘미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었다. 아침부터 뽕뽕 열었던 몸을 곰탕으로 녹이고(?) 다시 오후 답사를 시작하였다. 다음 답사지는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조종암(朝宗巖)과 현등사(懸燈寺)였는데, 조종암은 숙종 10년(1684)에 송시열이 명나라 의종의 어필인 『思無邪-생각에 사특함이 없다-』를 새기고 효종이 대신에게 내려준 『日暮途遠 至通在心-해는 저물고 갈길은 먼데 지극한 아픔이 마음속에 있네-』이라는 문구를 새기도록 하였다. 여기에 선조의 어필이었던 『萬折必東 再造瀋邦-일만번 꺾여도 반드시 동력으로 흐르거니 명나라 군대가 왜적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다시 찾아주었네-』과 선조의 후손인 낭선군의 글 『朝宗巖-임금을 뵈이는 바위-』을 새기고 제사를 지낸 데서 비롯되었다. 조종암은 제후가 천자를 알현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어, 당시의 유학자들에게 숭명배청의 장소로써 여겨지게 되었으며, 비석은 바위의 바로 앞에 세워져 있었다. 문제는, 우거진 수풀들과 먼자·흙들로 인해 글자 몇 자가 가려져 있었던 점인데, 진성제 선배의 활약으로 결국 걷어낼 수 있었

다. 답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가게 된 현등사는 신라 제23대 법흥왕 때 인도에서 온 마라야미 스님을 위하여 창건한 고찰인데, 현등사 일주문 옆에 조병세, 민영환, 최익현 3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제단인 삼충단(三忠壇)이 있었다. 민영환은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 대한문 앞에 나가 석고대죄 하며 상소를 올리다 결국 항거의 의미로 자결하였고, 조병세는 을사조약 무효와 국권회복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유서 ‘결고국중사민서(訣告國中士民書)’를 남기고 자결하였다. 최익현은 의병 운동을 이끌다 체포되어 대마도에 구금되었다가, 단식으로 뜻을 굽히지 않던 중 순국하였다. 이 삼충단은 1910년에 설치되었다가 1989년 복원되었다. 사실 답사지는 현등사였으나, 지고 있는 해와 ‘대학원생의 저질 체력’으로 인해 초입의 삼충단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하고, 근처에 파전과 도토리묵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며 답사를 마치게 되었다. 원래 기획했던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박정양의 묘는 아쉽게도 각자의 의지에 맡기기로 했다(정경민 선배가 매우 아쉬워했다는...).

2014년 겨울 묘지 답사는 거의 모든 답사가 그렇듯, 유익함과 재미를 모두 갖춘 답사였다. ‘유익함’ 영역의 첫 번째는 직전학기 수업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볼 수 있었다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사상사이니만큼 실제 그 사람의 무덤 앞에서 당시에 그 사람이 했을 생각과 갖고 있었던 이념에 보다 현장감 있게 다가갈 수 있었다는 점이다. ‘재미’ 영역의 첫 번째는 무엇보다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선생님과 동학들과 소풍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고, 학교에서 보다 자유롭게 學談을 나눌 수 있었다는 점, 두 번째는 ‘맛있는 답사 밥’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보았다. 같은 장소를 가고,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각각의 생각과 느낌이 모두 달라, 학우회보에 답사 후기를 쓴다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웠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이라 생각해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셨으면 한다.

— 보고서

고태우, 「일제시기 연구를 위한 자료 접근」

김태홍, 「18세기 조선의 '기술정보' 수집·재생산과 분류인문정」

정예지, 「김옥균의 생애와 사상의 흐름」

일제시기 연구를 위한 자료 접근1)

고태우

1. 소장처 소개
2. 검색 사이트, 데이터베이스(DB) 소개
3. 신문과 잡지, 연감류, 기타 자료 소개

1. 소장처 소개

1) 국가기록원

- 메인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viewMain.do>)
- 1962년 5월 내각사무처 총무과 문서촬영실로 출발하였고 1969년 8월 설립, 총무처→행정자치부 산하로 직제 변동, 2004년 4월 정부기록보존소에서 국가기록원으로 명칭 변경.

- 문서군의 특징 : 각 부국별 공문서 가장 다량으로 있음. 공문서의 문서철 형태. 그러나 일제 말기 중요 정책결정 문서 대거 소각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시기별 문서량의 차이가 큼. 주로 20년대 이후, 30년대 이후로 많아짐. 해방 이후 한 국정부에 의해서 문서 정리 과정에서 많은 기록물이 폐기되기도 함.

- 계속해서 국사편찬위원회와 별개로 해외 소장 일제시기 공문서 수집 작업 진행중.

(참고 예시) 『서고를 누비다 해외기록물 컬렉션 가이드 : 미국, 일본. 상』, 대

1) 이 글은 필자가 2013년 7월 3일 근대사 학우들을 대상으로 방학 중 워크숍을 개최하였을 당시 작성했던 글을 수정한 것이다. 날짜를 적은 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인터넷 주소들이 당시 검색한 날짜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후 인터넷 상황 변화로 그 주소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글의 성격상 제목이 담보하는 완전한 내용을 담는다고는 할 수 없으며, 계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의 모델은 국사편찬위원회 윤덕영 선생님께서 정리한 「한국현대사 연구를 위한 자료 접근」임을 밝힌다. 이 글은 그 일제하 버전으로 보면 될 것이다.

전 : 국가기록원 2009; 『서고를 누비다 해외기록물 컬렉션 가이드 : 미국, 일본. 하』, 대전 : 국가기록원 2009; 이형식, 박찬승 집필, 『海外收集記録物解題 : 日本篇 1』, 대전 : 行政安全部 國家記録院 2010; 박찬승 해제, 『海外收集記録物解題 : 日本篇 2』, 대전 : 行政安全部 國家記録院 2011 등

- 국가기록원 문서의 접근

① 온라인 접근 : 나라기록포털 검색을 이용, 또는 기록물 온라인 사본 신청 가능

<http://contents.archives.go.kr/next/mypage/listMyArchive.do>

② 오프라인 방문

- 소장처 : 국가기록원 본원(대전) / 서울기록정보센터(서울 경복궁역, 광화문역) / 대통령기록관, 나라기록관(성남) / 역사기록관(부산)

- (구)기록물 목록/색인 : 「정부기록보존문서 총괄목록」(1974-1996); 「정부기록보존문서 색인목록」(총괄목록 1·2집(총독부문서)의 색인); 『國家記録院 日帝文書解題』(분야별로 십수 권); 『조선총독부 공문서 종합목록집』(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엮음: 한울, 2005); 『조선총독부 공문서 다계층 상세목록집』(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엮음: 한울, 2005) 등 참조

2) 국립중앙도서관

- 조선총독부 도서관을 모체로 함

- 홈페이지(<http://www.nl.go.kr/>)

- 총독부 도서관(도서관측 용어로는 ‘구 동양서 문고’)에서 소장하고 있던 문헌 자료와 잡지를 인터넷상으로 공개.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일본을 가지 않더라도 상당히 유용한 자료들을 집에서 손수 열람하여 출력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 일부 자료는 ‘협약도서관’에서만 열람 가능하거나, 직접 찾아가야 가능함.

-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심이 된 국가전자도서관(<http://www.dlibrary.go.kr/>)을 통해서면 여러 잡지를 이미지 파일로 열람 가능.

⇒ 관보(1894~1945년), 1945년 이전 신문(강원일보, 고려시보, 공립신보, 광명일보, 농민주보, 대동신문, 대중일보, 대한매일신보, 동광신문, 동방(方)신문, 동방(邦)신문, 만선일보, 만세보, 매일신보, 무역신문, 문화일보, 민보, 민주일보, 민주중보, 상업일보, 시대일보, 신한민보, 예술통신, 우리신문, 전국노동자신문, 제국신문, 해양연구소보, 조선중앙일보, 중외신보, 중외일보, 현대일보, 황성신문), 단행자료, 연

속간행물 귀중본, 일본어자료(~1945) 등등.

- 기타 『朝鮮新聞』²⁾이라든가, 해방 이후 잡지 등 희귀본과 관련된 해제 및 자료 공개 작업이 2013년 말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앞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함.

- (참고 자료) 단행본과 관련한 해제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45년 이전 한국 관련 자료 해제집』 1~6,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7~2011 등. 이 시리즈는 2014년 중 목록집이 추가로 발간될 예정이다.

3) 국사편찬위원회

- 가장 광범위하게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한국사 전반에 걸친 자료를 수집·정리.
- 과거 서울지방검찰청, 대검찰청 등으로부터 일제시기 경찰·검찰에서 작성한 심문조서 및 정보철 등 이관됨.

- 고려대 아연 소장 경무국 문서도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이관됨.

- 90년대 말~2000년대(현재까지) 계속해서 대규모로 해외 자료수집 이전 사업 전개함. 예) 일본 외무성 茗荷谷研修所 구장 문서(묘가타니 문서),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문서, 일본 국립공문서관 문서,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문서 등. 기타 가쿠슈인대학 동양문화연구소 우방협회 문고, 시가현립대학 도서관정보센터 소장 박경식 문고, 기타 일본 내 여러 주요 도서관 자료 수집 진행중.

- 국편 소장 자료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후술)에 핵심 연계 자료군이 되어, 현재 인터넷 등에서 (<http://db.history.go.kr/> ; <http://archive.history.go.kr/> 등) 상당수 공개. 여전히 미공개된 자료들이 많은데, 우선 현재까지 수집된 목록은 국편 웹사이트 내 ‘전자자료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장이 확인되면 직접 찾아가서 열람 가능.

- 계속 수집 중이기에 틈틈이 확인 필요. 해외에서 어렵게 수집된 자료가 많으므로, 여기에 있는 자료만 잘 수집해도 논문 구성이 가능하다는 그쪽 방면 선생의 전언.

- (참고 자료) 『韓國關聯 海外 史料 所藏 目錄集』, 과천: 國史編纂委員會 1995; 『해외소재 한국사자료 수집목록집』 1~5,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1(1권 총목·일본편, 2권 미국편1, 3권 미국편2, 4권 미국편3, 5권 미국편4); 崔書勉 編, 『일본의

2) 인천에서 발간된 재조일본인 신문, 일제시기 전 시기를 총망라. 『경성일보』 등 관변신문과는 차별되는 논조를 보임.

무성외교사료관 소장 한국관계사료목록 : 1875~1945』,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3; 『금병동 문고 도서목록』,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8 등 다수

4) 국립국회도서관

- 구 육해군 관계 문서(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자료 일부인 ‘일본 외무성·육해군성문서’의 마이크로필름 복사본) (참고) 전체목록은 국회도서관, 『일본 외무성 및 육해군성문서 마이크로필름 목록: 1867-1945』, 국회도서관, 1968; 그 중 일부는 국회도서관, 『일본외무성육해군성문서 1~5』, 국회도서관, 1975

- 齋藤実關係文書 마이크로필름 전질 소장. (참고) 관계문서 목록집 4권³⁾

국내에서 간행된 『재등실문서』(고려서림, 총 17권)은 위 관계문서의 일부분을 모은 것. 빙산의 일각.

- 기타 웹상으로 원문 이미지 볼 수 있는 자료 많음. 때로는 당시 문서를 직접 대출도 가능.

- 협력도서관(연대 포함)에서 이미지 파일 직접 볼 수도 있음.

5)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성제대 도서관의 후신

- 경성제대 교수 시카타 히로시(四方博)가 수집한 신문자료를 국편과 역통에서 볼 수 있음. 현재 구할 수 없는 일본어 지방지와 만주에서 발행된 신문의 스크랩 기사 포함됨.

- 소장 자료 검색은 되지만, 보관상 공개를 제한하는 자료도 상당수 있는 듯. 그럼에도 직접 원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참고)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소장 「경제문고」 해제집』(권태 역 외)

6) 고려대학교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경무국 문서군 소장. 김준엽·김창순이 60년대 정부 지원 아래 일제시기 공산주의운동 연구하던 중 참고 자료를 이관받은 것으

3) 國立國會圖書館 編, 『齋藤實關係文書目録』(書類の部) 1~2, 東京:日本國立國會圖書館, 1995; 2. 國立國會圖書館 編, 『齋藤實關係文書目録』(書翰の部) 1~2, 東京:日本國立國會圖書館, 1995 등 총 4권. 사이토문서는 1920년대 조선 상황을 파악하는 데도, 일본 육해군 관계나 근대 일본의 정치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료.

로 알려짐. (참고)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희귀문헌 해제: 구조선총독부 경무국 항일독립운동관계 비밀기록』, 고려대 출판부, 1993

- 도서관 차원에서는 최신 근현대 서적 수집 가장 잘 되는 편. 서울대 연대보 다도..

7) 연세대학교

- 연희전문 시기 자료들 다수. 일제시기 원문 자료(희귀본) 다수 소장.
- 2013년 말부터 학술정보원 예산이 배정되어 한말 이후 시기 잡지나 서책류에 대한 해제 및 영인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8) 남산도서관, 종로도서관

- 남산도서관 : 1922년 개관한 경성부립도서관을 모체로 함. 국립중앙도서관이 나 서울대도서관 등에 없는 희귀자료 소장됨.

- 종로도서관 : 1920년 종로구 가회동에서 경성도서관으로 출발. 1926년 경성부립도서관 종로분관으로 개칭됨. 해방 후 서울시립 종로도서관이 됨. 남산도서관에 비하여 규모가 작지만, 마찬가지로 『京畿道報』 등 희귀자료 소장됨.

- 종로도서관 고문헌원문검색서비스-지도, 지적정보

<http://jongnolib.koreanhistory.or.kr/dirservice/main.do>

⇒ 축척은 1:50000. 제작시기는 주로 1918년.(1919년, 26년도 보임) 지지자료는 1928~30년. 한국사데이터베이스로도 제공.

9)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춘천 소재. <http://japan.hallym.ac.kr/>

- 일본학 관련 최신 연구서적 수집, 국내에서 가장 풍부한 편.

- 일본학DB 구축 사업을 진행중이며, 그 중에서 특히 『読売新聞』 검색 및 기사 출력 가능(연구소 내 단말기 사용), 『朝日新聞』(외지판) 등 영인신문 열람 가능.

10) 서강대 로올라도서관

- <http://library.sogang.ac.kr/>

- 소장중인 일제시기 도서 및 잡지를 pdf 파일로 제공중. 한번 자료를 쓸어모을 필요 있음.

11)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서양고서 원문DB

- <http://www.e-coreana.or.kr/>

⇒ 명지대-LG연암문고에서 소장 중인 638권의 서양고서 원문을 이미지 및 번역목차, 색인어 검색 서비스를 하고 있음.

12)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근대한일외교자료 / 자료실안내-고문헌실(특성화)

- <http://www.siminlib.go.kr/>

- <http://siminlib.koreanhistory.or.kr/dirservice/listSMLMain.do>

⇒ 1901년 10월에 시작되어, 1919년에 부산부립도서관을 거침. 해방전 일본서적 18,400여책 소장. 폐가제로 운영중. 일부만 ‘근대한일외교자료’를 통해 원문 제공. 부산일보, 조선시보 제공.

13)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학중앙연구원

- 설명 생략. 각 홈페이지 참조

14) 여러 박물관**① 서울역사박물관**

- <http://www.museum.seoul.kr/>

⇒ 자료실-박물관간행물-출판도서. 각종 자료집 PDF

②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

- <http://portal.nricp.go.kr/>

국립문화재연구소 일제강점기자료관

- <http://portal.nricp.go.kr/japancolony/web/intro.jsp>

⇒ 조선고적도보, 조선고적조사보고

③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일제강점기자료 연구

<http://www.museum.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list?boardtypeid=198&menuid=001006007001>

⇒ 공문서 목록집, 유리건판 목록집 등.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http://modern-history.museum.go.kr/program/coldocu/page_list.jsp

⇒ 2014년 1월부터 공개된 자료.

15) 기타

- 이에 관해서는 아래 <검색 사이트>에서 보충하기로 한다.

16) 해외

- 미국
- 일본
- 중국
- 대만 등4)

2. 검색 사이트, 데이터베이스(DB) 소개5)

- 국내 -

1)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역통) : <http://www.koreanhistory.or.kr/>

연계사이트 - 공훈전자자료관(국가보훈처),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근대한일외교자료(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조선총독부관보데이터베이스, 국편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독립기념관), 종로도서관 고문헌 원문 검색 서비스(종로도서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한국족보자료시스템(성균관대 존경각), 한국고전번역원, 민주화운동 아카이브시스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등

* 국편 및 역통에서의 자료 DB 쉽게 만드는 요령은 싸이월드 클럽 학우회 홈

4) 해외 한국학 또는 한국 근현대사 연구소에 관해서는 일일이 소개할 여유가 없어 앞의 국가기록원과 국사편찬위원회 설명 부분 중 (참고 자료)를 참조할 것.

5)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 목록은 주성지, 『역사자료DB목록』 참조. 이 목록은 2013년 한국역사연구회에서 주성지 선생의 초청강연 때 소개된 것으로, 학우회 싸이클럽에도 이미 올려져있다. 주성지 선생의 목록도 주요한 것만을 꼽은 것으로 누락된 DB도 많다.

피 「역통이나 국편 등에서 목록 쉽게 만드는 요령」(고태우, 2012.6.14 게시) 등 참조.

2) 국가전자도서관 <http://www.dlibrary.go.kr/>

3) 국가지식포털 (<http://www.knowledge.go.kr>)

: 국가기관, 위원회 기록물 통합 검색 가능.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근대 이후 현행시기까지 법조문 검색 및 국내판례, 법령 및 대법원 예규내규 검색 가능, 법률 문헌색인도 검색 가능.

5) 한국국가기록연구원 (<http://www.rikar.org>)

: 1999년 발족, 국가기록 관련 문의 가능. 「기록학연구」 발간.

6) 법원도서관 (<https://library.scourt.go.kr/>)

: 한말 민사 판결문, 조선고등법원판결록 등 검색 가능. 법 관련 귀중본 고서류 (근현대 시기) 전자책 열람 서비스 제공.

(예시) 각종 일제시기 민·형사 소송법 재판자료; 민적예규; 『구한국관보』(1894~1910); 『조선총독부관보』; 『조선법령집람』; 『사법공보(법원공보)』(1953~79) 등등

7) 한국현대사통합데이터베이스 (Kdatabase)

: 연세대 학술정보원 통해 접속 가능. 시기별, 분야별, 저자별 자료 및 저서·논문 원문보기 제공.

⇒ 원문제공 자료 : 사상휘보, 재등실문서, 특고월보, 소화특고탄압사, 조선총독부 외곽단체자료집, 일본외무성 특수조사문서철, 일제하 사회운동사총서, 일제하 사상정세시찰보고집, 대한제국기 정책사자료집, 해방직후 주요문헌 자료집, ‘평양주재 소련대사관 비밀문서철, ‘평양주재 소련대사관 공개문서철, 국가재건최고회의보(창간1호-중간27호), 여순사건자료집, 제주4.3자료집(1945-1950), 남로당자료집(1945-1950), 한국현대사 미국관문서자료집(1940-1970), 미국의 대한주간보고서자

료집, CIC 정보보고서자료집(1945-1950), 해방전후 미국의 대한정책사자료집, 해방전후사 영문논저자료집, 한국분단사자료집, 해방직후 정치사회사자료집 등.

⇒ 이 중 ‘재등실문서’(앞서 소개한 사이트문서 중 17권 축약 영인본), 사상휘보, 특고월보, 조선총독부 외곽단체자료집, 일본외무성 특수조사문서철, 일제하 사회운동사총서, 일제하 사상정세시찰보고집 등이 주목됨. 기타 해방 이후 남북한 관련 자료집 등도 원문 제공됨.

8) 누리미디어 KRPIA <http://www.krpia.co.kr/>

: 연세대 학술정보원 통해 접속 가능.

⇒ 서비스 자료 : 남로당연구자료집, 대한계년사, 북한연구자료집, 뼈라로 듣는 해방 직후의 목소리, 사상, 소년한반도, 역비한국학연구총서, 이정박현영전집, 제주민중항쟁(자료집), 한국공산주의운동사, 한국전쟁기 문학수기제도자료집, 한국사회주의운동사 인명사전, 부인·신여성 등.

9) 동방미디어 한국학DB <http://gate.dbmedia.co.kr/>

: 연세대 학술정보원 통해 접속 가능.

⇒ 한성순보, 한성주보, 일제 강점기민족지압수기사모음, 사상계, 매일신보(~1920), 사서삼경 등.

10) 동학농민혁명종합지식정보시스템

<http://www.e-donghak.go.kr/index.jsp>

11) 서울지도들

<http://gis.seoul.go.kr/index.jsp>

- 해외 -

1) 일본국립국회도서관

: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라 할 수 있음. 헌정자료실, 근대디지털라이브러리 등등 활용. <http://www.ndl.go.jp/>

- (예시)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사이트문서, 오노문서(大野緑一郎關係

文書)⁶⁾ 등 원본 및 마이크로필름 소장.

- (연계 사이트)

① 제국의회회의록 검색시스템 : <http://teikokugikai-i.ndl.go.jp/>

② 근대디지털라이브러리 : <http://kindai.ndl.go.jp/> 단행본 등 원문자료 볼 수 있음.

③ 디지털 콜렉션 : <http://dl.ndl.go.jp/>

④ 近現代日本政治關係人物文獻目錄 : <http://mavi.ndl.go.jp/seiji/>

⑤ 일본법령색인 : <http://hourei.ndl.go.jp/SearchSys/>

- Tip 하나 : 국회도서관 내에서 디지털라이브러리나 디지털 콜렉션 자료 등 이 미지보기가 제공되는 모든 자료의 인터넷창에서 ‘인쇄하기’를 누르면 최대 20장 까지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를 페이지를 나눠 여러 번 하면 하나의 PDF 파일로 묶어낼 수 있는 것.

2) 아시아역사자료센터(JAKAR)

: 일본의 국립공문서관, 외무성 외교사료관, 방위청 방위연구소 소장하고 있는 각종 아시아 관계 역사 자료 수합 및 디지털화. <http://www.jacar.go.jp/>

-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 단어로 검색하면 의외의 자료를 발견할 수 있다. 굳이 일본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볼 수 있는 자료가 많은 것!!

3) CiNii

: 일본 쪽 논문 및 책 검색. 일부 원문 볼 수 있는 것도 있음. 목차나 자료 소장처 알 수 있음. <http://ci.nii.ac.jp/>

4) 大阪府Web-OPAC横断検索

: 오사카 내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여러 도서관 등 소장 자료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http://copac.library.pref.osaka.jp/cgi-bin/book.cgi>

5) 神戸大学新聞記事文庫 : <http://www.lib.kobe-u.ac.jp/sinbun/>

⇒ 동경발행의 국민신보, 시사신보(동경시사신보), 중외상업신보(일본산업경제신

6) 오노 로쿠이치로: 미나마미 총독 시기 정무총감. 이 자료는 제국의회, 참정권, 징병제, 징용, 지원병, 전시 통제경제, 친일 단체, 예산, 노동, 지방, 언론, 조선군 등등 많은 중요 문서 망라됨.

문), 동경조일신문, 동경일일신문, 보지신문, 법률신문, 독매신문(요미우리신문), 만조보, 요코하마무역신보 등과 관서발행 대판조일신문, 대판시사신보, 대판매일신문, 코베신문 등과 기타지역 발행의 경성일보, 대만일일신보, 만주일보(만주일일신문) 등을 제공. 기사별로 나뉘어서 제공하며, 텍스트를 따올 수 있음.

6) 도쿄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근대 조선관계 서적 데이터 베이스 :

<http://www.ioc.u-tokyo.ac.jp/~koreandb/>

7) 가쿠슈인 동양문화연구소 :

<http://www.gakushuin.ac.jp/univ/rioc/knowledgecenter/index.html>

http://www.gakushuin.ac.jp/univ/rioc/vm/c03_yuuhou/index.html

⇒ 우방협회는 구조선총독부관료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그곳 자료인 우방문고와 조선총독부녹음기록(총418개)을 소장하고 있음. 디지털로 제공하는 것은 극히 일부.

<http://glim-els.glim.gakushuin.ac.jp/webopac/catsrr.do>

⇒ ‘우방문고’를 체크하고 ‘近代史料研究会’로 검색하면, 대략적으로 녹음기록 목록이 나옴. 전부는 아님.

8) 일본고서적 검색

①本の枝折 : <http://www.crypto.ne.jp/shiori/>

②日本の古本屋 : <http://www.kosho.or.jp/>

- 생각보다 저렴하게 자료나 연구서적을 구입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보통 항공우편으로 우송)

- 약간의 일본어 글쓰기가 가능하다면 더욱 좋다. 필자 경험상으로는 가입 상점이 대체로 친절하고 신용도 좋음.

9) 일본에서의 논문 목차 검색

: <http://zassaku-plus.com>

10) 戦後日本における朝鮮史文献目録

: <http://www.zinbun.kyoto-u.ac.jp/~mizna/sengo/>

- 1945년 이후 일본 국내에서 발표된 조선사 관계 문헌 데이터 수록

11) 朝鮮史研究会 : <http://www.chosenshi.gr.jp/>

12) 한국·조선문화연구회(지역연구) : <http://askcs.jp/index.html>

13) 朝鮮關係論文データ検索システム(무궁화회 자료, 강제연행자료 목록) :
<http://www.han.org/a/lib/#usage>

14) 쿠라토미 유사부로(倉富勇三郎) 일기 연구 사이트
<http://nagaikazu.la.coocan.jp/kuratomi/kuratomi.html>

⇒ 통감부 시기에 법무차관으로 부임해, 일한병합 이후 조선총독부 사법부장관으로 복무. 1914년에 제1차 야마모토 내각에서 법제국장관에 취임했고, 귀족원 의원, 추밀원 고문관 등을 거침. 이 일기는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에 소장중.

15) 일본 각종 사전

<http://homepage1.nifty.com/kitabatake/index.html>

⇒ 일본육해군사전, 일본전전관료사전, 식민지행정관사전 등 참고하기 좋음.(다만 근거가 미약하므로 당장 인용하기는 적절치 않음.)

16) 일본 쪽 아카이브 정리 사이트

<http://www.ne.jp/asahi/archivists/support/archives-links-2013.html>

17) 일본 해외 신사

<http://www.himoji.jp/database/db04/index.html>

18) 일본어초서 검색 사이트

<http://www.wap.hi.u-tokyo.ac.jp/ships/shipscontroller-e>

⇒ Database List-Tools-Kuzushi ji(草書)

19) 와세다대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자료 등등

<http://dspace.wul.waseda.ac.jp/dspace/>

20) 히토츠바시 대학 논문 서비스

<http://hermes-ir.lib.hit-u.ac.jp/ir/index.html>

21) 호세이대학교 오오하라 연구소

<http://oohara.mt.tama.hosei.ac.jp/>

3. 신문과 잡지, 연감류, 기타 자료 소개

- 신문 검색 및 원문 보기 -

⇒ 조선일보 아카이브, 동아일보 아카이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등에서도 제공.(위의 내용들 참고)

1) 한국언론진흥재단 고신문 검색 : <http://www.kinds.or.kr/>

- 독립신문, 한성순보,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 한말 각종 신문 및 『每日申報』 등 검색.

2) 네이버 디지털 뉴스 아카이브 : <http://dna.naver.com/>

-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제공됨.
- 기사를 텍스트화해서 보기 편하지만 텍스트는 오류가 많고, 기사는 복사 등 편집이 불가능하지만, 본문까지 검색되기 때문에 역통에서의 동아일보 검색 등에 비해 검색 결과 훨씬 많이 잡힘.

3) 조선일보: 조선일보 자체 구축 아카이브 <http://archive.chosun.com/>

- 연세대 학술정보원 홈페이지 통해 접근 가능.
- 검색어 시스템이 불완전해서 검색 돌릴 경우 누락될 가능성 높음. 전 지면 pdf 볼 수 있음.

4) 경성일보: http://www.kstudy.com/kyungsung_new/index02.asp

- 연세대 학술정보원 홈페이지 통해 접근 가능. 날짜별로 다운로드 가능.

- 잡지류 : 종류가 많은 관계로 다음을 참조하라.

(참조) 김근수, 『한국 잡지 개관 및 호별 목차집』, 영신아카데미 한국학연구소, 197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각 잡지 해제; 임경석 편저, 『동아시아 언론매체 사전 : 1815-1945』, 논형, 2010.

- 연감류 -

『조선총독부통계연보』(고려서림, 1987)

『조선총독부관보』(아세아문화사, 1984 및 국립중앙도서관 인터넷판. 관보 기사 검색7)

『조선총독부시정연보』(국학자료원, 1984)

『조선연감 1934-1945』(고려서림, 1992)

『조선지방재정요람』 등등 다수

- 자료집 -

신주백 편, 『일제하 지배정책자료집』 1~17, 고려서림, 1992

민족문제연구소 편, 『日帝下戰時體制期政策史料叢書』 1~98, 학술정보주식회사, 2000⁸⁾

김봉우 편, 『일제하 사회운동사자료집』 1~12(?), 한울, 1989~1991(?)

김경일 편, 『일제하 사회운동사자료집』 1~10, 한국학술정보, 2002

김승태 편역,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 : 기독교편, 1910~1945』,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신주백 편, 『전시체제하 조선총독부외곽단체자료집』 1~30, 고려서림, 1997

김채수(책임편자), 『일제강점기 일본어 잡지 자료집 : 목록과 목차』, 보고서, 2004

방기중 편, 『일제 파시즘기 한국사회 자료집』 1~8, 선인, 2005

7) 조선총독부관보 활용시스템(<http://gb.nl.go.kr/>) : 상당기간 동안 1916~27년 부분이 검색이 제공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가능해진다고 전해진다.

8) 특히 이 자료는 연구가 아직 많이 축적되어 있지 못한 전시체제기 자료로서는 집대성한 것. 연세대 학술정보원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http://www.kstudy.com/japan/index.htm>

김도형 엮음, 『식민지시기 재만조선인의 삶과 기억』(총 5권), 선인, 2009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2005~2010
국사편찬위원회, 『일제강점기의 교육』(2010), 행정(2011), 사법(2012) 등등 편찬
하고 있음.
등등 다수.

일본에서 공간된 영인본도 다수. 잡지류도..

『일본식민지조선교육정책사료집성(조선편)』 1~74, 용계서사, 1987~1991
渡辺学 編, 『식민지조선교육정책사료집성』 1~62, 용계서사, 1987~1991
근현대자료간행회 편, 『식민지사회사업관계자료집(조선편)』 1~56, 근현대자료간
행회, 2000
『友邦シリーズ』 1~15, 友邦協會, 1966~69⁹⁾
금병동 편, 『조선총독부 제국의회설명자료』 1~10, 불이출판, 1994
『조선총독부 제국의회설명자료』, 불이출판, 2000
『現代史資料』(みすず書房, 1964~1970)
『일본인물정보대계 71~80 조선편 1~10』, ゆまに書房, 2001 - 재조일본인 관련
인물 다수.
박경식 편,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 1~5, 三一書房, 1976
박경식 편, 『조선문제자료총서』 1~10, アジア問題研究所, 1981~84
水野直樹 編, 『전시기식민지통치자료』 1~7, 柏書房, 2000
水野直樹 編, 『조선총독유고·훈시집성』 1~6, 綠蔭書房, 2001
樋口雄一 編, 『전시하조선인노무동원기초자료집』 I~V, 綠蔭書房, 2000
등등

- 사문서 및 개인기록, 구술자료 :

누락된 것이 많지만 근현대 시기 각종 일기류 자료 및 연구에 대한 목록은 정
병욱 이타가키 류타 편, 『일기를 통해 본 전통과 근대, 식민지와 국가』, 소명출판,
2013, 「근현대 일기 자료·연구 목록」(432~446쪽) 참조.

9) 가쿠슈인대학 동양문화연구소 내 소장되어있는 우방협회 관련 최신 목록은 學習院大學東洋文化研究
所 編, 『友邦文庫目錄』, 東京: 勁草書房, 2011 참조.

- 지방지 -

경인문화사 편집부 편, 『韓國地理 風俗誌 叢書』 시리즈, 서울: 경인문화사 편집부, 1989~1995 - 총 400권

韓國人文科學院 編輯部 編, 『韓國 邑誌總覽 - 韓國 近代 邑誌』, 서울 : 韓國人文科學院 1991 - 60여 권

韓國人文科學院 編輯部 編, 『韓國 邑誌總覽 - 韓國 近代 道誌』, 서울 : 韓國人文科學院 1991 - 編輯委員: 李相泰. 총 23권

등 다수

* 참고문헌

- 김익한, 「일본 내 한국근대사 관련자료 이용법」, 『역사와 현실』 21, 1996
- 정혜정, 「일본내 한국 관계 자료 연구-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문서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73, 1997
- 신주백, 「지배자들의 내면 읽기-조선총독부 관계자들의 녹음 기록」, 『역사연구』 8, 2000
- 정혜경, 「일제 말기 전시 동원 체제 관련 자료 연구-국내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해방 전후사 사료 연구 1』, 선인, 2002
- 국사편찬위원회, 『일본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I -국립공문서관·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외교사료관 외』, 국사편찬위원회, 2002
- 白木澤旭兒, 「조선인 강제연행관계자료에 관하여」, 『사학연구』 70, 2003
- 辻弘範, 「한국근대사 관련사료의 수집·편집현황과 전망-우방문고 조선총독부 관계자자료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70, 2003
- 박맹수, 「홋카이도 지역의 ‘조선인’ 강제연행 자료에 대하여」, 『한일민족문제연구』 4, 2003
- 이해준 외 편저, 『현장조사와 정리를 위한 근현대 지방자료 쉼 열기』, 과천 : 국사편찬위원회, 2003
- 坂本悠一·木村健二, 「滋賀大學經濟經營研究所所藏の植民地朝鮮關係資料について」, 『滋賀大學經濟學部 創立80周年記念論文集』, 滋賀大學經濟學會, 2003
- 井村哲郎, 「植民地史資料論」, 檜山幸夫 編, 『臺灣總督府文書の史料學的研究-日本近代公文書學研究序說』, ゆまに書房, 2003
- 국사편찬위원회, 『일본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II』, 국사편찬위원회, 2004
- 이준식, 「파시즘기 정책사 자료의 현황과 성격」, 방기중 편, 『식민지 파시즘의 유산과 극복의 과제』, 혜안, 2006
- 전상숙, 「파시즘기 지성사 연구와 자료 문제」, 방기중 편, 『식민지 파시즘의 유산과 극복의 과제』, 혜안, 2006
- 정병욱·이타가키 류타 편, 『일기를 통해 본 전통과 근대, 식민지와 국가』, 소명출판, 2013, 「근현대 일기 자료·연구 목록」
- 윤덕영, 「한국현대사 연구를 위한 자료 접근」

18세기 조선의 '기술정보' 수집 · 재생산과 漂流人間情

김태홍

1. 머리말
2. '기술정보' 수집 기제로서 漂流人間情
 - 1) 漂流人間情의 대두와 '기술정보' 수집역할
 - 2) 영조대 수확고 증대와 '농업기술정보' 수집
3. 정조대 漂流人間情 다변화와 '기술정보' 재생산
 - 1) '표류선기술정보' 수집 다변화와 舟橋제작
 - 2) 정약용의 間情개혁 구상과 利用監설치 구상
4. 맺음말

1. 머리말

전근대 동북아시아 관계는 정치·문화·경제·기술 등 다양한 층위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층위적인 전근대 동북아시아 관계를 단순히 조공체제 혹은 중국 중심적 경제권¹⁾으로 설명한다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중국 중심적 시각으로 전근대 동북아시아 관계를 설명한다는 것은 중국 이외에 여타 국가들을 피동적인 존재로 전제함으로써, 그들의 복잡다단한 역사상을 간과할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중심적 시각에 천착했을 때, 조선의 다각적·자발적인 기술수집노력을 간과하고 조선이 전근대적 기술 양태를 벗어날 수 없었다는 시각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중국으로부터 조선은 선진기술을 신속히 수집하여 비교적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새로운 시대에서는

1) 이매뉴얼 윌러스틴 세계체제이론에 대항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던 프랑크 그리고 윙과 포메란츠 등 캘리포니아 학파는 유럽 중심적 시각을 극복하였다는 연구 성과가 인정된다. 그러나 유럽의 대항으로서 동아시아 전체적 맥락을 살피기보다는 중국 중심적 시각을 견지하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자립적 발전의 폭과 속도가 오히려 제한 받을 수밖에 없었다.’²⁾는 설명은 중국의 절대적 영향력 속에서 조선의 주체적 기술수집노력과 변화의지를 배제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18세기 조선에서 주체적으로 선진기술을 도입하려던 움직임이 있었고, 이로 인해 자립적 발전의 폭과 속도에 제한받지 않았다는 시각을 견지하고자 한다. 우선 기존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선에서 대외정보 수집을 위한 정기적·공식적 루트는 연행사였다.³⁾ 문제는 연행사를 통해서 확보했던 정보가 중국 ‘정세정보’에 편중되었고,⁴⁾ 이는 연행사가 異國을 방문하여 禮式을 치르는데 주요 목적이 있었다는데 기인하였다.

이와 달리 조선에서 비정기적·비공식적으로 대외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던 루트는 漂流人⁵⁾을 問情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이었다. 조선에서 異國人을 상대로 이루어졌던 漂流人間情은 연행사를 통한 정보수집보다 다양성과 주체성을 확보하기에 적합하였고, 중국 ‘정세정보’는 물론이고 선진 ‘기술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로였다. 기존 연구에서도 조선정부의 漂流人間情은 대외정보수집 기제였다고 설명하며,⁶⁾ 「漂流人間情別單」을 포함한 표류 기록물들의 활용 양상을 확인하였다.⁷⁾

다만 이들 연구는 漂流人間情을 시대상과 맞물려 종적으로 분석하기보다 통시·단편적으로 분류함으로써, 漂流人間情의 변화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漂流人間情으로 수집한 대외정보의 재생산 구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변화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조선의 ‘기술정보’ 수집노력과 주체적인 재생산 의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조선의 대내적 상황과 조응하는 ‘정보수집’ 기제였던 漂流人間情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활용한 ‘기술정보’ 수집과 재생산 구상을 試論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2) 강진아, 2005, 「16~19세기 동아시아무역권의 세계사적 변용」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창비, 67쪽.

3) 김창수, 2008, 「17세기 대청사신의 ‘공식보고’와 정치적 파장」,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 송미령, 2009, 「17~18세기 조선정부의 몽골 이해」 『중국사연구』62 ; 우인수, 2010, 「17세기 후반 대만 정씨 해상세력에 대한 조선의 정보 수집과 그 의미」 『대구사학』100 ; 홍성구, 2010, 「『朝鮮王朝實錄』에 비친 17세기 내륙아시아 정세와 「寧古塔回歸說」」 『中國史研究』제60집 ; 연갑수, 2010, 「영조대 對淸使行的 운영과 對淸關係에 대한 인식」 『한국문화』51 ; 백옥경, 2012, 「18세기 연행사의 정보수집활동」 『명청사연구』제38집.

4) 백옥경, 2012 위의 논문, 221쪽.

5) 본 보고서에서 ‘漂流人’에 해당하는 대상은 외국인으로서, 「漂流人間情別單」에 기록된 漢人으로 한정하였다.

6) 반윤홍, 2005, 「조선 후기 비변사의 국외정보 파악 양상」 『한국사학보』제20호, 고려사학회.

7) 고석규, 2008, 「조선시기 표류경험의 기록과 활용」 『島嶼文化』제31집,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2. '기술정보' 수집 기제로서 漂流人間情

1) 漂流人間情의 대두와 '기술정보' 수집역할

漂流人間情을 邊情과 관련된 것 혹은 대외정보수집 원천으로서 인식하여 구체적인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한 것은 양난이후에 해당하는 조선후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조선전기에도 漂流人을 서울로 압송하여 예부에서 推問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지만,⁸⁾ 問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推問을 공식적인 別單으로 기록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임진왜란·병자호란 이후에 해당하는 인조 19년(1641년)에 들어와 漂流人을 추문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의미로서 問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⁹⁾ 더욱이 漂流人間情의 결과물로서 入啓되었던 「漂流人間情別單」은 숙종10년(1684년) 이후부터 『비변사등록』과 『일성록』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 漂流人間情은 두 차례로 진행되었다.¹⁰⁾ 1차로 표류인이 발생한 현지에 사역원 소속의 領來譯官(問情譯官)을 파견하여 問情記를 만든 후에 표류인을 서울 弘濟院으로 領來하였다. 2차로 서울에서 비변사 낭청과 差備譯官이 함께 표류인을 문정하여 1차 문정기와 대조하였다. 이를 통해 두 차례 문정에 차이가 없으면, 1차 문정기를 正書하여 「漂流人間情別單」으로 入啓하였지만, 내용이 부족했을 때에는 「漂流人追後問情別單」을 작성하거나, 2차 문정내용을 중심으로 「漂流人間情別單」을 작성하였다. 두 차례의 문정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賫咨譯官이 표류인을 인솔하여 의주부를 통해 봉황성·북경 등으로 轉送하였다.

17세기 후반, 「漂流人間情別單」에 기록된 중국 '정세정보'는 청에 의한 중원지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시점에 두드러졌다. 특히 삼번의 난은 당대 청의 지배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세력들이 봉기한 사건이면서, 대만 정씨 세력 등 각 지역의 반청 세력과 청에 귀순하였던 한인 지배층들까지 가담한 대규모 사건이었다.¹¹⁾ 특히 조선에서는 중원정세 변동의 여파가 조선에 직접적인 악

8) 『중종실록』 중종 23년 7월 23일.

9) 『승정원일기』 인조 19년 12월 15일 ; 『비변사등록』 인조 19년 辛巳十二月十五日, 「靈光漂流漢人間情」 기사 참조.

10) 조선후기 표류인문정 절차는 『국역비변사등록』 63책, 숙종 37년 12월 19일 ; 66책, 숙종 39년 9월 16일 ; 137책, 영조 35년 12월 22일 ; 142책, 영조 38년 9월 16일 ; 158책, 정조 1년 11월 23일 ; 168책, 정조 10년 3월 5일 ; 179책, 정조 15년 12월 15일 기사를 중심으로 정리함.

11) 김창수, 2010, 「17세기 후반 조선사신의 공식보고와 정치적 파장」 『사학연구』106호, 146쪽-147쪽.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영고탑 회귀설이 등장하기도 하였다.¹²⁾ 숙종 14년(1688년)까지 「漂流人間情別單」에서 대만정보, 海禁정보 등이 자세히 등장하고,¹³⁾ 삼변의 난 경과가 포함되었던 漂流人間情이 재차 언급되었던 것¹⁴⁾은 이러한 혼잡한 중국정세에 조응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대 漂流人間情에 ‘정세정보’만이 아니라, ‘기술정보’역시 포함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漂流人間情을 통해 수집된 ‘기술정보’는 당대 대내적 필요성에 조응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숙종대에는 양난이후 실추된 왕조권위와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천문학 정비에 공을 들였다.¹⁵⁾ 예컨대, 숙종 10년(1684년) 영의정 김수항은 천문학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先朝 때부터 천문학 교수를 별도로 선발하였는데, 근래에는 인재가 부족하고 天象을 占候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도 드물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당시 영남 사람인 曹漢明이 선대부터 천문에 정통하였으니 천문학 교수로 선발하자고 건의하였다.¹⁶⁾ 아울러 천문학에 대한 관심은 숙종 10년 「漂漢人追後間情別單」에서도 확인된다.¹⁷⁾

문: 당초 바람에 표류할 때는 서북풍임을 분간할 수 있었겠으나, 큰 바다로 떠내려 나온 뒤에는 너희들이 굽주리고 혼절하여 동서를 분별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서남풍임을 알 수 있었는가?

답: 황성도를 떠난 지 멀지 않아서 정신이 약간 들었고, 또 뱃사람에게는 본래 指南鍼이 있었고, 밤에는 紫微星이 있는 곳을 바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남풍을 분간할 수 있었다.

문: 지남침을 가지고 있던 자는 누구이며 지금은 어디에 두었는가? 자미성으로 어떻게 서남풍을 분간할 수 있는가?

답: 지남침은 당초 열 사람 중에서 하례가 사공이기 때문에 몸에 차고 있었는데 그는 죽었고, 자미성으로 방위를 분별한다고 한 것은 자미성뿐만 아니라 參星이나 亢星의 자리로도 동서를 분간할 수 있다.

문: 너희들은 글을 모른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별의 이름을 알며 이 세 별 이외에도 아는 바가 있는가?

12) 홍성구, 2010, 앞의 논문, 304쪽-306쪽.

13) 반윤홍, 2005, 앞의 논문, 126쪽-134쪽.

14) 『숙종실록』, 숙종 7년 8월 7일.

15) 구만옥, 2012, 「肅宗代(1674-1720) 天文曆算學의 정비」 『한국실학연구』24, 288쪽.

16) 『승정원일기』 305책, 숙종 10년 9월 17일.

17) 숙종 10년 「漂漢人間情別單」에는 ①표류인 신원 ②표착경위와 경과 ③중국 정세에 대해 서술되었고, 이어진 「漂漢人追後間情別單」에는 ①표류원인과 과정 ②방위와 별자리 ③표류선 규격과 승선인원 ④표류경로 중 경험 ⑤중국지역 간 거리 ⑥중국의 보편적 항해로 ⑦해금정책 ⑧어떤 신역에 응하는가가 기록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국역비변사등록』 38책, 숙종 10년 2월 30일 기사 참조.

답: 자미성은 정북에 있고 삼성과 항성은 동방에서 뜨는데 전부터 전해온 말을 듣고 이 세 별을 알았다. 이 밖에 七星과 狗星도 알고 있지만 판 별은 알지 못한다.

문: 너희들이 별 이름을 알고 있으니 掃星도 아는가?

답: 소성은 강희 18년(1679년)에 나타났는데 월일은 기억할 수 없고 서쪽에서 나왔다.

문: 이별이 나타난 뒤에 사람들은 무슨 상이라고 하던가?

답: 우리들은 별로 아는 것이 없지만 이 별이 나타난 뒤에 해마다 남방에 출병하였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안온하다.¹⁸⁾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비변사 낭청이 장문학 등 표류인에게 指南鍼과 같은 방위에 필요한 기구와 紫微星·參星·亢星·七星·狗星·掃星과 같은 천문학과 관계된 별 자리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 물론 漂流人間情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들이 고기잡이와 솥을 파는 업에 종사하는 표류인이었기 때문에 천문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지만, 이를 통해서 대내적 필요성에 조응하는 ‘기술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영조대 수확고 증대와 '농업기술정보' 수집

영조대를 기점으로 효율적인 漂流人間情을 위한 조처들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영조 재위기간 내에 해당하는 1723년부터 1765년에는 연평균 1.88회 청으로 사행이 파견되었는데, 이는 1636년부터 1722년 연평균 2.44회 파견되었던 것과 비교하여 감소한 것이었다.¹⁹⁾ 이러한 연행 횟수 감소는 사행이 축소되어도 무관할 만큼, 조선과 청의 관계가 안정되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²⁰⁾ 그러나 연행 횟수 감소는 그만큼 중국으로부터 ‘기술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공식적인 횟수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하였다. 결국 이러한 정황은 영조대 漂流人間情을 강화하면서, 그에 미숙했던 담당자를 징계하는 사례가 증가했던 것과 관련이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청으로의 연행 횟수가 많았던 숙종대에는 미흡한 漂流人間情에 대해서 징계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비교하여 영조대에는 표류인이 발생한 지역에 파견된 문정역관이 間情記을 미흡하게 기록한 것에 대해 곤장을

18) 『국역비변사등록』 38책, 숙종 10년 2월 30일.

19) 전해중, 1966, 「清代 韓中朝貢關係 綜考」 『진단학보』29-30, 446쪽 표2 참조.

20) 연갑수, 2010, 앞의 논문, 32쪽-33쪽.

치고, 漂流人間情을 지연시켰던 지방관을 從重推考 혹은 파직시켰다. 나아가 서울에서 진행되는 漂流人間情을 지연시킨 비변사 낭청과 차비역관에게도 곤장을 집행하라는 기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²¹⁾ 이는 연행 횟수 감소로 인하여 대외정보수집의 공백을 漂流人間情을 精緻하게 이행함으로써 상계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조대 조선사회에서는 경제적인 욕구가 확장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영조대 「漂流人間情別單」에는 숙종대와 비교하여 漂船화물보상과 통용화폐단위와 같은 경제적 시각에 입각한 내용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²²⁾ 표류선에서 습득한 물품들에 대해서 적당한 가격을 책정하여 표류인에게 보상해 주며, 중국에서 사용되는 화폐단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양상은 당대 조선사회에서 대외적 경제활동이 심화되었거나, 심화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이양법을 이용하여 경지면적당 노동력 투입인원을 절감할 수 있었고, 이 모작이 가능해 짐으로써 수확고 증대를 도모할 수 있었다.²³⁾ 물론 수차의 유용성은 영조대 이전부터 인정되어 왔지만,²⁴⁾ 이양법 보급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던 당대에 수차제작은 더욱 시급한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영조 16년(1740년) 우의정 유척기(1691-1767)는 효종대에 가뭄에 대비해 요동·심양의 수차 제도를 준용하여 외방에 반포했음을 상고하며, 호조에서 수차를 제작하여 삼남지방에 나누어 보낼 것을 진언하였다.²⁵⁾ 이를 수용하여 같은 해 11월에 수차를 제작하였고,²⁶⁾ 영조 30년(1754년)에도 수차를 제작하여 흉년에 대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²⁷⁾

문제는 수차가 소모적인 설비였기 때문에 지방에서 자발적으로 생산되어야 했고, 그 비용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영조 16년에 제작했던 수차도 민들이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호조판서 김시형(1681-1750) 등의 의견을 수용하여 각 지방에 보급하는 것이 무산되었다.²⁸⁾ 영조 17년(1741년)에도 우의정 조현명(1690-1752)이 수차를 제작할 사람을 여러 도에 파견하여

21) 『국역비변사등록』 94책, 영조 9년 10월 16일 ; 136책, 영조 35년 윤6월 19일 ; 154책, 영조 46년 4월 28일 기사 참조.

22) 『국역비변사등록』 130책, 영조 32년 정월 25일 ; 138책, 영조 36년 정월 28일 ; 139책, 영조 36년 12월 25일 ; 156책, 영조 50년 12월 18일 기사 참조.

23) 김용섭, 1964, 「조선후기의 수도작기술 -이양법의 보급에 대하여-」 『아세아연구』7, 75쪽.

24) 『국역증보문헌비고』 제146권, 田賦考6, 附錄水車, 朝鮮.

25) 『영조실록』 영조 16년 4월 5일.

26) 『영조실록』 영조 16년 11월 20일.

27) 『영조실록』 영조 30년 7월 27일.

28) 『영조실록』 영조 16년 11월 20일.

민들이 각기 제작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을 진언하였지만, 영조는 비용대비 효과가 적을 것을 염려하여 허락하지 않았다.²⁹⁾

따라서 영조대에는 중국의 수차 보급현황과 이모작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漂流人間情別單」에 강남지역의 水車보급상황, 이모작 형태와 같은 ‘농업기술정보’에 대한 관심으로 표면화 되었다. 예컨대, 영조 36년(1760년) 뇌득순 등 15명에 대한 「茂長漂流人間情別單」에는 다음과 같은 문답내용이 확인된다.

문 : 너희들 지방(강남지방: 인용자)은 날씨는 가물고 물이 적으면 어디에서 물이 생겨 벼를 심는가?

답 : 우리들 지방은 모두가 平地이기 때문에 땅을 파서 河水를 끌어들여 水車로 품어서 灌溉한다.

문 : 수차의 構造는 어떻게 생겼으며 땅은 무엇으로 파고 파낸 깊이와 넓이는 몇 길 몇 자나 되는가?

답 : 수차의 구조는 우리들이 형용할 수 없으며 땅은 鐵鍬로 파고 깊이와 넓이는 지형에 따라 2~3척이 되기도 하고 4~5척이 되기도 한다.

... (중략) ...

문 : 강남에서는 한 해에 농사를 두 번 짓는다 하는데 언제 심어 언제 수확하며 경작하는 곡식은 무엇이고 논과 밭의 구분이 있는가?

답 : 논에는 벼를 심기도 하고 모를 내기도 하며 9월에 수확한 뒤에 물이 마르면 보리를 갈고 밭에는 목화를 많이 심는다.³⁰⁾

우선 조선정부는 해당 표류인들이 船商이었음에도 수차의 존재와 대략적인 설치방법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는 정황을 통해서, 중국 강남지역에서 수차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조선에서는 벼농사 이후에 보리를 재배함으로써 경제적 이점을 취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하여,³¹⁾ 중국 강남지역에서는 벼농사 이후에 보리·목화를 재배하고 있었다는 정보를 수집하였다.

29) 『영조실록』 영조 17년 2월 22일.

30) 『국역비변사등록』 138책, 영조 36년 정월 28일.

31) 김용섭, 1964, 앞의 논문, 72쪽.

또한 영조대 「漂流人間情別單」에는 경작 효율성 차원에서 水牛에 관심을 보였는데,³²⁾ 이는 조선전기 경작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시절과 유사한 것이었다. 세종대에 농작 효율성을 높이고, 수우각을 이용해 활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직접 수우를 수입하고자 시도하였다.³³⁾ 중종대에도 수우의 작업량이 보통소가 일하는 것에 배가 되기 때문에 飼養해야한다는 주장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다.³⁴⁾ 그러나 호란 이후, 조선 토종물이 아니었던 수우는 청에게 歲幣로 바쳐야하는 수우각 확보 차원에서 주로 언급되었다.³⁵⁾ 효종대에 이르러 수우각을 완전히 면제 받았지만,³⁶⁾ 세폐와 연계된 민감한 사항이었던 만큼 수우의 농경활용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기 어려웠던 상황과는 비교되는 것이었다.³⁷⁾

3. 정조대 漂流人間情 다변화와 '기술정보' 재생산

1) '표류선기술정보' 수집 다변화와 舟橋제작

漂流人間情 규범화·다변화 양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것은 정조대였다. 정조대는 숙종·영조대 각종 시책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는 동시에 새로운 변화 양상이 나타났던 시기였다. 예컨대, 『대전통편』 집대성, 각종 사목과 절목의 수시제정 등을 통해서 대전류 편찬 이후에 새로운 법제도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³⁸⁾ 군사재정·왕실재정 등에 대한 체계화³⁹⁾를 시도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정조 6년에는 漂流人間情에 있어서도 ‘異國船隻問情事例’를 제정하면서 전대와는 달리 지방관이 체계적인 문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⁴⁰⁾

32) 『국역비변사등록』 139책, 영조 36년 12월 25일.

33) 『세종실록』 세종 10년 11월 19일 ; 세종 14년 2월 13일 기사 참조.

34) 『중종실록』 중종 5년 9월 27일.

35) 『인조실록』 인조 10년 11월 19일 ; 인조 15년 1월 28일 기사 참조.

36) 『동문회고』 권18, 節使1, 禮部陜知會免進牛角代貢紙張咨.

37) 물론 영조대에도 수우각은 禁條에 해당하였고, 표류인이 소지하였던 소량의 수우각 매입에 대해서도 왕에게 직접 상달되는 등 민감한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국역비변사등록』 150책, 영조 43년 4월 14일)에서 조선전기 비교적 자율적인 논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기도 하다.

38) 김백철, 2008, 「朝鮮後期 正祖代 법제정비와 『大典通編』 체제의 구현」 『대동문화연구』 제64집, 373쪽.

39) 송양섭, 2011, 「正祖의 왕실재정 개혁과 ‘宮府一體론」 『대동문화연구』 제76집, 81쪽.

40) 『일성록』 정조6년 4월 22일. 그러나 구체적인 ‘異國船隻問情事例’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사료의 한계로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4월 27일에는 각 학의 首譯들에게 문정에서

물론 영조대에도 표류인 조처에 대한 事目이 존재하였던 것이 확인되고,⁴¹⁾ 漂流人間情은 邊情과 연계된 것이라는 인식 역시 확인된다.⁴²⁾ 그러나 영조대에는 규범화된 문정방법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시행한 지방관을 지속적으로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정조는 문정사례를 제정하고 각 지역에 반사하면서 ‘지방에 이국배가 표류하여 도착하면 해당 지방의 邑宰와 鎭將이 일을 내지 않는 경우가 드문데, 이는 間情에 대해서 하나의 규범이 없었기 때문임’을 언급하였다.⁴³⁾

아울러 정조는 漂流人間情에 임한 지방관을 무분별하게 징계하였던 전례를 개선하여, 지방관들의 적극적인 정보취득을 독려하고자 하였다. 정조는 수령이 표류인과 의사소통을 위해 피치 못하게 몸짓으로 대화한 사건에 대해서, 수령의 정성과 근면은 충분히 가상한 것이었음을 참작하여 처벌을 분간하라는 備忘記를 남겼다.⁴⁴⁾ 아울러 표류인이 이르기만 하면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가 장계하여 지방관의 죄를 들추는 것을 능사로 여겨왔음을 지적하면서, 차후부터는 묘당에서 직접 지방관을 신칙하도록 하였다.⁴⁵⁾

漂流人間情의 미흡함을 구실로 지방관을 징계했던 전례들은 지방관이 문정활동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예컨대 전라 좌수사 이진수는 홍양 현감 신광로가 표류선에 실려 있었던 책자 3권을 열흘 안에 베껴낼 도리가 없어, 단지 비공식적인 서찰 2건만 베껴 보낸 것에 대하여 엄하게 신칙하였다.⁴⁶⁾ 이러한 전례들은 곧 표류선이 신고 온 서적을 일부라도 보고하면 지방관이 오히려 화를 당할 것임을 우려하여, 모래밭에 묻어버렸던 행태⁴⁷⁾와도 연관이 깊은 것이었다. 따라서 정조는 지방관의 漂流人間情에 대한 징계도 중앙에서 일원화함으로써 지방관들의 문정활동이 경직되지 않도록 구상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서 정조대는 지방관의 漂流人間情이 다변화 할 것을 기대하였는데,

발생하는 폐단을 개정하는 事目을 생각해 보도록 지시한 것(『국역비변사등록』 164책, 정조 6년 4월 27일)으로 보아 ‘異國船隻問情事例’ 반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정에 대한 개선안을 취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 ‘異國船隻問情事例’ 제정 이후에 問情官이 파견되기 시작하였다고 설명되기도 하지만, 問情官이라는 용어가 사역원에서 차출된 問情譯官의 이칭(『국역비변사등록』 104책, 영조 14년 7월 4일)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41) 『국역비변사등록』 87책, 영조 6년 5월 15일.
- 42) 『국역비변사등록』 118책, 영조 23년 8월 19일.
- 43) 『일성록』 정조 6년 4월 22일.
- 44) 『국역비변사등록』 164책, 정조 6년 4월 27일.
- 45) 『일성록』 정조 14년 7월 17일.
- 46) 『일성록』 정조 14년 7월 17일.
- 47) 『역주 목민심서』 권1, 제3부 奉公六條, 제6장 往役.

‘표류선기술정보’ 수집 양상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정조대 「漂流人間情別單」에는 표류선의 길이·넓이는 물론 돛대 개수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었고, 표류선이 官船인가 私船인가에 대한 질문이 명시되기 시작하였다.⁴⁸⁾

배는 길이가 6把, 너비가 1과 6尺 5寸, 높이가 6척이었으며, 木板은 5장의 송판으로 되어 있고 좌우의 杉板은 각각 5장의 송판으로 되어 있었다. 앞의 돛대는 길이가 4과 3척, 둘레가 2척 5촌 되는 檜木이었고, 뒤의 돛대는 길이가 6과 2척, 둘레가 4척 되는 회목이었으며, 배의 제도는 木槩는 없고 모두 鐵釘이었다.⁴⁹⁾

한편, 위에서와 같이 「漂流人間情別單」과는 별도로 지방관이 표류선을 관찰하여 摘奸記에 상세히 기록하고, 이를 문정기와 함께 상달하도록 하였다. 또한 水使가 올리는 장계에 표류선 圖樣을 첨부하여 올리게 하였으나, 이것이 누락됐을 때에는 문책하였다.⁵⁰⁾ 아울러 표류선 자체를 보존하는 것도 강조하였는데, 漂流人間情을 맡았던 비변사 낭청이 배를 소각시켰던 사건에 대해서 해당 낭청을 곤장에 처하고 充軍시키는 형벌이 내려졌던 사례⁵¹⁾에서 확인된다.

특히 정조대에는 외부로부터 ‘기술정보’를 단순히 수집하였던 것이 아니라, 직접 생산하여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양상이 심화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정조 5년(1781년) 중국본 구입희망 도서목록인 『內閣訪書錄』에는 『寄器圖說』·『職方外紀』·『西方要紀』 등 3종의 서양서가 포함되었다. 정조는 정약용에게 『寄器圖說』을 하사하여 引重과 起重의 방법을 강론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정약용은 『起重架圖說』을 작성해 바치고 제작한 기계를 화성건설에 이용하였다.⁵²⁾

따라서 정조대 지방관 漂流人間情이 규범화·다변화하고, 무엇보다 ‘표류선기술정보’를 상세하게 요구하였던 것 역시 당대 조선에서 필요했던 ‘기술정보’ 수집 및 재생산 양상과 연계된 것이었다. 정조 13년(1789년) 10월 16일에 사도세자의 묘인 顯隆園이 수원부 화산에 완공되면서,⁵³⁾ 정조는 1년에 한번 한강 이남으로 거동하는 것을 규례로 삼았다. 따라서 정례적으로 舟橋를 만들어야 했으며, 이는 원활한 舟橋제작을 위한 舟橋司를 설치,⁵⁴⁾ 舟橋司에서 舟橋節目 작성⁵⁵⁾ 등 일련

48) 『국역비변사등록』 158책, 정조 1년 11월 25일 ; 정조 1년 12월 10일 기사 참조.

49) 『일성록』 정조 14년 7월 17일.

50) 『일성록』 정조 14년 7월 17일.

51) 『일성록』 정조 18년 11월 12일.

52) 노대환, 2005, 「정조대 서양 과학기술의 수용과 정조의 서학 정책」 『태동고전연구』 21집, 157쪽.

53) 『정조실록』 정조 13년 10월 16일.

의 행정적 조치들로 귀결되었다.

정조는 舟橋제작을 위한 기술적인 조치로 『舟橋指南』을 저술하면서, 주교설치를 위해서는 선박의 높이, 돛의 모양, 닻의 위치와 같은 외형적 규칙성이 필요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⁵⁶⁾ 따라서 정조대에 표류인 뿐만 아니라, 표류선에 대한 문정, 적간기, 표류선 圖樣을 통해서 ‘표류선기술정보’에 관심을 두었던 것은 주교설치와 무관하지 않은 조치였다. 또한 표류선을 활용하여 흉년에 민들을 구휼·구제하는데 사용했다는 사실⁵⁷⁾로 미루어, 표류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 외형 뿐 아니라 내부구조와 조작기술을 체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정약용의 問情개혁 구상과 利用監설치 구상

漂流人間情을 활용한 ‘기술정보’ 수집과 재생산을 구체적으로 구상하였던 것은 정약용이었다. 우선 정약용은 『牧民心書』에서 問情을 개혁할 것을 구상하였다. 크게 5가지로 구성된 정약용의 문정개혁구상은 첫째 服制가 다른 이국인을 대접할 때, 각별히 공손하고 충실하게 진행할 것, 둘째 지방관들이 표류선에 선적한 문자나 인쇄본을 은닉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제목들이라도 초록하여 올릴 것, 셋째 문정 담당자 접대명목으로 아전들이 주민들을 침학하는 것을 방지하여, 표류선 정박과 문정에 무리가 없도록 할 것, 넷째 표류선 선박제도를 상세히 조사하여 모방할 것, 다섯째 표류인들을 지성으로 돌볼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정약용이 문정개혁구상에서 표류선 선박제도를 조사하여 모방할 것을 강조했던 것은, 典艦司와 利用監을 설치하여 ‘표류선기술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재생산 하려던 구상과 연계된 것이었다. 정약용은 문정개혁구상을 통해서 조선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데도 선박제도가 소박하고 고루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으로 표류선을 모방하여 재생산할 것을 주장하였다.⁵⁸⁾

54) 『정조실록』 정조 13년 12월 4일.

55) 『정조실록』 정조 17년 1월 11일.

56) 『舟橋指南』은 ①지형의 편의 ②강물의 너비 ③배의 선택 ④배의 수효 ⑤배의 높이 ⑥종량(縱梁) ⑦횡판(橫板) ⑧잔디를 까는 일(鋪莎) ⑨난간(欄干) ⑩닻을 내리는 일(下碇) ⑪기구를 보관하는 일(藏械) ⑫대오를 결성하는 일(結隊) ⑬상벌(賞罰) ⑭기한 내에 배를 모집하는 일(期會) ⑮선창다리(艙橋)으로 나뉘어 있으며, ⑪ ⑫ ⑬ ⑭의 행정적 내용을 제외하면 대체로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자세한 『舟橋指南』내용은 『홍재전서』 제59권, 「舟橋指南」 기사 참조.

57) 『일성록』 정조 18년 11월 12일.

58) 『목민심서』 권1, 奉公六條, 往役, 漂船問情機急而行艱勿庸遲滯爭時刻以赴

표류선을 만날 때마다 그 선박제도의 圖說을 상세히 기술하되, 재목은 무엇을 썼고 뱃전의 판자는 몇 장을 썼으며, 배의 길이와 넓이 그리고 높이는 몇 도나 되며, 배 앞머리의 구부리고 치솟은 형세는 어떠한며, 돛·돛대·뜸·돛줄의 제도와 상앗대·노·돛대·키 모양은 어떠한며 油灰로서 배를 수리하는 법과 翼板이 파도를 잘 헤치게 하는 기술은 어떠한지 등의 여러 가지 妙理를 상세히 조사하고 기록하여 그것을 모방할 것을 꾀해야 할 것이다.⁵⁹⁾

아울러 그는 지방에서 표류선을 내쫓거나 불태워 없애버리려는 원인을 분석하여 표류선을 온존시킬 방법도 구상하였다. 표류선을 문정하는 것이 반드시 섬에서 일어나는데, 표류선 조사관들이 한번 파견되면 아전들이 접대를 빙자하여 침학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표류선이 한번 지나가면 섬 몇 개가 망해버리기 때문에 표류선이 오더라도 해당지역 민들이 고의로 도망가게하고, 구원하지 않아 침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 표류인이 죽고 나면, 배와 화물을 불태워 흔적을 없앤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조사관이 해당지역에 출장할 때, 아전을 단속하고 별도로 예산을 계획하여 백성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음으로서 문정과 표류선 확보에 무리가 없도록 할 것을 구상하였다.⁶⁰⁾

나아가 정약용은 利用監 낭관을 파견하여 표류선에 대한 ‘기술정보’를 수집하고, 典艦司로 하여금 재생산된 선척들을 관리감독 할 것을 구상하였다. 우선 利用監이 오로지 기술을 배워오는 것을 職으로 하는 기관임을 규정함으로써,⁶¹⁾ ‘기술정보’ 재생산의 핵심기구로 구상하였다. 특히 造船기술 습득은 조선 연안에 표착한 중국·일본·유구·루손 선척을 파견된 利用監 낭관이 자세히 기록하여 얻도록 하였고, 해당 정보를 선척 건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나아가 표류선에서 습득한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재생산된 선척들은 대·중·소 등급을 나누고 각각 3등급씩을 두어 총 9등급의 형태로 분류하고, 전함사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선척들을 규제하도록 하였다.⁶²⁾

한편, 이용감·전함사를 통한 ‘기술정보’ 재생산 구상은 비교적 현실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북학과 박제가 역시 중국 선박 제도를 준용할 것을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⁶³⁾ 이와 비교하여 정약용은 중국으로부터

59) 『목민심서』 권1, 奉公六條 往役, 漂船問情機急而行艱勿庸遲滯爭時刻以赴

60) 『목민심서』 권1, 奉公六條 往役, 漂船問情機急而行艱勿庸遲滯爭時刻以赴

61) 『경세유표』 권2, 冬官工曹 利用監

62) 『경세유표』 권2, 冬官工曹 典艦司

63) 『북학의』 內篇, 船

터 선박에 대한 ‘기술정보’를 직접적으로 얻기 힘들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⁶⁴⁾ 조선에 표류한 다국적 선박들을 활용할 계획을 강구하였다. 나아가 당대 실존하였던 舟橋司를 典艦司로 변용할 것을 구상함으로써,⁶⁵⁾ 현실적인 제도화 방법까지도 구상하였던 것이다.

4. 맺음말

양난 이후 조선정부는 연행사를 통한 대외정보 수집에 국한되지 않았고, 漂流人間情을 통한 대외정보 수집 역시 활발히 진행하였다. 특히 異國을 방문하여 예식을 치르는 것에 표면적인 목적이 있었던 연행사와는 달리, 漂流人間情은 조선에서 주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외정보를 取擇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조선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한 ‘기술정보’들을 선별적으로 수집하고 있었다.

漂流人間情을 통해서 조선정부가 취택하였던 ‘기술정보’는 당대 조선의 사회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었다. 이양법의 전국적인 보급을 통해서 수확고가 증대되었던 영조대에는 漂流人間情을 통해서 중국의 水車보급과 이모작 형태, 水牛농법 같은 ‘농업기술정보’를 수집하는데 집중되었다. 이어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던 정조대에는 ‘異國船隻問情事例’를 제정하고, 지방관의 摘奸記, 표류선 圖樣 등을 통해서 ‘표류선기술정보’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며, 표류선을 직접 재활용하였다. 무엇보다 정조대 ‘표류선기술정보’ 수집이 강조되었던 것은 수원행차를 위한 舟橋제작과 연계가 되었던 것이라 판단된다.

결국 漂流人間情을 통한 ‘기술정보’ 수집과 재생산 구상은 정약용에 의해서 구체화 되었다. 정약용은 문정개혁구상을 서술하면서, 표류선을 보존하고 그 외형을 상세히 파악할 것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利用監를 설치하여 표류선의 기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선척건조에 적용할 것을 구상하였다. 특히 당대에 실재하였던 舟橋司를 변용하여 典艦司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서 체계적인 등급으로 재생산된 선박들을 관리하고자 하는 현실성도 견지하였다.

조선정부가 도입하였던 제 기술은 단순히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이 아니었다.

64) 『경세유표』 권2, 冬官工曹 典艦司.

65) 『경세유표』 권2, 冬官工曹 典艦司.

공식적인 경로이든 비공식적인 경로이든 조선정부의 노력이 수반된 것이었고, 특히 비공식적인 漂流人間情을 통해서 조선정부는 대내적 필요성에 조응하는 ‘기술 정보’를 수집하였다. 더욱이 수확고 증대와 경제적 인식이 높아졌던 18세기 후반에 이룰수록 조선정부와 실학자 지식인에 의해서 ‘기술정보’ 재생산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었다.

※ 참고문헌 ※

사료

『국역비변사등록』, 『세종실록』, 『중종실록』, 『인조실록』, 『숙종실록』, 『영조실록』, 『정조실록』, 『일성록』, 『목민심서』, 『경세유표』

연구논문

- 김용섭, 1964, 「조선후기의 수도작기술 -이앙법의 보급에 대하여-」 『아세아연구』7
 전해종, 1966, 「清代 韓中朝貢關係 綜考」 『진단학보』29-30
 강진아, 2005, 「16~19세기 동아시아무역권의 세계사적 변용」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창비
 반운홍, 2005, 「조선후기 비변사의 국외정보 파악 양상」 『한국사학보』제20호, 고려사학회
 고석규, 2008, 「조선시기 표류경험의 기록과 활용」 『島嶼文化』제31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김백철, 2008, 「朝鮮後期 正祖代 법제정비와 『大典通編』 체제의 구현」 『대동문화연구』제64집
 연갑수, 2010, 「영조대 對淸使行的 운영과 對淸關係에 대한 인식」 『한국문화』51
 김창수, 2010, 「17세기 후반 조선사신의 공식보고와 정치적 파장」 『사학연구』106호
 홍성구, 2010, 「『朝鮮王朝實錄』에 비친 17세기 내륙아시아 정세와 ‘寧古塔回歸說」 『中國史研究』제60집
 송양섭, 2011, 「正祖의 왕실재정 개혁과 ‘宮府一體’론」 『대동문화연구』제76집
 구만옥, 2012, 「肅宗代(1674-1720) 天文曆算學의 정비」 『한국실학연구』24
 백옥경, 2012, 「18세기 연행사의 정보수집활동」 『명청사연구』제38집

김옥균의 생애와 사상의 흐름

정예지

1. 머릿말
2. 김옥균의 생애 초기 유학사상의 형성
3. 문명개화론의 형성과 갑신정변
 - 1) 문명관과 대청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개화사상의 형성
 - 2) 갑신정변과 김옥균의 사상적 지향
4. 갑신정변 이후 김옥균의 사상 변화
5. 맺음말

1. 머릿말

김옥균(1851~1894)은 대내외적 질서의 격동을 겪고 있던 조선에서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 중 한 사람이다. 당시 조선은 대내적으로 봉건적 질서의 모순이 심화되고 있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외세로부터의 침략 압박을 받고 있었다.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주독립과 자주자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1884년 10월 17일 일으킨 갑신정변으로 그들의 목표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김옥균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을 맺었으나 갑신정변은 당시에조차 중대하게 취급되었으며 이후 한국근대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자리하였는데 이는 갑신정변이 조선의 근대로의 변혁운동의 선구적 시발점으로 평가됨¹⁾과 동시에 근대 이행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 때문이다.

갑신정변은 친일적 세력이 일본의 침략적 의도에 부응하여 일으킨 난으로 폄하되는 한편,²⁾ 자주적으로 근대화 운동과 부르주아 개혁을 시도하고자 했던 근대개

1) 박은숙, 2005, 『갑신정변 연구』, 역사비평사: 15쪽.

2) 신국주, 1965, 『근대조선외교사연구』, 통문관, 247~268쪽; 백종기, 1962, 「갑신정변에 대한 일고찰」, 『성균관대학교 논문집』7, 68쪽. 허동현, 2004, 「개화기 인물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국민국가 만들기의 주역 김옥균-박영효-어윤중을 중심으로-」, 『韓國人物史研究』1 133쪽에서 인용.

혁의 선구적 운동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³⁾ 이러한 갑신정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곧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 혹은 ‘선구적 혁명가’와 같이 갑신정변을 주도한 김옥균·박영효 등 개화파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곤 했다. 그러나 갑신정변이라는 대사건에만 의거하여 김옥균을 바라볼 경우, 생애 초기부터 갑신정변 이후에 이르는 그의 사상적 변화를 잘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는 한계가 생긴다.

구체적으로 김옥균과 그의 개화사상에 대해서는, 조선후기 북학파인 박지원·박제가, 개화사상의 선구자인 박규수·오경석·유대치, 개화운동의 실천자인 김옥균·박영효 등을 계통적으로 파악하여 실학사상과 개화사상의 연관성에 주목하면서 개화사상은 1860년대 혹은 1870년대에 형성되었다고 보는 內因論⁴⁾의 입장과 개화사상은 본질적으로 실학사상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서구적 근대사상으로, 明治維新의 경험을 교조적으로 적용한 것이며 이는 조선 사회 내부의 사상적 동향으로부터 돌출된 것으로 1882년 문명개화론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外因論⁵⁾의 입장이 존재한다. 1960년대 이후에는 자주적·내재적 발전론과 근대화론의 시각에서 개화사 연구가 진행되면서 내인론에 입각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 결과 개화사상은 조선 후기 실학의 전통을 계승하였으며, 개화당은 1870년대에 형성되어 1880년대에는 이미 독자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하였고, 그들이 일본을 동원한 것은 전략적

- 3) 이광린, 1973, 『개화당연구』, 일조각, 182쪽; 신용하, 1980,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위한 정변」, 『한국근대사와 사회변동』, 문학과 지성사, 24~26쪽. 주체사상이 나오기 전 북한학계에서는 갑신정변을 “외국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몇몇 귀족계급 가운데 몇 사람의 선진분자가 근대적인 주권확립을 기도하여 실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조선민족해방투쟁사』1949)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1955년 12월 김일성이 주체적 조선역사의 연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한 이후에는 “조선 최초의 부르주아 개혁운동”(리나영, 1958, 『조선민족해방투쟁사』,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64, 『김옥균』),으로 평가가 바뀌더니 1970년대 들어 주체사관이 확립되면서 “부르주아 혁명”(허중호 등, 1970, 『조선에서의 부르주아 혁명운동』)으로 평가 절상되었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 다시 “첫 부르주아 개혁운동”(리종현, 1984, 『근대조선력사』, ; 최운규, 1986, 『조선 근대 및 현대 조선경제사』)으로 평가 수위가 낮아졌다. 원문은 하원호, 1990, 「부르주아 민족운동의 발생. 발전」, 안병우·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 인식 II』 참조. 허동현의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 4) 이광린, 1969, 『한국개화사연구』, 일조각; 조기준, 1969, 「이조 후기의 실학사상과 사회경제적 배경」, 『한국사의 반성』, 신구문화사; 천관우, 1970, 「한국실학사상사」, 『한국문화사대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김영호, 1971, 「근대화의 새벽-개화사상」, 『한국현대사』 6, 신구문화사; 김영호, 1972, 「실학과 개화사상의 관련문제」, 『한국사연구』8, 한국사연구회; 강제연, 1973, 『朝鮮近代의 變革思想』, 日本評論社; 이광린, 1989, 「개화사상의 형성과 그 발전」, 『한국사 시민강좌』4, 일조각; 한우근, 1990, 「근대사상의 맹아」, 『한국사』 14, 국사편찬위원회 등. 넓은 범주에서 볼 때 개화사상 연구의 대부분이 내인론적 입장에서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논리는 남한학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조광, 2000, 「실학과 개화사상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 『조선 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박인숙, 위의 책에서 재인용.
- 5) 靑本功一, 1976-1977, 『朴泳孝의 民本主義, 新民論』, 民族革命論(1,2)』, 『朝鮮學報』 80-82; 주진오, 1993, 「개화파의 성립과정과 정치·사상적 동향」, 『1894년 농민전쟁연구』3, 한국역사연구회 편, 역사비평사.

인 목적에 의해서였던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또한 갑신정변은 비록 일본 측의 배신과 민중의 지지 결여 등의 이유로 실패하였으나 이후 갑오개혁과 독립협회, 애국계몽운동 등으로 이어지는 한국 근대 민족운동의 선구로서 평가되기에 이르렀다.⁶⁾

개화사상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인론적 연구들에 의해 갑신정변과 김옥균에 대한 자료가 발굴되고 많은 사실관계가 밝혀졌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자율성 강조라는 목적에 따라 김옥균과 그의 사상을 평가함으로써 김옥균과 그의 사상을 그 자체로 바라보지 않게 되어 오히려 김옥균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측면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실증적인 검토보다는 이론적 가설에 토대를 두고 역사적 평가에 주력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는⁷⁾ 평가 역시 이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김옥균이라는 인물의 사상 그 자체에 주목하여 목적성에 의거하기보다는 실증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또 다른 목표는 갑신정변 시기를 중심으로 김옥균의 사상을 파악하며 그의 사상이 불변한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생애 전반에 걸쳐 김옥균이 처한 현실과 그가 이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기반을 두고 김옥균의 사상적 지향과 그 변화과정을 추적함과 동시에, 변화된 생각과 지향이 그의 정책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의 생애를 생애 초기, 갑신정변 전후, 갑신정변 이후 망명시기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것이다.

2. 김옥균의 생애 초기 유학사상의 형성

김옥균은 1851년 충남에서 안동 김씨 가문의 김병태와 은진 송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김옥균은 6세 되던 해에 재종숙인 김병기에게 입양되어 시문을 비롯한 글 공부와 중국 고전을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사대부의 자질을 키워나갔다. 1872년(고종 19)에 講聖試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직에 임명되면서 첫 벼슬길에 올랐으며, 1874년 홍문관 교리가 된 후 1883년까지 홍문관에 몸을 담았다. 홍문관원은 경연관을 겸해 왕에게 강론하는 일도 겸하는데 그 중 1874년 김옥균이 고종에게

6) 한철호, 2010, 「개화파연구의 실증적 초석 쌓기와 그 의의」, 『한국사연구』 148, 246쪽.

7) 박인숙, 위의 책, 21쪽.

『시전』을 강론한 기록이 있다.

대개 상덕(常德)을 근본으로 삼고 무공(武功)을 말단으로 삼아 안으로 닦은 것이 이미 나타나면, 외물(外物)은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대(三代) 성군(聖君)의 치화(治化)도 모두 안으로 닦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습니다.⁸⁾

고종의 학습을 돕기 위한 강론 내용을 그대로 김옥균의 사상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려우나, 유년 시절을 함께 고려한다면 김옥균이 기본적으로 유학사상을 가진 사대부로 성장하였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김옥균의 서울 집은 한성부 북부 흥현에 위치하였는데 가까운 곳에 박규수가 살고 있었다. 박규수는 1874년 우의정에서 물러난 이후 집에 은거하면서 실학연구에 전념하고 있었는데 이때 김옥균은 박영효·김윤식 등과 함께 박규수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박규수가 사망할 때까지 2년여 동안 지속되었다. 박규수는 청나라에 다녀온 경험이 풍부하여 김옥균에게 서양의 신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에 박규수로부터 김옥균이 배운 것이 개화사상이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⁹⁾이 있으나, 박규수는 어디까지나 실학의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대두된 체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한 것이었다. 박규수는 토지개혁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서양 문명을 종교와 기술로 분리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박규수 사상의 기저에는 여전히 유교가 가진 우월성에 대한 확신과 조선이야말로 문명국이라는 믿음이 있었다.¹⁰⁾ 즉 박규수에게 있어서 개화¹¹⁾의 목적은 문명화가 아니었으며 유교문명을 수호하고 유교문명을 이뤄나가는 데에 있었다.

따라서 이 때 김옥균이 박규수로부터 배운 것은 개화사상이라기보다는 대내외적 위기상황의 대응책으로 등장한 실학에 입각한 개혁론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학에 입각한 개혁론을 통해서만 유교사회의 틀을 벗어날 수 없으며 새로

8) 『승정원일기』 고종 11년 11월 20일. 박은숙, 『김옥균...』에서 인용.

9) 신용하, 1985, 『金玉均의 開化思想』, 『동방학지』 46:47-48;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1964, 『김옥균』, (역사비평사, 1990)

10) 김도형, 2004, 「개항 전후 실학의 변용과 근대개혁론」, 『동방학지』 124. 397-407쪽.

11) 이때 개화는 서구적 관념에 입각한 문명화의 의미가 아닌, 유교적 관념에 입각한 '開物成務 化民成俗'(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힘써 백성을 교화시켜 바른 풍속을 이룬다는 말로 왕 혹은 성인의 역할을 규정할 말)의 의미로 쓰이고 있었다. 김윤희, 2008, 『갑신정변 전후 "개화" 개념의 내포와 표상』, 『개념과 소통』 1-2, 80쪽.

운 근대사회 체제를 이룰 수 없게 된다. 김옥균의 개화사상의 기원을 박규수로 보는 연구는 대개 갑신정변의 근대적 성격을 강조하는데, 박규수의 사상은 근대 국가 체제 수립과 거리가 멀어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박규수의 사상은 이후 김윤식 등을 통해 유교를 중심으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동도서기론으로 발전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오경석, 유대치, 이동인과의 만남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문호를 개방한 이후 고종을 비롯한 지배층은 조선을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를 실감하면서 혼란한 상황 속에서 체제를 유지하고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국강병의 대책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¹²⁾ 이에 동도서기론적 논리에 입각한 개혁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당시 김옥균·박영효 역시 이 범주에 속해 있었다. 고종과 민씨정권은 동도서기론적 개혁정책을 정권의 기본정책으로 삼아 외세에 대응하기 위한 근대화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김옥균의 세력은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성장해갈 수 있었다.

당시 고종과 지배층은 중화질서의 균열을 인지하기는 하였으나 질서가 아예 깨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부국강병 정책은 서구식 문명화 그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 아닌 ‘중화적 동아시아 질서와 유교를 기반으로 한 지배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근대사회 체제를 이루고자 하는 開花論의 범주에 포함된 것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성격의 것이었다.¹³⁾ 국내에서는 김옥균을 포함한 동도서기론적 정책 추진세력과 서구문물의 도입을 반대하는 전통적인 儒林들의 衛正斥邪論者들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¹⁴⁾

3. 문명개화론의 형성과 갑신정변

1) 문명관과 대청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개화사상의 형성

이렇듯 동도서기론의 범주에 속해있던 김옥균의 사상은 세 차례의 渡日경험과

12) 김도형, 앞의 글,

13) 주진오, 1993, 「개화파의 성립과정과 정치·사상적 동향」, 『1894년 농민전쟁연구』3, 역사비평사, 204쪽. 金信在, 1995, 「金玉均의 政體改革論」, 『慶州史學』14, 87쪽에서 재인용.

14) 金信在, 위의 글, 83쪽.

임오군란을 계기로 전환을 맞게 된다. 김옥균은 1882년 2월(양력) 시찰 목적으로 일본을 처음 방문하였는데 6개월 동안 일본에 머물며 각종 기기, 시설 등을 둘러 보는 한편 후쿠자와 유키치 등 일본의 재야 정객들과의 만나기도 하였다. 임오군란 이후 1882년 9월 김옥균은 수신사 일행의 고문역으로 2차 일본 시찰에 나선다. 정사에 박영효, 부사에 김만식, 종사에 서광범, 고문으로 김옥균, 민영익이 참여했으며 이후 갑신정변에 참여하는 유혁로, 박제경, 변수 등도 수행하였다. 이들은 4개월간 도쿄에 머물면서 외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와 정계의 인물들을 만났으며, 개화의 방책으로 군주의 문명화를 통한 개혁정책의 추진, 개혁세력의 정치적 기반 확대를 위한 정부 내의 부분적 개편 등을 구상하였다. 이 때의 수신사행이 갑신정변의 주도 세력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⁵⁾

일본행을 통해 발달한 일본의 모습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은 김옥균은 일본을 모델로 하여 조선의 근대 개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김옥균은 자비로 40여명의 유학생을 일본에 파견하면서 “영어를 배워야 일본을 經由치 않고 泰西文明을 직수입할 수 있다”고 주지시킴으로써 영어교육을 중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비록 당시 조선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본을 개화의 모델로 삼았으나 김옥균의 궁극적 목표가 서양문명화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유교적 문명관을 가진 동도서기론으로부터 문명화를 의미하는 개화사상으로의 전환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¹⁶⁾

1882년 7월 발생한 壬午軍亂은 또한 김옥균의 대외인식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온 사건이었다. 임오군란이 청군에 의해 진압됨으로써 이를 계기로 청의 대조선 속방화 정책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대조선정책의 방향을 기존 불간섭정책에서 실력간섭정책으로 전환한 청은 亂의 책임을 물어 대원군을 청으로 납치하였으며, 조선으로 하여금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¹⁷⁾을 체결하여 청나라 상인의 내륙 진출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김옥균은 청의 내정 간섭과 조선을 속국으로 대하는 처사에 크게 분노하였으며 흥선대원군이 납치된 것을 국가적 굴욕으로 받아들였다. 김옥균은 “국제적 정세의 여하와 상관없이 國父(대원군을 가리킴)를 속여서 납치해 가는 것은 (조선의) 국토를 유린하고 국민을 모욕하고 조선의 王家를 노예로 간주하여 나라의 面目을

15) 박은숙, 『갑신정변 연구』, 56쪽.

16) 서재필, 『회고갑신정변』, 84쪽; 『동아일보』1930년 1월 11일. 鄭英燾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17) 장정은 한 나라 자국 내 일어나는 법령에 쓰이는 단어로 이 장정이 조약체제가 아닌 사대체제 속에서 체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유린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慨然히 일어서 淸國타도를 결심하게 되었다.¹⁸⁾ 동도서기론자들과 김옥균의 사상이 분화되는 시점은 바로 이 당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대표적 동도서기론자인 김윤식은 兩得論을 주장하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서구국가와 조약을 맺을 필요는 있으나, 조선은 약소국이어서 자주권을 잃을 염려가 있으니 대국인 청국이 소국인 조선을 돌보게 擔任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김옥균은 華夷體制가 조선의 국권을 해친다고 인식하였으며 따라서 이로부터 탈피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 그에게 청은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쇠퇴의 극에 달한 멸망 직전의 나라에 불과하였다.¹⁹⁾

유교문명의 대외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화이체제로부터 탈피하고자 생각하였다는 점은 김옥균의 사상이 기존의 유교를 바탕으로 한 동도서기론에서 다른 사상으로 전환하였음을 짐작케 하는데, 이것이 곧 서구문명화를 추구하는 개화사상이었다. 김옥균이 작성한 『조선개혁의견서』에는 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 자수자강이 필요하다는 서술이 있는데, 그가 생각한 자수자강의 방향은 부분적으로나마 『治道略論』(1882)에서 드러난다. 도로와 교량을 정비하여 편의를 도모할 것이며, 위생을 신경 쓰고 서구 의술을 받아들일 것이며, 농업을 발달시켜 외국인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²⁰⁾는 그의 주장은, 그가 유교의 도가 아닌 서양의 기준으로 조선을 평가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상적 분화를 겪은 친청 사대파와 개화파는 곧 개화의 방향, 정권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게 되었다.

2) 갑신정변과 김옥균의 사상적 지향

분화된 두 세력 간의 갈등은 친청 사대파가 우위를 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임오군란 이후 고종이 설치한 機務處는 임오군란으로 폐지된 통리기무아문의 체제를 이어받았으며 이후 통리군국사무아문(내아문)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외아문)으로 개편되어 개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부국강병과 개화, 자강에 관련한 주요사안을 추진하는 내아문은 친청파인 김병시, 김윤식, 어윤중

18) 권혁수, 2007, 「김옥균과 중국 - 對中國認識을 중심으로 -」, 『근대 한중관계사의 재조명』, 해안, 194쪽.

19) 金信在, 앞의 글, 95쪽.

20)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1964, 『김옥균』, 역사비평사, 433~435쪽.

등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1883년 8월 이후에는 민태호, 민영익, 민응식 등 민씨척족과 윤태준, 이조연, 한규직 등 親閥系 인사들이 그 운영권을 장악하였다. 김옥균, 박영효 등 정변의 주도세력은 내아문에 접근하지 못했으며, 흥영식과 서광범이 참여하고는 있었으나 나이가 어리고 직위도 협판과 참의에 그쳐 독자적으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개화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내아문에서 밀려난 개화파의 입지가 좁아짐은 군제 재편과정에도 드러난다. 임오군란 후 군제는 舊軍營, 청국식 친군 좌우영군 등이 혼재되어 있다가 1884년 7월에 친군 4영으로 개편되었는데 4영의 지휘를 친청파인 한규직, 민영익, 이조연, 윤태준이 맡게 되었다. 청국식의 군제 개편에 위기감을 느낀 고종이 개화당의 박영효와 윤용렬로 하여금 일본식 신식 군대를 양성하도록 하였으나 친청 사대파의 방해 공작에 의해 좌절되었다.²¹⁾ 김옥균은 서재필에게 “국방을 튼튼히 하자면 精銳한 군대밖에 없”²²⁾기 때문에 일본으로 건너가 武藝를 배우라고 권하는 등 군사개혁을 청으로부터 독립하는데 필수적인 사안으로 여기고 있었다. 군사개혁의 계획이 친청 사대파로 인해 좌절되었을 때 김옥균이 조선의 앞날에 커다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친청 사대파와 개화파는 조선이 겪고 있던 고질적인 재정난과 개화사업의 비용증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두고 대립하였다. 친청 사대파는 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이때 도입된 차관은 商務興利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차관으로 군사력 강화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성격의 것이었다. 이후 친청 사대파는 당오전을 주조하는 것으로 해결방법을 전환하는데 당오전은 惡貨로 이것이 발행될 경우 조선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 친청 사대파가 재정문제를 두고 청과 결탁하는 상황에서,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된 조선이 마땅히 근대적 화폐와 재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 광산과 군비에 투자하여 金 본위제를 이루고자 하였던 김옥균의 구상은 그 입지가 점점 좁아지게 되었다. 당시 김옥균의 구상을 실현할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상대는 일본밖에 없었다. 그는 1883년 차관교섭을 위해 3차 일본행에 나서지만, 조선 내에서 개화파보다 친청 사대파가 전권을 쥐고 있다고 파악한 일본공사 다케조에의 방해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다.²³⁾

21) 박은숙, 『갑신정변...』, 72-82쪽.

22) 정영희, 앞의 글, 388쪽.

23) 유바다, 2010, 「1883년 김옥균 차관교섭의 의미와 한계」, 『한국근현대사연구』54

내아문의 장악과 군제개혁에 실패하고 차관 교섭마저 실패함으로써 김옥균이 추구한 대내적 개화정책의 길은 막히고 말았다. 본래 김옥균이 조선의 정치와 외교를 자수자강하게 함으로써 이루고자 했던 목적은 청과의 사대관계로부터 탈피하여 자주적인 국권을 유지하는 근대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는 19세기 후반기 서구 열강의 침략이 팽배해가는 대외적 위기의식과 대내적 봉건적 모순의 심화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나온 생각이었다. 그러나 김옥균의 대내정책이 친청 사대파에 의해 모두 좌절되면서 김옥균은 대내적 개화를 위해서도, 대외적 독립을 위해서도 친청 사대파와 청 세력을 우선적으로 몰아내야만 한다고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1884년 4월 청불전쟁이 발발하여 청이 조선에 주둔하던 군사 중 절반인 1500여명을 철병시키고, 이후 전쟁에서 청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조선에 들려오자 김옥균은 이를 조선의 독립을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여 구체적인 정변을 계획하게 된다. 쿠데타 방식으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무력과 자본, 인적 자원이 필요하였으나 모든 것이 부족한 실정 하에서 김옥균은 인적 자원은 개인적인 관계²⁴⁾와 친군 전영의 군사조직을 이용하는 한편, 일본인에게 기대어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였다.²⁵⁾ 그의 처사는 이후 김옥균이 일본에게 나라를 판 친일파라는 오명을 갖는 원인이 되지만, 차관 교섭 당시에 그렇듯이 개화파가 기댈 수 있는 상대는 일본뿐이었다는 상황적 요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케조에의 돌변한 태도를 경험하고도 다시 일본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음은 오히려 개화파의 지지기반이 그만큼 미약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일본의 대조선정책 역시 차관교섭 때와는 달라져서 개화파와 일본은 함께 정변을 모의하게 되었고 1884년 12월 4일(양력) 갑신정변이 발생한다.

갑신정변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인 14개조 정강은 비록 갑신정변 실패 후 기록한 것이어서 그 진위여부를 가리기 어려우며, 실제로 반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으나,²⁶⁾ 갑신정변의 지향이 아닌 김옥균의 사상적 지향을 살피고자 한다면 김옥균의 생각이 담겨있을 갑신정강을 살피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²⁷⁾

24) 인원 모집에 대한 내용은 『추안급국문』과 『갑신일록』, 참여 신분과 참여 동기에 대해서는 박은숙, 『갑신정변 연구』 제 3부 2장 참여층의 신분과 정변참여 동기를 참고할 것.

25) 박은숙, 『갑신정변..』, 100쪽.

26) 주진오, 2003, 「1884년 정변의 정치구조 개편구상」, 『역사와현실』 47 중 2-2. 정령반포의 사실여부 참조.

정당을 대표하는 제 1조에서는 대원군 송환을 통해 대외적으로 독립국가로서의 대의명분을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난다. 또한 조공허례 폐지 주장은 봉건적인 화이질서 체제 하에서의 조공체제를 타파하고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는 김옥균의 꾸준한 지향을 담아내고 있다. 조항 중 문벌 폐지를 내세운 2조와 불필요한 기구의 폐지를 내세운 14조는 갑신정변 이전에 이미 정부에서 논의되었던 것들이다. 정변과 정당의 구상이 완전히 새롭거나 개화파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었으며, 정변과 정당 역시 19세기 이래 지속된 개혁론의 흐름 속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정치개혁과 관련된 조항은 대표적으로는 13, 14조, 부수적으로는 2,4,5,7,10조를 들 수 있다. 국왕의 수족인 내시부를 혁파하고, 정부 관료와 왕실의 연결고리인 규장각을 혁파하며, 호조를 중심으로 재정을 일원화하여 왕실의 재정을 흡수하는 정책은 왕권의 축소와 연결된 부분이다. 왕권을 제한하고 대신과 참찬으로 하여금 정령을 결정하게 한 것은 입헌군주제에서의 권력운영과 비슷해 보이지만 왕을 상징적 존재로 놓고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는 방식은 오히려 일본의 명치유신 초기 태정관제²⁷⁾와 흡사하다. 의회나 헌법에 대한 구상은 아직 보이지 않으며, 민권

27) 갑신정변의 성격에 대해서는 평가가 갈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내정과 군사 개혁에 중점을 두고 부국강병, 자주독립, 인민평등권을 주장했던 매우 혁신적인 시도였다는 평가(이광린, 1973, 「갑신정변에 대한 일고찰」, 『개화당 연구』, 일조각)와 함께 전근대적 국가 체제를 근대국가체제로 전환하여 건설하려 했다는 평가(신용하, 1999, 「갑신정변의 전개」, 『한국사』 38, 국사편찬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철저하지는 않았지만 반봉건적, 부르주아적 개혁의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는 평가(김영숙, 1964, 「개화파의 정강에 대하여」, 『김옥균』,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역사비평사, 1990))가 있으며 개혁 구상은 관청 한 두개를 폐지하고 모든 재정을 호조에서 관할한다는 정도에 그쳤으며 부르주아적 개혁의 요소는 전혀 없다고 보는 입장(山邊建太郎, 1960, 「朝鮮改革運動と 金玉均」, 『歴史學研究』 247)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19세기 이후 서구 세력의 침투에 대한 대응 논리로 축적되어왔던 개혁론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갑신정변과 그 정당을 정변 주도세력인 개화파의 것으로만 이해해왔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상 박은숙, 『갑신정변...』, 249쪽 참고.

28) 일본에서는 1869년 실제의 집행기관인 각 성 위에 국가의사의 통일을 위해 각 성의 장관인 경의 합의와 별도로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태정관을 설치하였다. 1871년 폐정치현을 행할 때 각 성의 경들로 구성된 합의체인 우원 위에 대정을 통할하는 기관인 정원을 설치하여 이에 권력을 집중시켰다. 일본의 내각은 1873년 5월 태정관제가 개정되면서 등장하였고 천황보필과 행정집행 일치를 위하여 정원 안에 내각을 설치하고 모든 참의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면서 각 성의 경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이 때 참의는 내각의 의관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천황을 보필하는 동시에, 행정실무를 책임지지는 않지만 각 성을 나누어 관장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1881년부터 참의의 각 성 분장이 폐지되었고 마침내 1885년에 총리대신을 수반으로 각 성의 장관이 국무대신으로서 천황을 직접 보필하는 내각제로 변모하였다. 더불어 이토 히로부미를 중심으로 자유민권운동 측의 도전을 억제하면서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 마침내 1889년에 프러시아의 헌법을 모델로 흥정헌법으로서의 '대일본제국헌법' 즉 명치헌법을 제정하였다. 이때 외형적 틀은 내각 책임제 정치구조였으나 내각은 의회가 아니라 천황에게 책임을 지는, 소위 외견적 입헌제였다. 천황은 헌법에 의하여 군주권의 제한을 받지만 '군립하면서 통치하는' 존재였던 것이다. 이상 주진오, 앞의 글, 234-235쪽 참고.

에 대한 이해도 정강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2조에서 인민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 제도를 마련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개화파들이 愚民觀을 견지하였음을 고려한다면 2조의 방점은 문벌을 폐지하여 경쟁세력인 친청 사대부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쪽에 찍는 것이 맞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갑신정강에서 나타나는 김옥균의 정치 개혁의 지향점은 국내적 지지기반이 허약했던 개화파가 국왕을 앞세우고 실질적인 개혁정치를 수행하기 위해 권력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의 주장을 입헌군주제 혹은 내각책임제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²⁹⁾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갑신정강에서는 청으로부터의 독립과 반대파의 숙청, 개화정책 추진을 위한 정권 장악 등 기존의 김옥균의 사상적 지향이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강에 나타나는 개혁 방안은 기존 정부 혹은 실학사상과 상통하는 바가 많으며, 이를 개화파만의 새로운 개혁사상이라고 볼 단서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문명 개화론자 나름의 구상을 담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김옥균은 갑신정변을 통해 무조건적으로 대대적인 변혁을 추구했다기보다 현실적인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는 가운데 우선 정권의 획득을 목표로 하였으며 근대적 개혁을 부분적으로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갑신정변 이후 김옥균의 사상 변화

갑신정변 실패 후 김옥균은 일본을 향한 망명길에 오르는데 갑신정변이라는 대사건의 실패를 겪은 이후 김옥균의 사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배신과 청의 개입으로 인한 갑신정변의 실패를 겪으면서 김옥균의 대외 인식은 크게 변하였다. 김옥균 암살을 명받고 조선에서 온 자객 지운영을 규탄함과 동시에 고종에게 내정과 대외정책을 간한 『지운영사건규탄소』에서 김옥균은 여전히 청정부의 조선에 대한 간섭정책을 비난하고 있지만 가까이 있는 대국인 청나라와 조선은 순망치한의 관계로 서로 소원하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은 이미 쇠퇴하였다고 보고 무조건적으로 청을 몰아내고자 하는 대청인식

29) 주진오, 앞의 글, 241쪽.

에서, 갑신정변을 통해 여전히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청과의 공존을 도모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의 힘을 빌리면서도 자주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기존의 대일본인식은 일본 역시 크게 믿을만한 나라가 되지 못한다는 쪽으로 전환되었다. 즉 김옥균은 반청독립사상만이 부각되어 있던 기존의 대외인식에서 좀 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국제정세 인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³⁰⁾ 김옥균의 대외인식의 전환은 그의 사상의 전환으로 이어진다.

1886년 김옥균은 이홍장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그렇다면 각하께서 어찌 大清國 황제폐하를 천하의 盟主로 推尊하고 구미 각 大國으로 公論을 선포하여 그들과 連續으로 조선으로 中립국으로 세우고 萬全無危의 땅으로 만들고, 이어서 각하께서 노련한 수단으로 (조선과) 善隣友睦의 정을 다하여 광대뼈와 잇몸처럼 서로 의지하는 동맹(輔車之盟)을 굳게 맺으면서 東亞의 政略을 펼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이는 오로지 조선의 행운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귀국에도 得策이 될 것입니다.”라고 적고 있다. 조선이 그 독립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親日反淸 독립노선에서 벗어나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인 조선의 중립화를 그 방안으로 고려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³¹⁾

1894년 3월 김옥균이 이홍장과 면담을 위해 상해로 떠난 것은 이렇듯 변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조선의 자주독립과 아시아의 부흥을 도모하기 위한 결심에 따른 일이었다.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홍종우에게 살해당하며 구상을 펼칠 기회는 갖지 못하게 되었으나 김옥균은 죽음의 순간까지 조선의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사고하고 행동하였던 것이다.

5. 맺음말

김옥균의 생애 전반에 걸쳐 그의 사상은 여러 번의 전환을 겪는다. 어린 시절 충실한 사대부 유학자였던 그는 개항 이후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와 대

30) 권혁수, 2007, 「김옥균과 중국 - 對中國認識을 중심으로 -」, 『근대 한중관계사의 재조명』, 혜안, 224~225쪽.

31) 권혁수는 김옥균의 이러한 동아시아 정세인식이 발전하여 이후 한중일 3국의 화합과 협력을 통해 구미열강의 침략에 대항하고 아세아의 부흥을 도모하자는 三和主義사상을 발전하였다고 지적하나 삼화주의 사상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여 본문이 아닌 각주에 그 내용을 적는다.

내적으로 봉건질서의 모순이 심화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동도서기론에 입각한 개혁론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1880년대 초반 3차례에 걸친 도일과 임오군란을 겪은 후에는, 문명관과 대청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개화사상을 형성하였다. 친청 사대파가 힘의 상징으로서 청을 중심에 두는 세계인식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의 세계인식은 이로부터 크게 달라져 있었다. 개화사상은 문명의 기준을 더 이상 유교문명이 아닌 서구문명에 두었으며, 유교문명의 기본적인 국제질서인 화이체제로부터 탈피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동도서기론과는 사상적으로 단절된 것이었다. 김옥균이 개화사상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자주적인 국권을 유지하여 근대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친청 사대파의 공작으로 인해 대내적 근대화 정책에 방해를 받게 되자, 친청 사대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 근대화 정책을 실행할 수 없으며 결국 주권을 잃고 청의 속국이 되고 말리라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에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19세기 이래로 진행되어 온 개혁론을 둘러싼 흐름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으며 근대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하고자 했던 개화파의 사상이 행동적 실천으로 드러난 것이었다.

김옥균의 사상은 갑신정변 이후 한 차례의 전환을 더 겪게 된다. 청을 멸망 직전의 쇠퇴한 국가로, 일본을 협력할 수 있는 국가로 보았던 기존의 인식이 갑신정변의 실패로 인하여 달라진 것이었다. 김옥균은 청일 양국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청과 교류하여 조선을 중립화하여 조선의 국권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홍장과의 면담을 위해 상해를 찾은 것은 그의 사상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었으나, 목적인 바를 이루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김옥균의 사상은 정세의 변화와 그의 세상 인식, 그가 처한 현실 상황의 변화라는 다양한 요인과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변화해 온 것이었다. 갑신정변과 김옥균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지나치게 갑신정변에만 의거하여 김옥균을 해석해서는 안 될 일이다. 갑신정변이 19세기 개혁론의 흐름 속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김옥균의 갑신정변 전후 사상적 변화의 흐름이 어떠한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왜곡된 이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김옥균의 생애에 걸친 사상적 흐름을 다루고자 한 이유는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金玉均全集』(韓國學文獻研究所 영인, 아세아문화사, 1979)
- 『甲申日錄』(趙一文 譯註, 건국대학교출판부, 1977)
- 『갑신정변회고록』(조일문, 신복룡 편역, 건국대학교출판부, 2006)
- 박은숙 역,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중 갑신정변 관련자 심문·진술 기록』, 아세아문화사, 2009
- 권혁수, 2007, 「근대조선의 아시아협력 구상에 관한 역사적 고찰 - 김옥균의 三和主義 사상을 중심으로 -」, 『근대 한중관계사의 재조명』, 혜안
- 권혁수, 2007, 「김옥균과 중국 - 對中國認識을 중심으로 -」, 『근대 한중관계사의 재조명』, 혜안
- 권혁수, 2007, 「김옥균 암살사건과 청정부의 관계에 대하여」, 『근대 한중관계사의 재조명』, 혜안
- 김도형, 2004, 「개항 전후 실학의 변용과 근대개혁론」, 『동방학지』 124
- 金信在, 1995, 「金玉均의 政體改革論」, 『慶州史學』 14
- 김윤희, 2008, 「갑신정변 전후 "개화" 개념의 내포와 표상」, 『개념과 소통』 1-2
- 박은숙, 2005, 『갑신정변 연구』, 역사비평사
- 박은숙, 2011, 『김옥균, 역사의 혁명가 시대의 이단아』, 너머박스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1964, 『김옥균』, (역사비평사, 1990)
- 신용하, 1985, 「金玉均의 開化思想」, 『동방학지』 46·47·48
- 유바다, 2010, 「1883년 김옥균 차관교섭의 의미와 한계」, 『한국근현대사연구』54
- 이광린, 1973, 『개화당연구』, 일조각
- 鄭英熹, 1999, 「김옥균의 개혁사상 연구」, 『實學思想研究』 12
- 주진오, 2003, 「1884년 정변의 정치구조 개편구상」, 『역사와현실』 47
- 한철호, 2004, 「개화·일제강점기 김옥균에 대한 역사적 평가」, 『역사와 담론』 38
- 한철호, 2010, 「개화파연구의 실증적 초석 쌓기와 그 의의」, 『한국사연구』 148
- 허동현, 2004, 「개화기 인물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국민국가 만들기의 주역 김옥균·박영효·어윤중을 중심으로-」, 『韓國人物史研究』1

2013년 2학기 각 분과별 동정

1. 고대사 분과 (분과장 : 박소미)

- 1) 고대사 전공 : 정상민(박사 8), 신가영(박사 8), 최경선(박사 7), 안정준(박사 5), 장병진(박사 3), 박동명(석사 5), 김영우(석사 2), 박소미(석사 2), 남혜민(석사 1)
- 2) 세미나
 - 중국 正史의 고구려·백제·신라전 강독(2013-2학기~현재)
 - 2013년도 동계 세미나 주제 : 『삼국지』 동이전 강독(부여전, 고구려전 진행)
- 3) 분과동향
 - 신가영(박사 8), 2013 「대가야 멸망과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 -‘加耶叛’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72, 한국고대사학회에 게재.
 - 최경선(박사 7), 2014년 2월 28일 한국 고대 문자자료 연구모임 제9회 월례 발표회에서 「부여 지역 출토 印刻瓦와 기타 명문자료」라는 주제로 발표.
 - 안정준(박사 5), 2013 「『李他仁墓誌銘』에 나타난 李他仁의 生涯와 族源 - 高句麗에서 활동했던 柵城지역 靺鞨人의 사례 -」 『목간과 문자』 11, 한국목간학회에 게재.
 - 안정준(박사 5), 2014년 2월 6일 한국 고대 문자자료 연구모임 동계워크숍에서 「백제 왕손 부여용·태비부여씨 묘지명의 역주와 기초적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

2. 중세사 1 분과 (분과장 : 최민규)

- 1) 회원 : 최민규 (석사3), 이상민 (석사1)
- 2) 세미나
 - 조선왕조실록강독 (2014년 2월 ~ 현재)

: 시간 및 장소 - 매달 첫번째, 네번째 목요일 오후 3시 ~ 오후 6시 00분, 도서관 세미나실

3) 분과 동향

- 최봉준, 박사학위취득, 「14세기 고려 성리학자의 역사인식과 문명론」

3. 중세사 2 분과 (분과장 : 김태홍)

1) 조선후기 전공

* 박사수료 : 김미성, 우혜숙, 이석원, 윤석호

* 석사과정 : 홍해뜸(석사수료), 최지예, 강슬기, 김태홍, 이재빈, 정진혁, 김미승

2) 세미나

① 반계수록 강독(2013년 1월 ~ 현재)

시간 및 장소 : 학기중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 오후 9시, 외솔관 627-1

② 2013학년도 겨울방학 기획세미나 : 조선후기 봉건제 논의(2013년 12월 ~ 2014년 2월)

시간 및 장소 : 방학중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천호동조선후기 연구실

3) 졸업생/신입생

- 졸업생 : 강유현(석사졸업)

- 신입생 : 정진혁(석사입학), 김미승(석사입학)

4. 근대사 분과 (분과장 : 진성제)

1) 근대사 전공

* 박사수료 : 문백란 , 윤정애 , 이애숙 , 이재운 , 나가바야시 히로카즈 , 안대희 , 홍동현 , 남정원 , 주운화 , 김재은 , 권기하 , 이현희 , 고태우

* 박사과정 : 신호승 , 정경민 , 이화정 , 노상균

* 석사과정 : 조한숙 , 권일용 , 김일주 , 이선애 , 정다영 , 진성제 , 정용경 , 가와나 유우코 , 마리나 키릴로바 , 김나라 , 기타자와 아이 , 박윤정 , 정예

지, 이정운

2) 세미나

- ① 한국근현대사 세미나 (2013 년 9 월 - 2014 년 2 월) - 주제 : 서구 근대 사회 사상의 흐름
- ② 황성신문 세미나 (2013 년 9 월 -) - 주제 : 황성신문 강독
- ③ 근대사 세미나 (2013 년 12 월 -) - 주제 : 연구서적 읽기

3) 졸업생 / 신입생

졸업생 : 이연주 (석사졸업)

신입생 : 노상균 (박사입학), 이정운 (석사입학)

4) 학술활동

* 논문 투고

- 신효승, "정유재란 초기 조선 수군의 작전 수립과정과 활동" , [역사와 경계] 88호. 2013. 09

* 발표

- 고태우(박사수료) : 제 56회 역사학대회 한국역사연구회 발표 - 공존과 배려 : 한국 역사속의 기억과 경험, "재해를 둘러싼 식민권력과 조선민중의 공존과 균열" 2013. 10. 26
- 노상균 (박1)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제1회 조선학 국내, 해외 석학 초빙 강좌 발표, "한말 일본 유학생들의 "자유주의" 인식과 변용" 2014. 01. 23
- 권기하, 고태우(박사수료)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제 1 회 조선학 국내 , 해외 석학 초빙 강좌 토론 2014.01.
- 신효승(통합4), 정경민(박3), 이화정(박3) : Yonsei Univ. & UCLA Graduate Workshop 발표
신효승, "U.S.Gunboat Diplomacy in 1871 with Chosun Dynasty and its Limited"
이화정, "Foundation and Reorganization of Chosun Daily Newspaper in early 1920's"
정경민, "The Dispatch of the Minister Plenipotentiary of Chosun to the United States and Qing Response"

5. 현대사 분과 (분과장 : 정다혜)

- 1) 현대사 전공: 장미현, 김아람, 이홍석, 광경상, 홍정완, 이세영(박사수료)
김은정(박1), 김대현(박1)
김세림(석6), 이준희(석5), 정다혜(석4), 김호준(석4), 박은영(석1)
- 2) 논문 : 김소남, 「1960~80년대 원주지역 협동조합운동 연구」, 2014. 2 박사학
위 논문
- 3) 세미나: 한국근현대사 세미나(2013년 9월 - 2014년 2월)
- 주제 : 서구 근대 사회 사상의 흐름
- 4) 졸업생/신입생
이봉규(박사입학), 김지훈(석사입학), 김영명(석사 입학)
- 5) 학술활동
- 김아람(박사수료), '1960년대 고아(부랑아)의 개척단 활동과 경험', 2013 한국
구술사학회 하계학술대회 "한국 근현대사 연구와 구술채록" 발표
- 김아람(박사수료), '바다를 메운 난민은 어디로 - 1960년대 전반 정착사업',
2013년 제56회 역사학대회 발표

연세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한국사 학우회 회칙

제정 : 2010년 9월 14일

1차 개정 : 2011년 1월 31일

2차 개정 : 2012년 2월 29일

3차 개정 : 2012년 8월 30일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연세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한국사 학우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서 한국사를 전공하는 원우의 자율 조직으로서 학술교류 및 친목을 돕고, 대내외의 필요한 활동 및 행사를 주관,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운영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1.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서 한국사를 전공하는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재학생을 운영회원으로 한다.
2.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서 한국사를 전공하는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휴학생을 일반회원으로 한다.
3. 일반회원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운영회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본회의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본회와 회원의 자치적 활동을 방해하는 일

체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저항하고 본회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본회의 목적과 제반활동이 개인의 의사에 반할 경우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 (탈퇴를 희망할 경우에는 회장 및 운영위원에게 의사를 표명한다).

4. 본회의 운영회원은 회장 선출에 있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5. 본회의 운영회원은 운영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6. 본회의 운영회원은 총회 및 그 밖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7. 본회의 운영회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8.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5조 (구성)

본회는 제2조(목적)를 달성하고, 제반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양한 국(부)을 둘 수 있다. 국(부)의 명칭 및 수, 각 국(부)별 위상은 당 회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 (교류 및 사업)

본회의 발전을 위해 타 조직 및 사회 단체와 교류할 수 있다.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7조 (지위)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회 전체 회원을 대표하여 정책을 입안, 결정하는 최고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8조 (구성)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인

2. 세부전공별 대표 : 선사/고대사, 중세사1(고려), 중세사2(조선), 근대사, 현대사 각 1인. 단, 세부전공별 운영회원이 2인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을 공식으로 둘 수 있다.

3. 회계담당 : 운영위원 중 1인

제9조 (운영위원의 자격)

1. 회장의 자격 : 본회의 운영회원으로서 원우들 간에 신망이 있고 교수진과 원우들 사이의 의견 교환 및 업무 협조를 이끌 수 있는 자(회장은 세부전공대표를 겸임할 수 있다. 단, 회계는 겸임할 수 없다).
2. 세부전공대표의 자격 : 본회의 운영회원으로 각 세부전공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선임된 자.

제10조 (회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다음 회기 회장의 선출시까지 한 학기로 하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 (1)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회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남은 임기 동안의 직무를 대행한다.
2. 모든 운영위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하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제11조 (회장 및 운영위원의 선임)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 후보자는 운영회원의 추천과 1인 이상의 제청으로 선정한다. 복수의 후보자가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총회 참석인원 표결로 다수표를 획득한 자로 선출하고, 단수의 후보자가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참석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할 때 선출되는 것으로 한다.
3. 회계담당은 운영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하여, 운영위원회 내에서 1인을 선출한다.

제12조 (업무와 권한)

1. 회장
 - (1) 회장은 본회 전체를 대표하여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를 소집 및 주재한다.

- (2) 회장은 대외적인 활동에 있어 본회의 대표권을 갖는다.
- (3) 회장은 본회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회원을 관리하며, 본회의 제반 사업 및 활동을 회원들에게 공지, 홍보한다.
- 2. 운영위원
 - (1) 각 세부전공을 대표하여 전공별 업무를 총괄하고, 전공별 모임을 소집 및 주관한다.
 - (2) 운영위원은 회장을 보좌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3. 회계 담당은 본회의 수입 및 지출을 담당·관리하고, 정기 총회에서 이를 결산 보고한다.
- 4. 운영위원은 본회 내의 특별기구(위원회) 신설을 요구할 수 있다.
- 5. 운영위원은 이밖에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특정 사업 집행 요구권, 회칙 개정 발의권을 가진다.
- 6. 운영위원은 본회 회원에게 모든 업무 및 결의사항을 보고하고 공개할 의무를 가진다.
- 7. 운영위원은 임기 중 모든 활동을 기록·보관할 의무를 가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의 및 의결)

- 1. 운영위원회의 : 회장의 주재 하에 운영위원을 소집하여 총회의 개최 및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 2. 운영위원회의에서 중요 안건을 심의에 부칠 수 있으며 안건의 채택 여부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투표 결과 동수일 경우 회장의 판단에 일임한다.
- 3.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해당 안건에 대해 운영회원 전체의 투표를 실시하며, 투표 참가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투표 방식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제 3 장 총회

제14조 (총회)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1. 정기총회 : 매학기 직전(2월, 8월)에 개최하며, 본회 사업과 운영위원 조직

보고 및 재정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 : 운영회원 1/1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의결 : 해당 안건에 대해 참석 운영회원의 투표를 실시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총회는 운영회원의 1/3 이상이 참석시 성립한다.

제 4 장 재정

제15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집행한다.
 - (1) 회비 : 운영회원은 회기(한 학기)에 한 번 이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며, 사안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 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 (2) 기타 수입 : 회원 및 비회원의 찬조금, 학교 지원금 등 회비 이외의 수입을 말한다.
2. 회원의 탈퇴 및 제명시 회비를 환불할 수 없다.

제16조 (회계 기간)

본회의 회계 기간은 회장의 임기기간 한 학기로 한다.

제17조 (결산 보고)

1. 정기 총회시 회계 담당이 회계 기간 내 재정을 결산 보고한다.
2. 운영위원회는 결산 보고 내용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제 5 장 회칙 개정

제18조 (발의)

본 회칙에 대한 개정 발의는 다음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운영회원 1/10 이상의 발의.
2. 운영위원의 발의.

제19조 (공고)

발의시 회장은 이를 3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제20조 (의결)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에서 제14조에 따라 의결하고 확정한다.

제21조 (공포)

확정된 회칙 개정안은 회장이 3일 이내에 공포한다.

제22조 (효력)

확정된 회칙 개정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준용회칙)

차후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1. 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하여 의결에 부친다.
2. 통상시, 민주적 관례에 준하여 운영 및 집행한다.
3. 조항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시 운영위원회에서 제13조에 따라 결정한다.

한국사 학우회 운영회원 명부

(2014.2. 현재, 전공시대순)

이름	전공시대	과정
최경선	고대사	박사수료
장병진	고대사	박사수료
박동명	고대사	석사과정
박소미	고대사	석사과정
남혜민	고대사	석사과정
김선민	중세사1	석사과정
최민규	중세사1	석사과정
이상민	중세사1	석사과정
강슬기	중세사2	석사과정
김태홍	중세사2	석사과정
이재빈	중세사2	석사과정
고태우	근대사	박사과정
신효승	근대사	통합과정
정경민	근대사	박사과정
이화정	근대사	박사과정
노상균	근대사	박사과정
권일용	근대사	석사과정
정다영	근대사	석사과정
진성제	근대사	석사과정
정용경	근대사	석사과정
유우코	근대사	석사과정
마리나	근대사	석사과정
김나라	근대사	석사과정
박윤정	근대사	석사과정
정예지	근대사	석사과정
김효성	현대사	석사과정
이준희	현대사	석사과정
정다혜	현대사	석사과정
박은영	현대사	석사과정

* 운영회원 : 석·박사 재학생(논문학기 포함) 및 회비 납부자 (회칙 제3조 1항에 의거)

한국사 학우회 운영위원 명부(2014년 2월 기준)

(전공시대순)

이름	전공시대	과정	직책
김호준	현대사	석사과정	학우회장
박소미	고대사	석사과정	고대사 전공대표
최민규	중세사 1	석사과정	중세사 1 전공대표
김태홍	중세사 2	석사과정	중세사 2 전공대표
진성제	근대사	석사과정	근대사 전공대표
정다혜	현대사	석사과정	현대사 전공대표
노상균	근대사	박사과정	학술부장
김태홍	현대사	석사과정	회계
김대현	현대사		편집부장

2014.3. 7호, 학우회보

발행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한국사 학우회

발행일 2014년 3월 17일

편집인 학우회보 편집위원회

* 본 회보에 실린 글의
무단 전재 및 배포, 인용을 금합니다.

